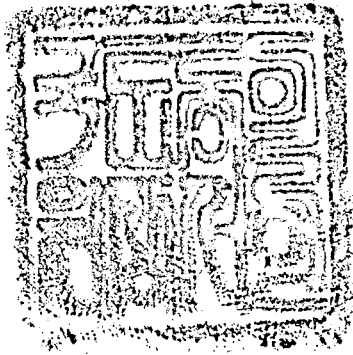


北韓의 統一政策과  
우리의 對應方向



1989

國 土 統 一 院



## 冊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政策調査研究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特殊課題 研究結果입니다.

本 研究은 7.7宣言이후 政府의 적극적인 北方政策 추진과 共産圈開放에 따른 北韓의 統一戰略·戰術의 변화 및 그 對應策 探索을 主內容으로 하고 있습니다.

關聯研究 및 政策樹立時 참고자료로 적극 活用되어 지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89. 12.

調 查 研 究 室





北韓統一政策의 基調 : 主體思想을 중심으로  
(執筆者 : 李容弼)

北韓의 祖國統一政策과 論理 :  
南朝鮮革命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執筆者 : 金甲喆)

北韓의 統一政策과 統一論議 開放의 得과 失  
(執筆者 : 李華洙)

韓國의 北方政策과 北韓의 反應 :  
「7·7特別宣言」을 중심으로  
(執筆者 : 鄭千九)

統一安保論理의 混亂克服을 위한 理念教育  
(執筆者 : 鄭世九)



# 北韓統一政策의 基調

— 主體思想을 中心으로 —

1989

研究責任者  
李 容 弼  
(서울大)

國 土 統 一 院



## 要 約 文

北韓의 統一政策은 一貫해서 武力에 의한 共產化 統一이나 아니면 僞裝 平和에 의한 共產化 統一을 追求해 왔다. 특히 1960年代 後半부터 우리의 國力이 伸張된 후, 北韓은 南韓의 體制崩壞을 통한 共產化를 前提로 해서 統一政策을 戰術的 手段으로 活用해 왔다. 北韓이 統一政策을 하나의 戰術的 手段으로 使用하는 限, 眞正한 平和統一에의 摸索은 매우 어려운 것이 라고 하겠다. 우리는 北韓의 統一政策에는 언제나 名分論的 原則을 내세우므로써 統一政策에 깔려 있는 戰術的 底意를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金日成이 주장하고 있는 主體思想이란 하나의 哲學으로써 體系화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北韓이 놓여 있는 內外情勢의 與件 아래서 實用的 必要性에서 제시되었는데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이를 그들의 革命思想, 戰略 및 戰術 그리고 統一政策의 政策指導指針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金日成의 主體思想이 思想的 體系로서 妥當性이 있느냐의 與否와는 관계없이 그것이 北韓의 實際的인 政策方向의 名分的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主體思想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統一政策도 그 基調를 이루고 있는 主體思想과 관련시켜 高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北韓共產主義者들에 의해 가장 獨創的이며 高次元的인 思想體系라고 선전되고 있는 主體思想은 그 哲學的 原理로서 人間에 대한 命題와 革命에 대한 命題, 그리고 自主路線에 대한 命題로 構成되고 있다. 이 哲學的 原理에서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그리고 國防에서의 自衛를 이끌어 내고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이 이와같은 主體에 관한 命題들을 제시하게 된 基本底

意는 革命을 영구적으로 推進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또 이것을 바탕으로 金日成의 獨裁와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韓半島에서 革命을 實踐하려는 主體思想의 基調는 北韓의 統一政策에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즉, 主體思想을 具現하고 있는 自主的 立場은 민족문제 해결의 보편적 원칙인 民族自決의 原則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서 一例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이 그토록 統一이란 民族의 自主性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武力에 의한 共產化 革命을 明確하게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金日成은 革命發展의 客觀적 要求를 현실화할 수 있는 결정적 要件은 바로 主權國家形態의 혁명근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金日成은 南韓의 共產化를 그들의 統一政策의 目的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北韓體制의 統一政策은 南韓의 體制顛覆을 迂廻的으로 유도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다.

民族分斷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北韓共產主義者들은, 統一을 外勢를 배제하고 民主主義的 基초 위에서 平和的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南北韓問題를 民族의 自由意思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平和統一은 統一問題를 國土와 民族의 결합이나 民族主體의 自由意思에 의한 社會制度의 선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共產化革命을 통해서 統一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러한 그들의 意思는 金日成의 소위 나라의 統一과 전국혁명의 승리를 위한 革命力量編成論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金日成은 革命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革命力量 즉 北朝鮮의 革命力量, 南朝鮮의 革命力量 그리고 國際的 革命力量이 강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名分上 主體思想에서 自主성과 創造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其實은 金日成 個人的 숭배를 통한 統治와 이에 의거한 政策의 指導原理라고 美化하고 있다. 主體思想에서 提示된 自主성과 創造성은 南韓에서의 革命力量을 強化하고 또한 共產化를 촉진하기 위한 統一政策의 目標와도 연계된다. 즉 自主성과 創造성은 그들의 革命論理에 따라서 “先 南韓革命, 後 共產化統一”의 路線追求와 연결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北韓은 統一政策을 一貫해서 民族的 自主性이라는 名分論的 原則에서 追求해 왔다. 理論上 平和的 統一을 언급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南韓體制의 붕괴를 통한 共產化統一을 부단히 추진해 왔다.

北韓은 統一이 民族的 自主性에 의거해서 達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主體思想을 통해서 革命과 建設 그리고 이를 南韓에 까지 확대시키려는 統一政策을 일관되게 共產化統一의 戰術的 手段으로 活用해 온 것이다. 北韓이 名分論上 그들의 統一政策을 主體思想에 의거해서 追求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南韓의 共產化 統一을 目標로 삼고 있는 限, 眞正한 意味에서의 南北統一은 앞당길 수 없다. 南北統一은 名分論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하기 보다는 現實主義的 및 漸進主義的 接近方法에 의해서 追求될 때 그 實現이 可能하게 된다.

특히 우리 政府는 「7·7宣言」, 「제44주년 8·15경축사」 그리고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통해서, 남과 북이 40여년 동안 敵對와 對決 속의 分斷狀態를 종식시키고 民族共同體의 회복과 발전을 통한 統一의 接近方式에 대해서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도 拒否的 反應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北韓의 統一政策이 從來의 戰術的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北韓의 統一政策을 면밀하게 주의하면서 우리의 對應策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目 次

1. 머릿말 .....	11
2. 革命思想으로서의 主體思想 .....	12
3. 主體思想에 기초한 統一政策 .....	20
4. 革命力量에 기초한 統一政策 .....	24
5. 統一政策의 “自主性”과 革命戰略 .....	28
6. 맺음말 .....	32



## 1. 머릿말

北韓의 統一政策은 一貫해서 武力에 의한 共產化 統一이나 아니면 僞裝 平和에 의한 共產化 統一을 追求해 왔다. 특히 1960年代 後半부터 우리의 國力이 伸張된 후, 北韓은 南韓의 體制崩壞을 통한 共產化를 前提로 해서 統一政策을 戰術的 手段으로 活用해 왔다. 北韓이 統一政策을 하나의 戰術的 手段으로 使用하는 限, 眞正한 平和統一에의 摸索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北韓의 統一政策에는 언제나 名分論的 原則을 내세우므로써 統一政策에 깔려 있는 戰術的 底意를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金日成이 주장하고 있는 主體思想이란 하나의 哲學으로써 體系화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北韓이 놓여 있는 內外情勢의 與件 아래서 實用的 必要性에서 제시되었는데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이를 그들의 革命思想, 戰略 및 戰術 그리고 統一政策의 政策指導指針으로 수용하고 있다. 金日成의 主體思想이 思想的 體系로서 妥當성이 있느냐의 與否와는 관계없이 그것이 北韓의 實際的인 政策方向의 名分的 根據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北韓의 統一政策의 基調를 主體思想을 中心으로 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2. 革命思想으로서의 主體思想

金日成이 主體 또는 主體思想에 대해서 거론하게 된 것은 1950년대 중반에 비롯된 것이다. 金日成은 韓國動亂이 終結된 후에 對內的으로는 그의 絶代權力構造를 確固하게 構築하려던 狀況과 對外的으로는 中·蘇間의 理念紛爭의 渦中에서 適應하려던 狀況에서 소위 主體問題를 提起하게 되었다. 金日成은 1955년 12월 28일 勞動黨宣傳煽動일군 앞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는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主體라는 用語를 사용했다. 이러한 主體의 言明은 그 후 改定된 「朝鮮勞動黨規約」(1972년)과 새로 改定된 「社會主義黨法」(1972년)에도 明文으로 規定되어 있다.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조선노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 ……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 지적 통일 단결을 계승 강화한다.<sup>1)</sup>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sup>2)</sup>

이렇게 볼 때 北韓의 共產主義體制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 기초를 두면서 소위 主體思想을 統治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다고 하겠다.

金日成이 主張하고 있는 主體思想이란 하나의 哲學으로서 體系化된 것이 라고 하기보다는 北韓이 놓여져 있는 內外情勢의 與件 아래서 實用主義의 必要性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다. 물론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이러한 主體思想

1) 「北韓總覽」(서울: 北韓研究所, 1983), P. 1742.

2) 上揭書, P. 1751.

이 獨創的 이데올로기이며 또한 北韓共產主義革命思想 戰略 및 戰術의 土臺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 그리고 毛澤東의 思想보다도 더 高次元的인 思想體系라고 強辯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sup>3)</sup>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哲學的 原理란 단순히 사람이 모든 것의 主人이라는 것과 사람은 現實世界를 自己의 要求에 맞게 改造하고 支配하는 唯一한 存在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연을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sup>4)</sup>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單純한 命題는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문제, 사람과 주위세계의 상호관계 문제에 심오한 과학적 해명을 주고 있으며 모든 것을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풀어나가는 혁명과 새로운 지도원리, 혁명적 세계관의 근본원리를 밝혀주고 있다”<sup>5)</sup>고 擴大解釋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主要한 命題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① 人間에 대한 命題

-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sup>6)</sup>
- 사람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sup>7)</sup>
- 모든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sup>8)</sup>
-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다.<sup>9)</sup>

3) 「주체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적 원리」(東京：사회과학출판사, 1977). P.6.

4) 上揭書, P. 6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東京：사회과학출판사, 1975), P. 38

6) 「주체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적 원리」, P. 6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P. 38

8) 上揭書, P. 61.

9) 上揭書, 同面.

○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존재다.<sup>10)</sup>

② 革命에 대한 命題

○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sup>11)</sup>

○ 건설과 혁명을 추진하는 힘은 인민대중에게 있다.<sup>12)</sup>

○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sup>13)</sup>

○ 역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다.<sup>14)</sup>

③ 自主路線에 대한 命題

○ 모든 당은 완전히 자주적이고 평등하다.<sup>15)</sup>

○ 모든 당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 아래서 혁명투쟁한다.<sup>16)</sup>

○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조선혁명을 수행하는 것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이다.<sup>17)</sup>

위에서 열거한 命題들간에는 아무런 論理的 連繫도 없으며 다만 人間中心的인 命題들을 제시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脈絡을 維持하면서 主體思想이 獨特한 體系인 것 같이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마르크스·레닌主義보다 더 創造的인 것이라고 강조되고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이 以上과 같은 主體에 관한 命題들을 提示하게 된 基本底意는 革命을 永久的으로 推進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 이것을 바탕으로

---

10) 上揭書, P. 50

11) 上揭書, P. 72

12) 上揭書, 同面

13) 上揭書, P. 98.

14) 「金日成主義原理」(北韓文獻資料-1), P. 15.

15) 上揭書, P. 34.

16) 上揭書, 同面.

17) 上揭書, 同面.

로 政策指導原理로 삼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그들은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지도상이며, 공화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sup>18)</sup>이라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와 국제혁명운동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나아가는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입장이다.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며 자기위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입장이다.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남의 힘에 의존하여 살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 가며 무슨 일이든지 자기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기 나라 혁명에 이롭게 처리해나가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sup>19)</sup>

따라서 革命과 建設은 永久的으로 推進하려는 政策指導原理는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 등으로 表現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思想에서의 主體와 政治에서의 自主를 中心으로해서 主體思想의 革命論的 側面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 1.) 思想에서의 主體

金日成은 主體思想을 革命과 建設의 모든 分野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思想에서의 主體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정하는 것은 사상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사

18) “주체사상”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057.

19) 上揭書, PP. 1056-1057.

회주의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하기 위하여서는 근로 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혁명 투쟁과 건설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는 문제, 다시 말하여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sup>20)</sup>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思想에서의 主體問題는 1955년 12월 金日成이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創造的 適用이라는 名分아래서 소련式이나 中共式이 아닌 “朝鮮式”을 주장함으로써 公式的으로 擧論되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의 主張에 의하면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며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다. 그러므로 주체를 철저히 세워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사상관점, 사고방식부터 세워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남에게 얽매어 있고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젖어 있는 조건에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생각할 수 없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성과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보도 된다”<sup>21)</sup>는 것이다.

이러한 論調에 의거해서 思想에서 主體를 세운다는 것은 모든 思想事業을 자기 나라 革命의 利益에 복종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하나는 매개 나라에서 사상사업의 주체가 자기 나라 혁명이라는 사실이다. 자기 나라 혁명을 통해서 사상사업이 진행될 때 그것은 주체를 잃게 되며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지 못하고 명확한 목적이 없이 우왕좌왕하게 된다. …… 오직 사상사업을 자기 나라 혁명의 이익에 철저히 복종시켜 진행할 때에만 주체를 잃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2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P. 141.

21) 上揭書, PP. 141-142.



수 있으며 자기 사명을 다 할 수 있다.<sup>22)</sup>

그래서 思想事業에서 事大主義와 教條主義는 자기 나라 革命과 동떨어져 進行될 때, 즉 主體가 서 있지 않을 때 나타나며 革命事業에 害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北韓에서 事大主義者들과 教條主義者들의 害毒은 이 事實을 明白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北韓共產主義者들에 의하면, 지난날 黨事業分野에 들어 앉았던 事大主義者들과 教條主義者들은 主體를 잃어버린 결과 黨의 政策과 革命傳統을 研究하고 宣傳한 것이 아니라 다른 黨의 政策과 다른 나라 黨과 人民의 鬭爭歷史와 業績만을 내세우고 선전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事大主義者들과 教條主義者들은 人民들의 民族虛無主義를 고취하고 다른 한편 民族的 自負心과 自主意識을 좀 먹고 創發性을 마비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主張은 事大主義者들이나 教條主義者들을 排擊한다고 하기 보다는 金日成의 革命思想 또는 唯一思想을 黨의 指導原理로서 철저하게 밀고 나가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이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 수령의 革命思想으로 모든 黨員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고 수령과 黨중앙의 테두리에 묶어 세워 首領의 唯一的 領導 밑에 革命事業을 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3)</sup>

## 2.) 政治에서의 自主

政治에서 自主는 1957년에 開催된 勞動黨 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大國主義에 依據한 內政干涉을 벗어나서 黨의 獨自의 路線을 追求하기 위해서 學論되었다. 그들의 定義에 의하면 政治에서 自主性의 原則은 主體思想을

---

22) 上揭書, P. 142.

23) 上揭書, P. 145.

政治分野에 구현하기 위한 指導原則이라고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思想이란 사람이 自主性을 가진 社會的 存在라는 것과 사람의 行動樣式이 思想意識에 의해서 規定된다는 素朴한 前提위에서 주장되고 있다.

사람은 자주적으로 사상의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외부 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것이다.<sup>24)</sup>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 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사람이 자연에 대해서 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자연을 개조하고 지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존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남의 노예가 된다면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며 가축처럼 취급된다<sup>25)</sup>

사람의 자주성을 짓누르는 질곡 가운데서 주되는 것은 사회정치적 질곡이다. 사람이 사회정치적으로 남에게 예속되고 자유롭지 못하면 자연에 대한 관계에서도 자주성이 억눌리게 되고 노동활동에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주성, 특히 정치적 자주성이 육체적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된다. 사람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기 위해서는 자주성을 짓밟는 사회적 질곡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된다.<sup>26)</sup>

이와 같은 個人의 自主性의 強調은 어떠한 論理的 媒介도 없이 政治的 또는 民族的 自主性으로 飛躍되고 있다. 즉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民族이란 平等하며 自己運命을 自身이 決定할 民族自決의 신성한 權利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 자결을 실현하여 자기 권리를 자기

24) 「주체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적 원리」, P. 7.

25) 上揭書, PP. 17-18.

26) 上揭書, P. 18.

손에 틀어쥐고 행사하여야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남의 정치적 입장을 고스란히 따르는 정권은 자기의 결심에 기초하여 자기 인민의 이익에 맞게 노선과 정책을 규정할 수 없고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지킬 수 없다. …… 정치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은 매개 나라의 당과 인민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sup>27)</sup>

한편 이러한 北韓共產主義者들의 自主性の 強調는 對外政策의 原則과도 관련되고 있다. 그래서 黨의 自主的인 對外政策은 모든 社會主義 나라들이 첫째로 帝國主義를 反對하며, 둘째로 植民地 民族解放運動과 國際勞動運動을 지지하며, 세째로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에로 계속 나아가며, 네째로 內政不干涉, 相互尊重, 平等과 互惠의 原則을 지키는 기초 위에서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政治에서의 自主性은 勞動階級의 黨과 國家의 政治活動에서 견지하여야 할 革命的 立場을 표현하며 “매개 나라 人民과 民族을 自己運命의 主人으로 만드는 중요한 담보를 밝혀주는 原則이며 路線이 된다”<sup>28)</sup>는 것이다.

---

2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P. 154.

28) 上揭書, P. 153.

### 3. 主體思想에 기초한 統一政策

韓半島에서 革命을 實踐하려는 主體思想의 基調는 北韓의 統一政策에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金日成은 分裂된 나라에서 革命의 課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오늘 우리 祖國의 分裂과 南朝鮮人民들이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미제침략군대의 남조선강점에 있으며 그의 침략정책에 있다”<sup>29)</sup> 이러한 관점에서 所謂金日成主義는 帝國主義 侵略에 의하여 國土가 分열된 나라의 全國革命 앞에는 나라를 統一하고 전국적으로 民族解放革命을 완수하며 계속하여 社會主義, 共產主義로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0)</sup> 다시 말해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分열된 나라에서의 全國革命의 當면과제는 나라의 統一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北韓의 統一政策은 理論上 主體思想에서도 “思想에서의 主體”와 “政治에서의 自主”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와 같은 思想에서의 主體와 政治에서의 自主는 革命의 戰術的 手段으로서의 統一政策에 그대로 投影되고 있다. 그것은 金日成의 다음과 같은 陳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 까지나 한 나라의 비극적 분열을 끝장내고 외래제국주의 침략자들로 부터 빼앗긴 자기의 영토와 인민을 도로 찾으려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 요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조국통일은 어디 까지나 조선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또

29) 統一革命黨中央委員會 宣傳部, 金日成主義原理, 1972, P. 216.

30) 上揭書, P. 217.

결코 달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sup>31)</sup> 北韓共產主義者들은 “통일문제해결에 있어서 자주적 입장은 民族의 運命의 主人은 그 民族 自身이며 民族의 運命을 개척하는 힘도 그 民族 自體에 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를 통일문제의 해결에 구현한 것이다.”<sup>32)</sup>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자주적 입장은 민족문제해결의 보편적 원칙인 民族自決의 원칙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이 그토록 統一이란 民族의 自主性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武力에 의한 共產化革命을 明確하게 역설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들은 表面的으로는 “조선의 統一問題해결에서의 기본방침은 自主的으로 民主主義的 原則에서 平和的 方法으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다”<sup>33)</sup>

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武力에 의한 一方的 통일이나 아니면 革命에 의한 體制의 破壞를 劃策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분열된 나라에서 주권국가 형태의 위력한 革命基地를 축성하는 것은 나라의 통일과 전국혁명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이고 先決的인 여건이다. 모든 社會革命이 자기의 책원지, 전략적 거점에 의거하는 것은 革命發展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勞動階級의 黨은 혁명근거지에 의거할 때 反革命과의 투쟁에서 主動을 장악하고 革命勝利를 확고히 담보할 수 있다.”<sup>34)</sup>고 강조하고 있다.

金日成은 분열된 나라에서는 무엇 보다도 먼저 反動統治를 전복한 지역에서 유리하게 조성될 정세를 이용하여 革命과 建設을 적극 추진시키는 동시에 그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함으로써 전국혁명승리의 길을 주동적

---

31) 上揭書, PP. 218-219.

32) 上揭書, P. 219.

33) 上揭書, P. 221.

34) 上揭書, P. 222.

으로 개척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革命發展의 객관적 요구를 현실화할 수 있는 결정적 여건은 바로 主權國家形態의 혁명근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金日成은 主權國家形態의 혁명근거지가 나라의 통일과 전국혁명수행에서 차지하는 革命的役割에 대해서 다음의 세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로, 革命基地는 全國 革命에 대한 統一的인 정치적 영도를 실현하는 근거지로 된다. 전국혁명의 基地에서는 革命의 수령과 당중앙이 全國革命의 승리를 보장하는 決定的 要因이다.

둘째로, 革命基地는 전국적 관도에서 反革命力量에 비한 혁명역량의 결정적 우세를 보장한다. 혁명기지에서는 노동계급이 國家主權에 의거해서 혁명과 건설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여 반혁명세력을 被動에 몰아 넣고 강점지역 인민들의 혁명역량을 고무충동한다.

셋째로, 革命基地는 強占된 지역의 혁명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전국적혁명의 기지는 제국주의 강점지역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信心을 줄 뿐만 아니라 위력한 물질정신적 수단들에 의거하여 이 지역의 혁명운동을 백방으로 지원하게 된다.

넷째로, 혁명기지는 제국주의 강점지역에서 혁명이 승리한 다음 그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전국적 범위에서의 社會主義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한다.<sup>35)</sup>

이상과 같은 김일성의 소위 主權國家形態의 革命根據地의 役割에 대한 強調는 南韓의 共產化 戰術을 明白히 보여 주었으며 또한 統一政策의 基本方向을 제시한 것이라고 理解할 수 있다.

金日成은 北韓의 主權國家形態가 革命根據地의 役割을 수행해야 되며 그

---

35) 上揭書, P. 223.

러한 主權國家形態는 主體思想에 의거해서 指導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金日成이 南韓의 共產化가 그들의 統一政策의 目的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北韓體制의 統一政策은 南韓의 體制顛覆을 迂回的으로 유도하는 데 力點을 두고 있다.

## 4. 革命力量에 기초한 統一政策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民族分斷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統一은 外勢를 배제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平和的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南北韓問題를 民族의 自由意思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平和統一은 統一問題를 國土와 民族의 결합이나 民族 主體의 自由意思에 의한 社會制度의 선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共產化革命을 통해서 統一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와같은 그들의 意圖는 金日成의 소위 나라의 통일과 전국혁명의 승리를 위한 革命力量編成論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金日成은 革命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革命力量 즉 北朝鮮의 革命力量, 南朝鮮의 革命力量 그리고 國際的 革命力量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金日成의 革命力量編成論은 “反革命을 결정적으로 압도할 強力한 혁명역량을 준비하며 전국 혁명승리의 內的 要因과 함께 外的 要因을 다같이 성숙시키는 독창적 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36)</sup>

### 1) 北韓의 革命力量強化

金日成은 그들의 革命의 主體的力量을 나라의 두 地域에서 조성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에 무엇 보다도 北韓에서의 革命力量의 強化를 주장하고 있다. 金日成은 노동당 창립 22주년 기념식에서 “우리黨은 항상 共產國 北半部에 있어서의 혁명과 건설을 조선혁명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北半部를 전국적인 민족적 民族解放偉業을 완수하기 위한 革命基地로 보고

36) 上揭書, P. 229.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金日成은 1967年 12月 第4次 內閣의 政綱演說에서 “南朝鮮解放과 祖國統一事業을 하루 바빠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혁명조직과 혁명가들의 혁명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며, 어떻게 적과 싸우느냐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북반부 인민이 革命的 大事變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7)</sup>

金日成은 北韓이 革命基地로서의 役割을 완수하게 될 때 그것이 南韓에서의 革命을 支援하게 되고 結果적으로 共產化統一이 실현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오늘 북조선은 전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책원지로 될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민주주의 발원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sup>38)</sup>고 말하는 것이다. 北韓共產主義者들에 의하면 “북반부 혁명기지가 전국혁명의 승리를 위한 책원리로 되는 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전조선인민의 승리의 한길로 곧바로 이끈 김일성이 있으며 그를 수반으로하는 혁명의 참모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자리잡고 있으며, 전국혁명에 관한 모순과 정책 전략전술적 문제들이 확고히 제기되고 그 실효를 위한 통일적인 정치적 영도가 실현되기 때문이다.”<sup>39)</sup>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金日成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결과는 비단 조국통일을 쟁취하는 결정적 역량으로 될뿐만 아니라 조국통일이 실현된 이후에 남반부 경제를 급격히 복구 발전시키는 것이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함에 있어서도 강력한 물질적 담보로 될 것이다”<sup>40)</sup>라고 강조하고 있다.

37) 北韓全書(서울·極東問題研究所), PP. 721-722.

38) 金日成革命思想論座(金日成放送大學講義錄(서울: 北韓研究所, 1977), P. 198.

39) 上揭書, P. 198.

40) 上揭書, P. 199.

## 2) 南韓의 革命力量強化

北韓共產主義者들은 金日成의 革命思想이 외래 침략자들의 강점으로 인한 분열된 나라에서의 혁명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金日成에 의하면 “남조선 혁명의 주인은 어디 지나 남조선 인민들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오직 자체의 결정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끝장내고 남 사혁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길을 열어 놓을 수 있으며 온갖 착취와 예측에서 벗어날 수 있다”<sup>41)</sup>는 것이다. 이와같은 金日成의 주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南韓 안에서의 革命力量強化라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들의 南韓 안에서의 革命力量強化를 위한 戰略은 남한 안에서 그들을 지지 또는 동조하는 세력을 부식시켜 南韓革命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所謂 人民民主主義路線의 骨幹을 이루고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에 의하면 金日成은 “우리나라에서 지역혁명인 남조선 혁명에 관한 이론을 전면적으로 밝히므로써 우리시대의 분열된 나라 지역혁명에서 제기되는 원칙문제들에서 과학적 해명을 주었다”<sup>42)</sup>는 것이다. 金日成이 밝힌 所謂 南朝鮮革命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자비들인 지주, 매관자본가 반동관리배들과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sup>43)</sup>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민족해방혁명노선의 목적은 남한 안에서 革命力量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反革命세력을 타도, 제거해야 한다는 戰術原則을 세우고 제1의 공격대상으로 美帝를, 그 다음으로 美帝에 추종하는 地主, 買辦資本家, 反動官僚를 들 수 있다.<sup>44)</sup>

41) 上揭書, P.203.

42) 上揭書, P. 205.

43) 上揭書, P. 206.

44) 北韓全書, P. 722.

### 3) 國際的 革命力量強化

北韓共產主義者들은 “모든 나라들에서의 革命鬭爭이 世界革命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民族的 鬭爭인 동시에 國際的인 鬭爭으로 되며 國際的革命力量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그 나라 革命勝利를 위한 보편적 요구로 된다”<sup>45)</sup>는 것이다. 그들은 金日成의 敎示에 따라서 主體的 革命力量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와같이 “국제혁명역량이 전국혁명의 국제적 지원역량이 된다고 전제하면서 국제혁명역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전투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분열된 나라 혁명의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며 나라의 통일과 전국혁명의 승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여건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들의 國際的 革命力量強化의 努力은 周邊情勢의 變化에 따라서 伸縮性있게 變化되어 왔으나, 그들의 對南革命戰略은 상대적으로 3大革命力量 중에서 國際的 革命力量을 뒤로 미루고 北韓의 革命力量과 南韓의 革命力量을 보다 강화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다.<sup>46)</sup>

---

45) 金日成主義原理, P. 230.

46) 北韓全書, P. 723.

## 5. 統一政策의 “自主性”과 革命戰略

金日成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기초”라고 주장하면서 주체사상은 사람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는 새로운 근본원리”라고 역설하고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黨과 인민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 요인도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어떤 나라도 주체적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條件에서는 外部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은 승리할 수 없다”<sup>47)</sup>고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思考하며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일반적 진리와 國際革命力量의 경험을 자기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적용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들의 自主性和 創造性的 강조는 金日成 個人에 대한 崇拜와 찬양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그들이 名分上 내세우고 있는 主體思想은 黨과 首領에 대한 無條件的 服從으로 비약된다. 즉,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문제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지도를 실현하는 것은 결국 노동계급의 당과 수령이며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 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노동계급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가장 선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다… 노동계급이 자기 자신을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을 해방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인민의 수령

---

47) 上揭書, PP. 66-67.

을 내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수령의 영도는 필수적 요구로, 그 위업완성의 결정적 담보로 된다.<sup>48)</sup>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名分上 主體思想에서 自主性和 創造性を 역설하고 있으나 其實은 金日成 個人的 崇拜를 통한 統治와 이에 의거한 政策의 指導原理라고 美化하고 있다. 主體思想에서 提示된 自由性和 創造성은 南韓에서의 革命力量을 強化하고 또한 共產化를 촉진하기 위한 統一政策의 目標와도 연계된다. 그래서 金日成 自身은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남조선혁명이 수행되는 조건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남조선혁명은 조국통일의 선결조건이다.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국통일은 남북조선 전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인민들을 민족적 계급적으로 해방하기 위한 反帝,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제기하며 조국통일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기치 밑에 민족해방혁명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수하는 것을 자기과업으로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이 統一政策의 原則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自主性和 創造성은 그들의 革命論理에 따라서 “先 南韓革命, 後 共產化統一”의 路線追求와도 연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그들의 路線에 입각한 統一政策은 南北韓간의 戰略的 折衝이나 평화적 사회제도의 융합에 의한 統一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sup>49)</sup> 그들은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問題”를 理論적으로 구별하고 “先 革命, 後 統一”路線을 당면 목표로 삼고 “南朝鮮革命”을 성취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北韓當局이 統一의 基本原則으로 自主, 平和 그리고 民族大團結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위에서 말한 “先 南韓革命 後 共產化 統一”의 路線과 밀

48) 사회과학 출판사편,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서울, 백산서당, 1989), pp. 188-189.

49) 北韓總覽, P. 1671.

접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측이 제시하고 있는 統一의 3原則 중에서 첫째로 自主의 原則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美帝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 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自主性의 原則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한의 외세의존정책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둘째로 平和의 原則은 “우리 조국의 통일이 외세의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사람들 자신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일관해서 주장하고 있다”...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제거한다면 조선의 통일문제는 전쟁없이 조선인민의 손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表面的으로는 平和的인 方法에 의한 統一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조선을 분열하고 조선민족을 영원히 노예화하려는 내외 원수들을 반대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暴力에 의한 統一의 底意를 스스로 表出하고 있다. 셋째로 民族大團結의 原則은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오해를 제거하고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단결을 이룩하자는 것이다”라고 주장되고 있다. 그들은 이 原則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원칙은 사회의 민주화와 각당, 각파, 각계인사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측이 統一3原則이 표방하고 있는 이론에 의하면 「自主」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곧 주한미군의 철수와 韓美關係의 단결을 의미하고 「平和」의 原則은 평화共存이 아닌 反帝國主義의 闘

爭과 「남조선혁명」투쟁을 전제 조건으로 하며, 「민족대단결」의 原則은 남한 사회의 「민주화」 다시 말해서 남한에서의 공산당 합법화를 통해서만 구현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50)</sup>

---

50) 上掲書, P. 673.

## 6. 맺 음 말

北韓은 統一政策을 一貫해서 民族的 自主性이라는 名分論的 原則에서 追求해 왔다. 理論上 平和的 統一을 언급하면서도 그 裏面에서는 南韓體制의 崩壞를 통한 共產化統一을 부단히 추진해 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그리고 國防에서의 自衛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其實에 있어서는 金日成이 唯一思想과 首領論을 正當化할 뿐만 아니라 그의 絶對權力과 權力繼承을 合理化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北韓은 統一이 民族的 自主性에 의거해서 達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主體思想을 통해서 革命과 建設 그리고 이를 南韓에 까지 擴大시키려는 統一政策이야말로 共產化統一의 戰術的 手段으로 活用해 온 것이다. 北韓이 名分論上 그들의 統一政策을 主體思想에 의거해서 追求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南韓의 共產化統一을 目標로 삼고 있는 限, 眞正한 意味에서의 南北統一은 앞당길 수 없다. 南北統一은 名分論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하기 보다는 現實主義的 및 漸進主義的 接近方法에 의해서 追求될 때 그 實現이 可能하게 된다.

특히 우리 政府는 「7·7宣言」, 「제44주년 8·15경축사」 그리고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통해서 남과 북이 40여년동안 敵對와 對決 속의 分斷狀態를 종식시키고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을 통한 統一에의 接近方式에 대해서 천명한바 있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도 拒否的 反應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北韓의 統一政策이 從來의 戰術的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北韓의 統一政策을 면밀하게 주의하면서 우리의 對應策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北韓의 祖國統一政策과 論理

— 南朝鮮革命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

1989

研究責任者  
金 甲 喆  
(建國大)

國 土 統 一 院



## 要 約 文

北韓 共產主義 政治史는 金日成의 唯一支配體系의 確立過程 바로 그것이다. 北韓이 선전하는 ‘위대한’ 主體思想은 이미 굳어진 金日成의 唯一支配를 合理化하고 장기간의 권력독점이 만들어 낸 個人權威의 神格化를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主體思想은 北韓의 모든 정책 (‘革命과 建設’)의 指導原則이 되고 있으므로 金日成이 말하는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의 理論과 戰略·戰術로 당연히 主體思想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주장하기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은 金日成이 ‘主體思想에 기초하여 창시한 독창적인 이론’이며 이로 인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식민지·반식민지 국가들이 사회주의에 이행하는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이 개척되었으며, 따라서 이 이론은 식민지·반식민지 국가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강령적 지침이 된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主體思想과 「남조선혁명」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北韓 共產主義者에 의하면 혁명과 건설의 主人(곧 主體)은 人民大衆인데 主人다운 태도는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立場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계급해방(人民民主主義革命)’과 ‘민족해방’의 추진은 主人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해당된다고 論理를 전개하고 있다. 즉, 人民大衆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령과 당의 명령에 따라 북한에다 혁명기지를 완성하고 남한에서 「계급해방·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金日成의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에 의하면, 전자의 革命主體는 「남조선인민」이며 후자의 그것은 「전조선인민」이 되어야 하는 바, 이 두가지는 모두 ‘主人’으로서의 ‘自主性’

을 확보키 위한 혁명과업 (즉 民族解放, 階級解放, 社會革命)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金日成의 主體思想에 입각하여 창안했다는 남조선혁명론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과 조국통일론 (祖國統一 3大原則 5大綱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 ① 金日成이 보는 民族分斷의 원인과 南北韓體制 및 社會에 대한 認識
- ②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과의 관계
- ③ 이 혁명과 통일을 성취키 위한 行動綱領·戰略·戰術 그리고
- ④ 北韓政權이 실제로 추진했던 革命/統一戰術에 관한 史的 기록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北韓은 民族分斷의 원인을 「美帝」의 韓半島 강점과 南韓의 「괴뢰정권」에서 찾고 있다. 즉, 美帝가 해방후 赤化統一 정부수립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反統一 괴뢰정권에 의해 統一이 방해되어 왔기에 김일성 영도하에 북한의 혁명기지를 강화하여 혁명과 통일을 기필코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北韓은 미군철수·현정권타도를 외치고 있다.

남조선혁명론과 조국통일과의 관계에 있어서 金日成은 해방직후부터 북한의 革命基地—南朝鮮革命—祖國統一의 政策路線을 수립하고 이를 하고 있다. 즉,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달성을 북한의 혁명기지를 政治, 經濟, 軍事力면에서 강화하여 남한을 압도하는데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革命基地論과 祖國統一論은 남한에서 '밖으로부터의 혁명', '북으로의 흡수통일'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한편, 北韓共產主義者는 統一의 길로써 2가지 방도, 즉 평화적 통일과 비평화적 통일을 말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이란 남한에서 공산당의 영도하에 反美, 親共勢力이 執權했을 때를 말하고 비평화적 통일은 「조국해방전

쟁]이라는 무력통일을 의미한다.

金日成이 제시한 祖國統一의 두 가지前途 즉, 조국통일(즉 共產化)이라는 혁명적 大事業을 주동적으로 유도하거나 맞이하기 위한 기본방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해방직후의 民主基地建設路線이며 1960년대에 들어와서 체계화된 3大革命力量強化路線이다. 즉 金日成은 全韓半島의 共產化를 위해 「北朝鮮의 社會主義革命力量強化」 「南朝鮮의 革命力量強化」 「國際的 革命力量強化」라는 3大革命強化를 기본전략으로 삼았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도하에서 北韓은 祖國統一의 3大原則과 5大綱領을 제시하고 있다. 즉 統一의 原則으로 ① 自主의 원칙 ② 民主의 원칙 ③ 平和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것을 「고려연방제」의 「선결조건」 「연방제 통일」 「10대 시정방침」을 뒷받침하는 수사로 악용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북한이 추진했던 統一方案은 어떠한가? 북한은 1960년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연방제를 선전해 오고 있으나 오늘날 그들이 내놓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이르기까지는 몇 차례의 탈바꿈이 있었다. 다만 그 시기와 여건에 따라 強調點, 修飾, 性格등을 달리하였지만, 對南赤化統一을 노린평화공세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고려연방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나, 또 論理的으로 이 전제조건과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내용으로 연방제 실시원칙과 構造를 선전하고 있는 점등에서 그 意圖가 잘 드러난다.

북한은 이상과 같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안”이라고 선전하면서 이의 실현을 노린 對南提議를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提議에서는 우리 體制를 부정하고 主權을 무시하는 전략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른바 「선결조건」의 실현, 즉 赤化여건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연방제로 통일하기 전에는 일체의 交流·協力을 거부한 「고려연방제」의 구조 (10대 시점방침)도 「經濟會談」에 호응해 오고 「體育會談」을 운위하는데서 이미 그 實效性이 무너져 버렸다.

## 目 次

1. 서 언 .....	41
2.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論의 기본개념 .....	45
가. 金日成의 남북한에 관한 情勢觀 .....	45
나. 革命基地/地域革命論 .....	49
3. 북한의 ‘祖國統一’전략과 3大革命力量 .....	54
가. 조국통일의 두 가지 방도 .....	54
나. 조국통일의 3대혁명역량 .....	57
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강령 .....	61
4. 北韓의 統一政策 고찰 .....	64
가. 1970년대까지의 북한의 통일방안 .....	64
나. 북한의 「高麗聯邦制」 .....	77





# 1. 서 언

북한 共產主義 政治史는 金日成의 唯一支配體系의 確立過程 바로 그것이다. 1958년 이후의 金日成의 지위는 1936년 이후 스탈린의 그것에 비유될 수 있다. 따라서 1972년 金日成 回甲 기념으로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體系化작업은 이미 굳어진 金日成의 唯一支配를 合理化하고 장기간의 권력독점이 만들어 낸 個人權威의 神格化를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바로 이것이 金日成 革命思想의 眞髓라고 선전하는 '위대한'主體思想이다. 그리고 1982년(金日成 古稀)에는 金日成의 繼承者 金正日에 의하여 金日成主義로 체계화되었으며 "은 사회의 主體思想化"운동의 강행을 통해 敎條化되고 있다. 이로써 북한 社會生活에서 法과, 道德, 그리고 宗教는 金日成의 통치이데올로기인 主體思想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主體思想은 북한의 모든 정책('혁명과 건설')의 指導原則이 되고 있으므로 金日成이 말하는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의 이론가 전략·전술로 당연히 主體思想의 기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金日成은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民族해방·人民民主主義혁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혁명과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조국통일의 기본方針으로 삼고 있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주장하기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은 김일성이 '主體思想에 기초하여 창시한 독창적인 이론'이며 이로 인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식민지·반식민지 국가들이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이 개척되었으며, 따라서 이 이론은 식민지·반식민지 국가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강령적 지침이 된다」라고 선

---

1) 공산주의 사전(극동문제 연구소, 1984), p.654

전하고 있다.

한편, 노동당은 金日成의 自主的 조국통일이론은 '조선의 현실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을 가장 적확하게 반영한 이론' 또는 '科學的 평가에 기초한 전략전술적 方針<sup>2)</sup>'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主體思想과 「남조선혁명」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 인민대중을 더욱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워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게 하는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sup>3)</sup> 여기에서 혁명과 건설의 主人( 곧 主體)은 人民大衆인데 主人다운 태도는 自主的 입장과 창조적 입장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계급해방'(人民民主主義혁명)과 '민족해방'의 추진은 主人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해당된다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즉 人民大衆이 主人이 되기 위해서는 수령과 당의 명령에 따라 북한에다 혁명기지를 완성하고 남한에서 「계급해방·민족해방」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서는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인민들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인민이 주인이 되어 전국적 판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사회혁명과 우리 시대 민족문제의 성격에 대한 전혀 새로운 과학적 규정을 내리었다."<sup>4)</sup>

金日成의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로에 의하면, 전자의 혁명主體는 「남

---

2)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11~12

3) 상계서, p.2.

4) 상계서, p.3.

조선人民」이며 후자의 그것은 「全조선人民」이 되어야 하는 바, 이 두가지는 모두 '主人'으로서의 '自主性'을 확보키 위한 혁명과업(즉, 민족해방, 계급해방, 사회혁명)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金日成은 이와같은 「혁명과 통일」을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는가 金日成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한다.

"북조선은 조선혁명의 기지이다. 북조선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고무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sup>5)</sup>

"특히 우리 나라 북반부의 경제건설은 북반부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조국통일의 담보인 우리의 혁명기지를 강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sup>6)</sup>

金日成에 의하면 이 혁명과 통일을 달성하는 기본적인 열쇠는 북한에 혁명기지(혹은 민주기지)를 강화하여 남한에서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金日成의 이 "전혀 새로운 과학적 이론"은 "세계최초의 사회주의 조국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혁명의 지름길"이라는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 노선이나 毛澤東의 "革命근거지"론과 大同小異한 것이 아닌가.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남한「혁명」과 조국「통일」의 이론·전략·전술 그리고 추진능력을 총체적으로 分析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자료와 더불어 分析者의 우수한 해석능력을 요구할 것이다. 北韓정치체계의 의도와 능력을 科學的으로 研究하고 종합학문적 기구와 전문가집단의 장기적 양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청된다고 보겠다.

---

5) 김일성 저작 선집, 제4권, p.523.

6) 상계서, p.208.

이 글은 북한리더십의 의도(이데올로기·戰略·戰術)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다는 차원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글은 金日成의 ‘남조선혁명’, ‘조국통일’에 관한 合理化논리(이데올로기적 각색)와 그 논리뒤에 숨겨있는 의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혁명」과 「통일」의 戰略·戰術을 규명하고자 할뿐, 그들의 能力평가문제는 다루지 아니했음을 지적해 둔다.

## 2.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論의 기본개념

우리가 金日成의 主體思想에 입각하여 창안했다는 남조선혁명론(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혁명)과 조국통일론(조국통일 3대원칙 5대강령)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① 金日成이 보는 民族分斷의 원인과 南北韓體制 및 사회에 대한 인식 ②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과의 관계 ③ 이 혁명과 통일을 성취키 위한 行動강령·전략·전술 그리고 ④ 北韓政權이 실제로 추진했던 혁명/통일전술에 관한 歷史的 기록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 가. 金日成의 南北韓에 관한 정세관-혁명과 통일론의 근거.

김일성은 한반도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문제를 제기시킨 "歷史的 根源"을 한마디로 미군의 남한점령에서 찾고 있다. 金日成에 의하면 남한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 自主的 平和統一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① 해방후 美軍의 남한점령으로 조국이 분단되었다는 점 ② 南韓은 美國의 新植民地정책으로 인하여 그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었다는 점 ③ 美國은 남한을 全조선을 강점키 위한 병참기지로 삼고 있다는 점 ④ 全조선의 민주발전과 조국통일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 다분히 我田引水格인 정세평가에서 찾고 있다.<sup>7)</sup>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기본장애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지

7) 김일성의 혁명통일론의 근거가 되는 정세평가에 관해서는 허종호, 전거서, pp.13~18.

않고는 남조선 인민들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sup>8)</sup>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족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자주 독립을 약속한 국제 공약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면서 민주주의 조선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소·미 공동위원회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파탄시켰습니다. 그들은 조선인민의 세기적 숙망인 조국의 완전독립과 통일적 임시 정부 수립을 방해하고 자기들의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며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며 조선 인민을 또다시 노예화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sup>9)</sup>

"미제국주의자들에게는 남조선이 단순히 잉여상품판매시장으로서나 혹은 전략자원의 공급기로서만 요구되는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남조선이 전조선을 강점하기 위한 병참기지로, 쓰련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을 반대하며 아세아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나아가서 세계제패를 위한 전략적 요충으로 필요한 것이다."<sup>10)</sup>

"미군은 남조선에 기여들자마자 자기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는데 착수하였으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 정치적으로는 식민지노예화정책에 항거하는 해방된 민족의 온갖 민주주의적 창발성을 억제하고 모든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동시에 조선민족을 분열시키며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침략정책에 도움을 줄 반동세력을 규합하고 조장하였습니다."<sup>11)</sup>

이상의 네가지 인용은 金日成이 남한에서의 美國의 役割을 평가하는 좋은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첫째로, 金日成에 의하면 해방후 미국은 그 군

---

8) 김일성 저작 선집, 제4권, p.389.

9) 김일성 선집, 제1권, p.372.

10) 상계서, p.234.

11) 김일성 저작 선집, 제1권, pp.206~207.

대의 남한주둔을 통해서 좌익세력을 탄압하고 우익세력을 규합함으로써 「조선민족」을 이념적으로 분열시켰는 데 이는 모두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로, 「美帝」는 미소공동위원회 사업을 파탄시킴으로써 「통일적 임시정부수립」을 방해하였다고 김일성은 주장하고 있다. 셋째로, 김일성은 미군의 남한주둔과 그 식민지통치가 조국통일의 근본장애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넷째로, 「美帝」는 남한을 北韓을 강점키 위한 병참기지로, 아시아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戰略기지로 삼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일성은 미군의 남한점령 및 그 식민지정책의 결과 생겨난 오늘날의 한반도 정세로 인하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문제를 새삼스럽게 제기하게 한 유일한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만일 「美帝」가 남한을 식민지화하지도 않고, 民族分裂策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혁명과 통일문제는 애당초 제기되지 않을 것이며 "남북조선의 전체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통일적인 民主主義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려 왔을 것이다."<sup>12)</sup>고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이것이 1945~48년까지 해방직후 한반도에서 두개의 政體가 수립된 歷史的 사실에 대한 북한의 歷史해석이다. 金日成의 이러한 역사해석은 전한반도에 걸쳐 김일성 영도하의 "人民民主主義"政權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黨派性論理에 입각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美帝」가 이러한 赤化統一정부수립을 방해했기 때문에 김일성 영도하에 북한의 혁명기지를 강화하여 혁명과 통일을 기필코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金日成의 歷史해석이 얼마만치 科學的 근거에 입각한 것인가를 토포하는 것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할 것이나 歷史的 기록으로 보면, 金日成이

12) 허종호, 전게서, pp.17~18.

中央人民위원장으로 된 북조선임시人民위원회(소위 人民政權)는 1946년 2월에 수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승만박사의 單政수립주장(井邑發言)을 발표했던 1946년 6월보다 4개월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47년 2월에는 북조선人民위원회가 수립되어 명실상부한 人民民主政權이 확립되었던 것이다. 이 史實은 소위 「美帝」와 「남조선의 反動」이 UN감시하의 自由총선거로 大韓民國이 수립된 것은 1948년 8월이므로 民族分斷을 고정화하는 單政수립은 소련과 金日成이 먼저 착수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만일, 金日成의 한국정부와 사회에 대한 해석과 인식이 스탈린주의적 革命觀에 입각하고 있거나 黨派性論理(공산당의 일당지배는 參民主主義이고 自由民主主義는 人民大衆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독재체제라는 兩分論)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는 있는 그대로의 現實이 아니라 架空的 現實을 기준으로 하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論을 전개하고 이에따라 戰略戰術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된다.

### 〈그림 1〉 金日成의 現實진단과 그 처방

- A. 現實社會 記述 —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
  - 대한민국은 反統一괴뢰정권
  - 民族的 애국자와 民主的 人民大衆을 탄압하는 독재정권
- B. 原因分析(설명) — 「美帝」의 新植民主主義政策
- C. 打開方法(戰略戰術) — 민족해방·人民民主主義革命의 추진(미군철수·현정권타도)
  - 조국의 自主的 平和統一(北韓으로의 병합·흡수통일)
- D. 최종目標 — 全韓半島에서의 "공산사회건설"



북한의 政治史 40여년을 고찰해 보면, 金日成은 C와 D를 추진하고 달성하기 위한 명분 論理로 A와 B의 論理를 전개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일성의 경우 C를 달성하는 것이 그의 기본욕구(독립변수)이고, A B는 C의 合理化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金日成의 혁명과 통일이론이라는 것은 目的論理接近(teleological approach)일 뿐 韓國사회현실의 科學的이며 경험적 分析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나. 革命基地/지역혁명론

金日成은 해방후 미국과 남한의 自由民主勢力의 反託으로 인하여 ‘全조선 임시정부’수립에 실패했고 그 후 남북에 두개의 政權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조선혁명의 全國的 勝利에 도달하기 위하여 南과 北의 두 지역에서 각기 각자의 현실에 맞게 혁명과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地域革命論을 제기하였다.

……조선 공산주의운동과 조선인민의 모든 혁명투쟁은 할 수 없이 얼마 동안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투쟁형식으로 벌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sup>13)</sup>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sup>14)</sup>

이와같이 곧바로 ‘전국적혁명’으로 되지 못하고 ‘지역혁명’으로 후퇴하게

13) 김일성 저작 선집, 제4권, pp.285~286.

14) 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p.479.

된데 대하여 북한은 ‘美帝의 민족분단화정책’<sup>15)</sup>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 지역혁명은 전국적 혁명이라는 상위개념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역혁명은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상이한 혁명과정과 형식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바 "혁명발전의 조건이 유리한 북한을 전국적 혁명의 ‘革命基地’로 건설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치노선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방직후 우리 당은 북조선에서 민주개혁을 철저히 수행하고 민주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장차 조선민족을 완전히 해방하며 조선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한 튼튼한 민주기지를 북조선에 창설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치노선으로 규정하였습니다.<sup>16)</sup>

金日成은 해방직후, 즉 1945년 10월 10일 북조선공산당 창립시 民族分裂이 고정화되기 전에 ‘북조선민주기지’ 건설을 당의 기본정책으로 정립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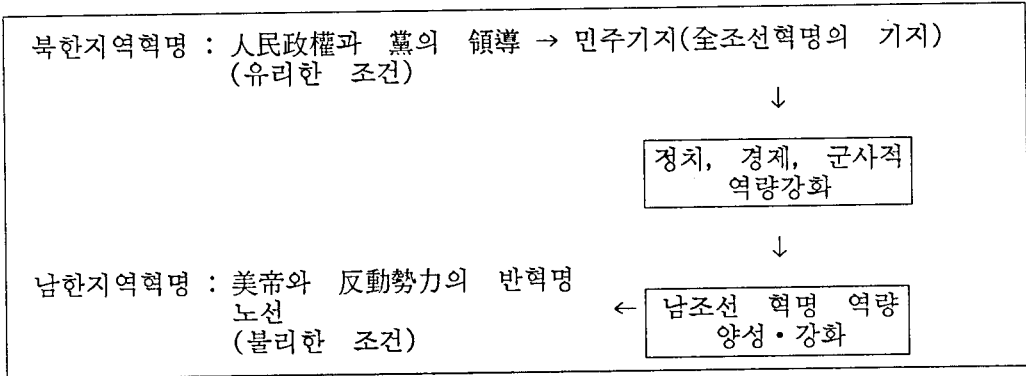
金日成의 ‘민주기지’란 "조선혁명의 추동력으로 될 기지" 곧 혁명기지는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들어서면서 ‘전조선민족을 해방’하기 위해 건설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들 圖表化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

15) 허종호, 전게서, p.19.

16) 김일성 저작 선집, 제1권, pp.224~225.

## 지역혁명론



金日成은 지역혁명과 혁명기지 그리고 조국통일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대처하여 이미 해방된 북조선에서 혁명을 적극 밀고나가며 북조선에 튼튼한 혁명기지를 창설하여야만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sup>17)</sup>

金日成은 해방직후부터 북한의 혁명기지 → 남조선혁명 → 조국통일의 정책 노선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왔던 것이다. 즉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달성은 북한의 혁명기지를 政治, 經濟, 軍事力면에서 강화하여 남한을 압도하는데 두었던 것이다. 이 민주기지(혁명기지)노선의 연장선상에서 1950년 6월 무력남침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의 혁명기지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혁명운동은 심각한 계급투쟁의 과정이며 혁명운동의 승리는 반혁명력량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러한 혁명력량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포괄하는 혁명기지에 의거함으로써만 정치, 경제, 군사

17) 김일성 저작선집, 제4집, p.286.

적으로 더욱 튼튼히 성과적으로 꾸러질 수 있다. 혁명력량이 없는 근거지란 있을 수 없듯이 기지없는 혁명력량의 강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sup>18)</sup>

왜 혁명기지는 반드시 '공화국 북반부'에 설치해야 하는가.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북한만이 '전조선혁명기지'로 되는 이유는 몇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유리한 조건이란 ① 김일성의 현명한 혁명 영도 ② 그가 창건하고 지도하는 黨 人民主權이 있고 ③ 당과 정권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는 점 등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지역은 1946년 2월에 이미 金日成이 영도하는 人民正權이 수립되었다는 점이 전국적 혁명에 유리한 혁명기지로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북한 매스컴은 이러한 金日成의 地域革命論과 革命基地論을 주체사상에 기초한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찬양한다. 그것은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과 모택동의 계속혁명론의 한국적 적용일 뿐이다.

북한에서 혁명기지를 건설함으로써 혁명역량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남조선혁명(전국적 혁명의 대상)과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요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남한에서 '밖으로부터의 혁명', '북으로의 흡수통일'을 용변으로 입증하는 것이 된다.

북한의 혁명기지(RB), 남조선혁명(SR), 조국통일(UK) - 이 세가지 요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金日成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당은 오늘 전체 인민을 조직 동원하여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함으로써 조국통일의 현실적 담보인 민주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sup>19)</sup>

18) 허중호, 전게서, p.21.

19) 김일성 저작선집, 제1권, p.518.

…당과 정권을 강화하고 우리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군대를 강화한다면 민주기지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며 우리의 힘이 더욱 강대해질 것입니다.<sup>20)</sup>

오늘 우리의 민주기지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는 결정적력량으로 되고있으며 조선에서의 모든 정세변화의 기본요인으로 전변되고있습니다.<sup>21)</sup>

북조선은 조선혁명의 기지이다. 북조선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성과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고무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sup>22)</sup>

…특히 우리나라 북반부의 경제건설은 ……조국통일의 담보인 우리의 혁명기지를 강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sup>23)</sup>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적자립경제의 건설은 나라가 통일된 후 남조선경제를 급속히 복구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됩니다.<sup>24)</sup>

남조선에서 혁명이 승리하면 북조선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은 성과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sup>25)</sup>

우리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하여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 결정적투쟁에 동원될 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sup>26)</sup>

---

20) 상계서, p.479.

21) 김일성 저작선집, 제2권, p.27.

22)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p.523.

23) 상계서, p.208.

24) 상계서, p.358.

25) 상계서, p.399.

26) 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p.197.

### 3. 북한의 '祖國統一' 전략과 3대혁명역량

#### 가. '조국통일'의 두가지 방도

김일성은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는 평화적인 방법과 비평화적인 방법의 두 가지 방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혁명에는 두 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 되는 것이 하나의 전도요, 큰 전쟁으로 인하여 제국주의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조건하에서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는것이 다른 하나의 전도입니다."<sup>27)</sup>

평화적방도에 의한 조국통일은 ① 남한당국이 조국통일 3원칙과 5대강령을 접수·실현하는 경우<sup>28)</sup> ② 남한에 반계자주적 정권이 수립되거나 중립화되는 경우<sup>29)</sup>, ③ 남조선혁명이 승리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비평화적방도의 조국통일은 ①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킬 때 ② 미국이 세계전쟁에 휘말리어 약화되었을 때 ③ 남한인민이 북의 지원을 요청했을 때<sup>30)</sup>에 달성된다고 김일성은 공언하였다.

김일성이 말하는 남한에서 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革命이 승리했을 때, 곧 공산당의 영도하에 反美·聯共勢力이 執權했을 때를 말하고, 비평화적 통일은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무력통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조국통일론」은 결국 〈革命 → 統一〉로 表現할 수 있다. 이것은 남한에서의 「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革命」이 성공하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달성된다는 주장과 문맥을 같이 한다.

27) 김일성 저작선집, 제1권, p.573.

28) 김일성 저작선집, 제6권, p.452.

29) 허종호, 전계서, p.265.

30) 상계서, pp.264~271.

김일성이 제시한 祖國統一의 두 가지 前途(方法) 즉, 조국통일(즉 공산화)이라는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유도하거나 맞이하기 위한 기본방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해방직후의 民主基地建設路線이며 1960년대에 들어서 체계화된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이다.

김일성은 전한반도의 공산화, 곧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력량강화, 남조선의 혁명력량강화 국제적 혁명력량강화"라는 이른바 3대혁명역량강화를 기본전략으로 삼았다. 이같은 전략은 1964년 2월에 당방침으로 확정되었는데,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의 알리·아르함社會科學院에서 행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라는 題下의 연설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인 승리는 결국 3대혁명력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말할수있다.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 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더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sup>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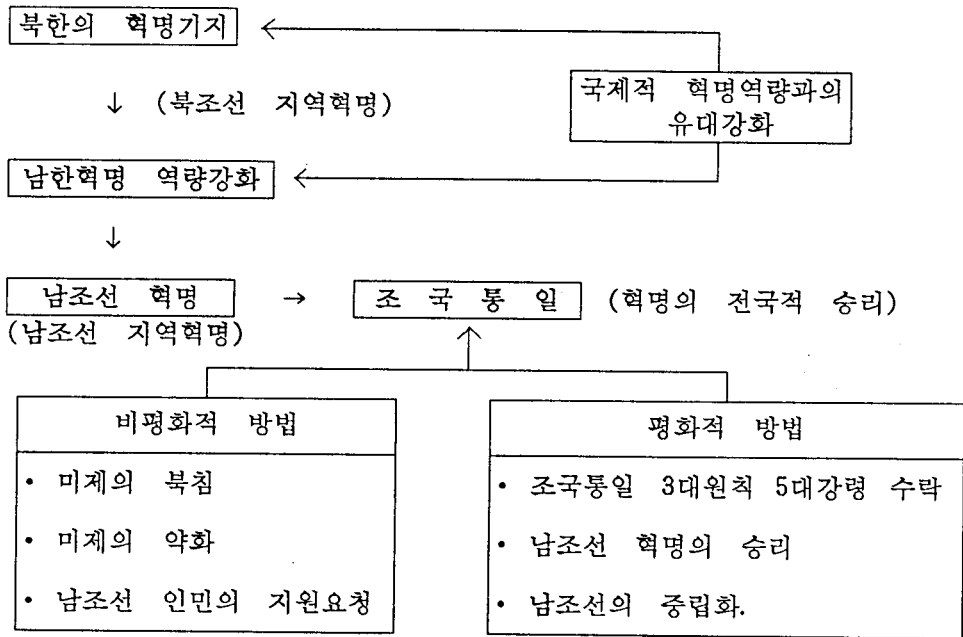
여기에서 김일성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남과 북의 두 지역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은 결국 3대혁명역량의 준비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김일성의 혁명기지노선(제2장 참조)과 3대혁명역량강화노선을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31)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p.239.

3대 혁명 역량 강화 (表 5)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과의 관계 (表 6)

구 분	남조선 혁명	조 국 통 일
순 서	先	後
방 법	「미제」축출 → 민족해방 → 현체제타도 → 인민정권수립 (폭력적 방법) (계급해방)	남북 인민정권간의 합작통일 (평화적 통일)
포괄 지역	남한지역(지역혁명)	남북한전역(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
추진세력 (혁명주력)	남한의 혁명역량 (보조역량 : 북한의 혁명역량)	북한의 혁명역량 (보조역량 : 남한의 혁명역량)



## 나. 조국통일의 3대혁명역량

김일성은 조국통일 곧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실현키 위해 3대혁명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려 하는가.

먼저 북한의 '社會主義 革命力量強化'에 관해서 살펴보자. 이것은 3대혁명역량이 확정되기 이전의 이른바 '民主(革命)基地路線'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민주혁명기지란 민주혁명이 진행되는 나라에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혁명이 승리하여 혁명정권을 세우고 민주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전국적 民主革命課業을 수행하기 위한 基地라는 것이다.

김일성에 의하면 "민주기지의 강화는 조국통일달성의 결정적 담보이며, 민주기지의 강화와 조국통일은 상호밀접히 관련되는 혁명과업"<sup>32)</sup>이다. 요컨대 북한의 혁명역량강화란 북한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한반도공산화의 기지로 삼자는 전략이다.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인 민주(혁명)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당의 정책노선은 ① 3대혁명 ② 김일성유일사상체계 확립 ③ 4대군사노선 ④ 속도전에 의한 경제건설 ⑤ 철저한 정치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북한은 3대혁명(즉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강행을 통해 계속혁명을 추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유일권력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공업위주의 명령경제체제화가 진행되고, 사회적으로는 혁명에 의한 공산주의 인간개조를 통해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하고, 군사적으로는 전인민의 무장화(全人民的 軍事體制), 전지역의 요새화(全地域의 戰場化로 先制攻撃 및 持久戰術對備), 전군의 간부화(한 등급높은

32) 양호민 외, 공산주의비판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81), p.341.

指揮能力부여로 戰時所要 對備), 군장비의 현대화(新銳裝備로 조직된 특수부대)등 이른바 四大軍事路線이 추구되고 있다.

다음으로 ‘남조선의 혁명력량강화’는 남조선혁명이라는 지역혁명의 결정요건이 되고 있다. 이것은 지하당조직을 확대시켜 근로대중을 쟁취하여 統一戰線을 수립하고, 남한의 반혁명세력을 약화시켜 현존정권을 타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명분상 두 가지 혁명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美軍撤收를 명분화하는 것으로, 美帝國主義의 植民統治로부터 民族을 해방하는 革命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現政權을 타도하는 것을 명분화하는 것으로 현정권은 봉건적이고 군사과소독제적인 反動政府이므로 노동자, 농민 등 全人民이 이를 폭력적으로 타도하고 人民政權을 수립하는 이른바 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후자는 階級解放이고 전자는 民族解放이라고 미화시키고 있다. 결국 남한에서의 혁명은 두 가지 혁명의 종합, 즉 民族解放 + 人民民主主義革命 =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에 의하면 전국적혁명의 남쪽지역혁명(곧 남조선혁명)은 반미민족해방인 동시에 반파쇼·인민민주주의혁명이며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본임무는 남한에서 미제를 축출하고 민족적 자주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제6공화국을 전복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수립하는데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한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핏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기본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를 없애며 군사과소독제를 뒤집어엎고 선진적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sup>33)</sup>

33) 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p.479.

…우리가 북조선에 앉아서 아무리 좋은 통일방안을 내놓아도 남반부 인민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통일은 될수 없습니다.<sup>34)</sup>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국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김일성은 "남조선 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sup>35)</sup>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의 효율적 추진이 요청된다고 한다.

북한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탈린주의 혁명전략에 입각하고 있다. 이를테면 먼저 남한에 지하공사당을 조직하여 노동자-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고 對美·對日관계에 있어서 민족의식이 예민한 진보적 인텔리와 청년학생을 혁명의 동조세력으로 삼아, 혁명의 주력군과 동조세력을 결합시켜 主打倒對象인 미국을 축출하고 현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통일전선전술이 요구되는 바, 우선 '공산주의' 구호는 일체 감추고 오직 自主化, 民主化, 祖國統一의 구호만 내세워 한국내의 광범위한 민주주의세력과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현정권을 타도한 후 聯北, 親共政權, 즉 人民政權을 수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바로 이러한 전략적 고려에서 한국내의 '반체제민주세력'의 사기를 높이며 반정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혁명기지'가 남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어떻게 선동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김일성의 발언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

34)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p.143.

35) 김일성, "우리 나라의 정세와 제 일본 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pp. 3~4, 허종호, 전게서, p.280.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며 그들의 투쟁이 온 민족의 사활적리익에 직접 관련되는 것만큼 우리는 이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을 같이 지는 립장에 확고히 서있을 것입니다.<sup>36)</sup>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것을 숭고한 민족적 의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sup>37)</sup>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적투쟁이며 민족의 사활적리익에 직접 관련되는 정의의 투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어느때나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지원할 것입니다.<sup>38)</sup>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이 언제나 남조선인민들의 처지와 조국통일의 임무를 잊지 않도록 하며 남조선인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숭고한 정신에서 출발하여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헌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sup>39)</sup>

우리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은 결코 그 어떤 <내정간섭>이 아니라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것입니다.<sup>40)</sup>

한편 '조선로동당'은 자기들이 '남한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선동하고 지원하는 것이 내정간섭이 아니고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민족으로서의 권리라고 강변한다.

36)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pp.7~8.

37) <우리나라의 경제와 재일본 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p.26.

38) <자주의 기발을 높이들고 나가는 제3세계 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p.13.

39)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p.376.

40) <자주의 기발을 높이들고 나가는 제3세계 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p.14.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의 전민족적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이다. 조선의 통일문제가 조선인민자신의 문제이며 전민족의 사활적리익에 관련된 조선민족내부분제인만큼 그 누구도 조선민족끼리 서로 지지하고 성원하는것을 시비할 수 없으며 방해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반동들이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할데 대한 우리의 방침에 대하여 <내정간섭>이요 <민중봉기>를 <선동>하여 <적화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헐뜯는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비방이다.<sup>41)</sup>

끝으로 국제적 혁명역량과의 유대강화는 국제 공산주의세력, 제3세계인민들 자본주의나라 노동계급 및 세계의 좌익지식인들과 단결하여, 한국을 국제관계에서 고립화시키고, 혁명적 대사변에 처하여 미국과 일본 등 한국의 우방국민들의 지원을 차단하자는 전략적 발상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제3세계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민족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싸우는 자본주의나라 노동계급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들과 단결하여야 합니다.<sup>42)</sup>

## 다.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강령’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원칙으로 ① 자주의 원칙 ② 민주주의 원칙 ③ 평화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통일의 주체는 민족내의 특정한 계급(즉 인민대중)이 아니라 당연히 6천만 민족 전성원이다. 韓民族의 운命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韓民族 全體成員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41) 허종호, 전계서, p.297.

42) <우리나라 정세와 재 일본 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p.4.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통일의 기본노선으로 先革命, 後統一論을 견지함으로써 통일방법에 무력과 폭력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는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의 원칙으로 표방하다가 1980년대부터는 「고려연방제」와 관련해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통일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sup>43)</sup> 여기에서 '자주'는 「고려연방제」의 「선결조건」과 결부시켜 주한미군의 철수와 등식화시키고 있다. 즉 한반도에서 의제를 배격하기 위해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하고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44)</sup> 이를 위한 선전구호가 곧 反美自主化, 美軍撤收이다. 이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논리의 전제인 '미제의 신식민지정책'으로 남한이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가설에 기초하여 나온 구호이며 '남조선혁명력량'을 선동하는 공작수단이 되고 있다.

김일성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도 반드시 폭력혁명이나 무력통일을 반대하는 개념이 아니다. 「평화」에 대한 공산주의적 정의에 따르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세력, 즉 자유민주국가, 자본주의국가를 전쟁세력으로 규정, 이들이 지구상에서 소멸된 상태를 '평화'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력과 폭력이 공산혁명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본다. 바로 이러한 논리에서 「남조선혁명」은 무력이나 폭력에 의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聯共政權을 세워 공산화하는 것인데 이것이 平和原則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평화」의 원칙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평화통일」로 둔갑하여, 「연방제」실시가 곧 「평화통일」이라는 등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43) 민족통일론 (서울 : 국토통일원, 1985), ppo.62~63.

44) Loc. cit.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화합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통일의 원칙」이 아니라 「연방제」로 통일된 뒤에 실시하겠다는 이른바 「10대시정방침」과 연관되어 있다. 본래 북한의 「민족대단결」이란 반공안보태세를 풀고 공산주의와 손잡는 것, 즉 「聯共合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는 현 6공화국은 반민족적 파쇼정권이므로 통일당사자로서의 권위가 결여되어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7·4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조국통일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이 제와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로 변질시켜 「고려연방제」의 「선결조건」, 「연방제통일」, 「10대시정방침」을 뒷받침하는 수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4. 북한의 統一政策 考察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표 <표 >

구 분 요소별	한 국	북 한
통일 개념	한민족 공동체 형성·발전	전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목표	단일민족국가(1민족1국가)	연방제(자치제)
통일의 주체	민 족	근로 인민 대중 (공산당 및 동조세력)
통일의 원칙	자주, 평화, 민주, 복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 단결(반미, 반공세력분쇄, 연공합작)
통일 방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통일의 과정	한민족 공동체 → 남북연합 → 통일민주공화국	선 남조선 혁명 후 흡수통일(평화통일)
전제조건문제	조건 없음	선결조건 제시
상호인정문제	동반자 관계 (정치적 실체로 인정)	체제 부정 (혁명의 대상)
대화기구문제	실질적 협의기구	南의 민중과 北의 인민사 이의 대화(대 민족회의) (남한정부의 권위 불인정)
교류·협력 문제	당장 실시	연방제 실시 이후

### 가. 1970년대까지의 북한의 統一方案



## (가) 제2공화국시기

제2공화국시기 특히 4·19 직후 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은 먼저 4·19에 따른 「反李承晩・反美鬭爭」의 선동으로 시작되었다.<sup>45)</sup> 그러면 먼저 이 시기의 북한의 내재적 상황을 일별해 보기로 하자.

북한정권에 있어 1960년은 복구작업(1954~56)을 마무리 짓고 1956년 8월 宗派事件진압으로 反스탈린運動의 충격파를 막고 1958년까지 黨內的 反金日成派를 숙청하는 벽찬 수습노력에서 일단 안정을 되찾고 第1次 五個年計劃(1957~61)을 1年 앞당겨 마무리 지은 해였다. 金日成은 전후 최대의 련을 벗어나 1人獨裁體制를 구축함으로써 눈길을 다시 對南戰略과 工作에 돌리게 되었다. 바로 이 무렵인 1960년 4월 19일 「反獨裁・民主革命」이라고 불렀던 4·19가 발발하여 李承晩대통령의 下野와 自由黨政權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북한은 4·19를 「反帝・反美鬭爭 내지 階級鬭爭」으로 전환시킬 것을 꿈꾸었으나 南韓內 共產黨 地下組織 또는 同調勢力不實로 한낱 희망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북한은 심각한 환멸과 反省속에 향후 4·19와 같은 民衆蜂起가 다시 발생할 때를 대비한 나름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sup>46)</sup>

---

45) 북한은 1960년 4월 22일, 23일, 24일의 중앙방송, 평양방송보도와 1960년 4월 2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채택한 「남조선 인민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① 학생혁명의 희생자는 남조선 군대에 의해 살해된 것이며 이는 중국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다. ② 학생들은 이승만정권의 타도와 미군의 남한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③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만 남조선 인민은 투쟁을 중지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46) 근로자(노동당 기관지) 1960년 제5호에서 ① 항쟁주력이 계급적 제약성 ② 노동계급 또는 그 전위대의 지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4·19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 삼고 있다. 한편 대남 평화공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홍명희, 한설야 등 남한 연고자들로 「平和統一委員會」를 조직하고 별도로 「학생위원회」등의 간판을 들고 나왔다.

북한이 구상하고 실천할 차후 대응책으로는 「南北協商」과 「平和的 統一」 운동의 추진, 「大衆의 政治的 覺醒과 組織化」를 위한 지하 공산당 건설 같은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후 4·19에 참가했던 일부 학생들이 7·27 총선에서 패배한 일부 정치인들과 합세하여 다소 성급하고 감상적인 통일 운동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분위기를 희망적으로 해석하면서 「南朝鮮 赤化統一의 새로운 戰略과 戰術」을 구상하던 가운데 그 선행단계로서 이른바 「聯邦制 統一方案」을 주축으로 새로운 대남통일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1) 金日成의 8·15경축대회에서의 統一方案(1960. 8. 14)

①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는 民主主義의 기초위에서 자유로운 南北 總選舉를 실시한다.

② 아직 南朝鮮當局이 자유로운 남북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過渡的 조치로서 南北朝鮮의 「聯邦制」를 제안한다. (남북조선에 現存하는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獨自的인 活動을 보장하는 동시에 양정부 代表로서 구성되는 最高民族會議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간의 經濟·文化發展을 통일적으로 조절한다.)

③ 만일 상기 提案 등을 남조선 당국이 접수할 수 없다면 남북조선 實業界代表로 구성되는 순전한 經濟委員會라도 조직할 것을 제의한다.

④ 남북간에 文化使節들의 내왕과 科學文化, 藝術, 體育 등 모든 분야에서의 相互交流를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⑤ 남조선에서 美軍을 撤去시키고 남북조선軍隊를 각각 10萬 또는 그 이하로 縮小할 것을 주장한다.

⑥ 이상의 제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代表들이 平壤이나 서울 또는 板門店에서 협의할 것을 남북조선 當局과 政黨·社會團體 및 個人

人士에게 제의한다.<sup>47)</sup>

이 제안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그후 계속해서 들고 나오는 ① 過渡的 조치로서의 「聯邦制」 ② 남북간의 경제·문화발전을 統一的으로 조절한 「最高民族會議」를 조직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보다 먼저인 4·19직후에 발표한 성명서는 북한의 당시 의도를 더욱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2) 북한의 「政黨·社會團體 指導者 連席會議의 4·19와 관련한 공동성명」에서 표현된 統一方案(1960. 4. 21)

① 南朝鮮에서 美軍은 즉시 撤退한다. ② 統一問題를 討議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諸政黨, 社會團體의 連席會議를 개최한다. ③ 남북조선의 經濟代表로서 南北聯合經濟委員會를 구성한다. ④ 남북의 자유로운 왕내와 書信往來를 조속히 실현한다. ⑤ 어떠한 外國의 간섭없이 全體朝鮮人民의 自由로운 의사에 의하여 남북조선선거를 실시한다.<sup>48)</sup>

그런데 이승만의 下野決定이 발표된 1960년 4월 26일자 북한의 「정당·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의 공동성명서」에서 특히 「이승만의 체포와 재판의 회부, 이승만 지배기구의 완전한 폐지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의 대표로 구성된 남한의 잠정적 정부로서의 임시행정기구의 수립」을 촉구하는 項을 4월 21일자 성명에 추가한 것은 注意를 요하는 대목이다. 이 추가항목에서 첫째, 남북의 잠정적 정부로서의 「임시행정기구」의 수립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의 統一方案의 골간을 이루는 이른바 남한의 既存 政權이 「民主人士」에 의해 대처되면 그 「새로운 진보적 정권」과 「평화통일」을 성취한다는 기본노선을 固守해 온 점에서 볼 때 이 「임시기구안」도 이러한 지평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는

47) 金日成, "조선 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60. 8. 15.

48) 梁好民의 共編, 민족통일론의 전개(서울: 형성사, 1983), p.464.

남북총선거를 들고 나온 점인데 이는 1954년 6월 15일 제네바政治會議시 南日이 동의(周恩來가 제안 中立國 감시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案)한 중립국 감시하의 총선거안(1958년 2월 5일 북한의 내각회의에서도 이점을 반복했었다.)마저 철회하고 "외국의 간섭없는 남북총선거"를 표방하고 나선 점이다.<sup>49)</sup>

이것은 북한이 1960년을 기점으로 " ① 조선인에 의한 조선문제의 해결. ② 외세배격 ③ 민족자결강조 등 自主的 목소리를 높이며 시도했음을 뜻한다.

그리고 특히 이 시기의 對南宣傳은 북한경제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남한 경제의 상대적 어려움을 과장하면서 그 구체책으로서 ① 「美帝」의 逐出 ② 南北交流에 의한 統一을 역설했다.

그후 북한은 산하 기관을 동원하여 여러 방면에 걸쳐 金日成의 聯邦制案의 수락을 호소 내지 선전하였다. 그 중 중요한 것들은 ① U.N.감시하의 총선거를 반대하고 金日成의 남북 연방제안을 담은 U.N. 第15次 총회에 제출한 각서(1960. 11. 11) ② 金日成의 聯邦制案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남북경제위원회설립을 제의한 최용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제의(1960. 11. 19) ③ 1960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원택이 大韓民國 國會에서 심의할 것을 요구한 제안 ④ 1961년 1월 18일 남북 經濟·文化 및 서신왕래를 요구하는 남한내 혁신계의 주장을 환영하는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 성명 ⑤ 南北協商 및 南北間의 경제·문화교류 등을 촉구하는 祖國平和統一委員會 결성대회에서 나타난 統一方案(1961. 5. 9)등

49) 북한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의했던 「有關國家들의 국제회의안」을 1959년부터 철회한 것도 「自主的 平和統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金學俊, "제2공화국시대의 통일논의", 민족통일론의 전개(서울 : 형성사, 1983), p.350참조.

이다.

이러한 북한의 平和統一政勢를 후원하기 위하여 蘇聯의 흐루시초프首相은 U.N. 제15차 총회(1960. 9. 23)에서 "朝鮮問題"의 무력에 의한 해결시도를 "미친 짓"이라고 전제하고 외부의 간섭없이 朝鮮人民 자신에게 平和的 統一을 맡겨야 되며 북조선의 "南北朝鮮聯邦提議"는 독일정부(동독)의 제안과 같이 합리적이며 唯一한 方法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안은 金日成이 제시한 「聯邦制案」을 바탕으로 ① 外軍撤收를 전제로 外勢의 간섭없는 '自主的 統一'을 강조했다는 점 ② 남한내 혁신계와 정계일각의 통일논의를 이용하여 南北協商을 시도했다는 점 ③ 경제력이 남한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판단하에 남북경제교류를 강력히 주장하여 남한사회의 교란을 유도했다는 점 등에서 對南戰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張勉정권이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하여 보인 반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張勉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모조리 거부하였다. 그러나 新民黨소속 少壯派의원들 가운데에는 북한제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응자세를 보이지 않은 장면정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측도 있었다. 다만 남북협상을 주장했던 「民自統」등 혁신계는 북한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장면정부는 이러한 추세(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무드)를 감안하여 閣令으로 「統一問題研究所」를 외무부에 설치하는 등 일련의 반응을 보인 면만은 부정할 수 없다.

#### (나) 第3공화국 시기

5·16軍事革命에 대한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첫 評價는 親美 張勉정권의 타도, 美國의 同革命政權에 대한 반대 및 남한국민들의 부분적 지지 등을

들어 이를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부패한 張勉괴뢰정권은 마침내 타도되었다. 16일 새벽 3시를 기하여 軍事政變을 단행한 남조선軍人들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정부기관들과 放送局을 완전 장악하였다.……서울과 광주 등 여러 곳에서 청년학생들과 人民들이 張勉정권을 타도한 軍事政權을 支持・歡迎하는 군중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軍事政變에 의하여 괴뢰정권이 타도되자 남조선 強點의 U.N.軍사령관 「맥그루더」와 서울주재 미국 대리대사 「마샬・그린」은 성명을 발표하여 統治權이 이미 전복된 張勉政權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남조선 내정에 간섭해 나르고 있다.<sup>50)</sup>"

북한은 아마도 親美政權으로 여겼던 張勉내각의 붕괴를 親美政權의 붕괴로 평가하고 이 親美政權을 타도한 軍部革命勢力을 反美・民族主義勢力으로 착각했던 것 같다.

아마도 북한은 5・16군사혁명을 1960년 12월 모스크바聲明(81개 공산당 및 노동자당 대회의 성명)에서 定義한 「民族民主主義」혁명으로 誤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곧이어 발표된 5・16革命公約 第1項("反共을 國是의 第1義로 삼는다")과 第5項("國土統一을 위하여 共產主義와 對決할 수 있는 實力培養에 전력을 집중한다.")으로 군사혁명의 성격이 밝혀졌을 때 북한의 對南統一戰略은 硬直化될 수 밖에 없었으며 폭력혁명노선을 취할 수 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북한의 民族統一戰略은 對南革命戰略과 不可分の 관계에 있다. 이는 남북 통일전략이 先革命 後統一이기 때문이다. 먼저 폭력에 의한 "南朝鮮革命"이 달성된 다음에 "平和統一"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

50) 61년 5월 16일 07:00, 평양방송(조선 중앙통신보도를 引用).

5·16軍事革命政權이 「反共」과 「共產主義와 對決할 수 있는 實力培養」을 표방하게 되자 同年 7月 모스크바와 북경을 각각 방문한 金日成은 한국의 軍事政權이 美國의 부추김에 힘입어 北進을 감행할 지도 모른다는 名分을 내세워 북한·소련간 그리고 북한·중공간에 雙務的인 이른바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라는 명칭하의 軍事防衛同盟을 체결하였다.

이어 9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1961. 9. 11~18)는 강경일변도의 對南戰略을 同대회 決定書(1961. 9. 17)에서 채택하였다.<sup>51)</sup> 그 어조와 문맥은 年前의 「연방제통일방안」제의 때와는 판이한 폭력혁명론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즉 북한은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제국주의·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 민주주의革命」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美帝와 더불어 地主, 隸屬資本家, 反動官僚들을 반대해 싸운다」라고 했으며 이른바 그들의 「三段階 赤化統一戰略」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sup>52)</sup>

첫째, 북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혁명적 黨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

둘째, 그러한 共產黨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부르주아지, 청년, 학생, 지식인 그리고 민족 부르주아지를 포함하는 광범한 「反美救國統一戰線」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셋째, 이리하여 自主的 平和統一의 기치밑에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집결시켜야 하며, 이 역량과 북조선의 애국적 사회주의적 역량과의 단합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① 남한에서의 地下共產黨建設 및 據點확보 ② 그것을 중심으로

51)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보고」 가운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를 참조.

52) 上揭書 참조, 그리고 이에 관한 분석은 박동은, "무력통일 실패와 3단계 통일안," 북한(서울: 북한연구소, 1979), 10월호, pp.66~68.

한 統一戰線을 바탕으로 한 폭력혁명투쟁에 의한 「人民政權」수립 ③ 이 人民政權과 북한의 共產政權과의 合作이라는 과정을 통한 전략이 이른바 「平和統一戰略」의 바탕이다.

또한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초청으로 「자카르타」를 방문했을 때 「알리·아르함 社會科學院」에서 행한 소위 「정치학 강연<sup>53)</sup>」을 통해 표면화된 「三大力量·三大難關論」은 이 기간중의 對南統一戰略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金日成은 "남조선혁명의 三大難關이란 ① 美帝國主義와 같은 강대한 敵이 있다는 것 ② 남한은 국내 反共力량의 集結處라는 것 ③ 남조선에서는 反共思想이 뿌리깊이 박혀 있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決定的 勝利는 다음의 「三大革命力量<sup>54)</sup>」강화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즉 ① 북한에서의 革命基地強化 ② 남조선의 革命力量 ③ 국제革命力量과의 단결이다.

결국 이 세가지 革命力量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노선에 입각한 통일 의 여건조선을 뜻하는 것으로서 북한통일정책의 변할 수 없는 기본노선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1960년대는 남한에서의 「民族解放 民主主義革命」즉 미국세력을 남한에서 逐出하고 親共產政權의 樹立을 달성하는 것이 그들의 基本戰略이라 하겠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시기의 북한의 統一方案을 분석하기로 한다.

a. 8·15解放 16周年紀念式(金一의 보고)

① 祖國의 平和統一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오직 朝鮮人民 자신의

53) 金日成,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1964. 4. 15.

54) 북한의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은 1965년 4월 15일 인도네시아에서의 강의 1년전인 노동당 중앙위 제4기 8차 전원회의(64. 2. 27)에 이미 결정되었다. 上揭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pp.108~122. 참조.



손에 의하여 民主的 基礎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의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며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② 平和的 統一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우리 民族끼리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흥금을 털어 놓고 협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③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하여 나서기만 하면 政見과 信仰, 소속의 차이와 과거여하를 불문하고 항상 그와 손을 잡고 나갈 것이다.

④ 남조선 경제를 부흥시키고 民生問題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南北交流를 실현하며 북의 강력한 경제력에 의거해야 한다.

b. 북한의 제4차 당대회 中央委事業報告에 나타난 統一方案(61. 9. 11)

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어떠한 의세의 간섭도 없이 民主主義的 기초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統一政府를 수립하는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② 총선거에 앞서 반드시 남북조선의 모든 政黨・社會團體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全朝鮮 어느 지역에서나 정치활동을 진행할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

③ 총선거는 반드시 一般的이고 平等的이어야 하며 투표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民主主義的 選舉로 되어야 한다.

④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 여하한 계급적 처지, 사회적 지위, 정견과 신앙의 여하를 불문하고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다.

그후 金日成의 제22차 소련 공산당대회(61. 10. 14).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회의에 있어서의 최용건(위원장)의 보고(62. 6. 20). 외무성이 U.N.회원국 앞으로 보낸 성명서(62. 12. 11).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최용건의 共產政權樹立 15주년 기념대회(63. 9. 8)등에서도 유사한 對南統一方案을 제

시하였는데 가장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U.N. 제18차 총회의 "한국통일문제 해결에의 길"에 관한 각서에 나타난 統一方案(63. 11. 22)이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美軍을 남조선으로부터 철퇴시킨다.
- ② 「언커크」(UNCURK)를 해체시킨다.
- ③ 一切의 외세간섭없이 자주적으로 남북총선거를 실시한다.
- ④ 남북조선의 무력불가침 및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 ⑤ 쌍방의 兵力을 10만이하로 감소한다.
- ⑥ 남북조선의 경제·문화를 교류한다.
- ⑦ 統一의 시초조치로서 「南北朝鮮聯邦制」를 실시하여 「最高國民委員會」를 설치한다.

이상 열거한 방안(61. 8. 14~63. 11. 22)이외에도 이 기간동안 북한에 의해 제외되었던 방안들의 주요 골자중 공통의 항목을 제외하고 특이한 조항이 삽입된 提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日會談을 분쇄하고 日本軍國主義者の 再侵略 저지(북한 최고인민회의 한국국회·諸사회단체인사·국회의원에게 보낸 호소문, 64. 3. 27)

둘째, 반드시 聯邦制가 아니더라도 남북조선 대표에 의하여 구성되는 통일적인 기관을 상설하여 自主的 統一을 실현할 대책을 강구하자는 準聯邦制機關 設置(金日成의 김용중에게 보낸 회신에서의 統一方案 1965. 1. 8)

셋째, 중립국 등의 알선으로 U.N.밖에서 남북한 代表의 직접협상을 통하여 한국 통일문제가 협의되도록 國際會議를 열 것(U.N. 제18차 총회에서의 인도네시아 대표의 주장 63. 12. 13)

넷째, 軍事委員會를 중립국위원회와의 교체, 엄정중립정책을 취할 것 등의 中立化案(U.N. 각국 대표에게 보낸 김용중의 서한 62. 12. 6 : 제12차 총

회 정치위원회에서의 「가나」등 중립국의 제안 62. 12. 17)

다섯째, 특히 1965년 2월 15일 발표된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連席會議에서 채택된 남한인에게 보내는 호소문은 平和統一의 실현을 위해 「韓・日會談이 타결되면 남조선 인민은 美・日帝國主義者의 이 중노예로의 전략을 전제하고 反美救國鬭爭의 전개와 美帝國主義者를 몰아내는데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선동하기까지 하였다.

1961년부터 1969년 사이에 統一方案<sup>55)</sup>을 이와 같이 제안하는 동안 이른바 「四大軍事路線」을 바탕으로 한 南朝鮮에 대한 적화전략의 두드러진 양상, 예컨대 간첩 黃泰成事件(61. 10. 20), 東伯林을 거점으로한 對南工作團事件(67. 5. 6)을 비롯하여 1968년에 접어들면서 남북간의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켰던 1. 21무공장비의 靑瓦臺기습사건(68. 1. 21), 미군함 프예블로號의 납북사건(68. 1. 23), EC-121型의 美軍用機 격추사건(68. 4. 15), 統一革命黨 간첩사건(68. 8. 26), 124군부대 소속 遊擊隊의 동해안지역 침투사건(68. 10. 30), KAL機 피납사건(69. 12. 11)등을 상기해 보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말과 행동의 이율배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 (다) 제4공화국 시기

1974년부터 1980년까지 북한의 統一方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이른바 對美 平和協定 締結提議에서 비롯되는 對美 접촉시도 및 3자회담 둘째, 金日成이 1960년 이른바 「南北聯邦制」를 처음 거론한 이후 1980년까지 간헐적으로 「南北聯邦制」에 의한 통일실현을 거론하여 주로 海外輿論을 對象으로 한 평화통일선전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오다가 1980년 10월 노

---

55) 1962. 12. 10 노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의 金日成의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가일층 강화할 데 대하여" 참조.

동당 제6차대회의 金日成 「黨事業總和報告」를 통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 제안<sup>56)</sup>. 셋째, 南北政治協商會議의 또 하나의 형태인 「大民族會議」 또는 「全民族大會」등이라고 할 수 있다.

(1) 最高人民會議 美國議會에 편지<sup>57)</sup>(對美 平和協定 締結提議 74. 3. 25)

- ① 상호불가침 및 무력충돌의 위험성 제거
- ② 무력증강 군비경쟁 중지와 무기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 일체 중지
- ③ 외국군 철수 후 외국 군사기지 및 작전기지 금지

(2) 金日成의 日本 「世界」誌 편집국장과의 인터뷰<sup>58)</sup>(76. 3. 28)

- ① 交叉承認論 반대
- ② 南韓社會의 民主化 보장 전제하의 南北對話 재개용의
- ③ 不可侵條約 반대
- ④ 對美 平和協定 체결위해 對美접촉 用意
- ⑤ 對美 平和協定 체결 후 南北韓軍縮
- ⑥ 南韓의 反共政策포기 및 民族大團結 원칙하의 合作實現

(3) 그 외의 對美接觸과 3者會談 제의

① 노동당 국제부장 金英男의 美國 記者의 의 會見(79. 5. 8)—미국과 북한이 먼저 회담하고 나중에 한국 참여가능, 미국이 철군하고 연방제를 지원하면 한국내의 미국 권익보장 ②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sup>59)</sup>(79. 7. 10)—미군철수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문제는 美·北韓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미국 요청시 남한 당국자의 업저버 참가를 허용한다면 서, 3당국회의 제안거부—에서도 되풀이 되었다.

56) 로동신문, 1980. 10. 10

57) 로동신문, 1974. 3. 26.

58) 로동신문, 1977. 5. 15.

59) 로동신문, 79. 7. 11.

(4) 金日成의 「후사크」환영연설<sup>60)</sup>(이른바 五大綱領—에서의 大民族會議)

고려연방공화국의 單一國號에 의한 南北聯邦制 실시 등의 방안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①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제63차)에서의 聲明<sup>61)</sup>(74. 11. 8) ② 金日成의 黨創建 30周年 기념식 연설(75. 10. 9)—특히 이 성명에서는 한국의 반공정책을 聯共政策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면서, 전국적인 民族統一戰線의 형성 ③ 祖國戰線 中央委 聲明(79. 1. 23) 「全民族大會」로 명칭을 변경, 남북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 각계 인사 및 해외동포의 조직대표, 개별인사까지 포함—발표 등에서도 계속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제안들을 간추려 보면 이미 앞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① 남한에 ‘法律的 條件과 社會的 環境의 改善’이라는 명분하에 민주애국인사의 정치활동허용(즉 공산당 활동의 보장) ② 統一戰線의 구축 ③ 合作形式의 聯共(연립)政府 ④ 군중집회형태의 대회 또는 회의 ⑤ 연방제 실시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 나. 북한의 「고려연방제」

### (가) 연방제의 변천과정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연방제를 선전해 오고 있으나 오늘날 그들이 내놓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이르기까지는 몇 차례의 탈바꿈이 있었다. 다만 그 시기와 여건에 따라 強調點, 修飾, 性格 등을 달리하였지만, 對南赤化統一을 노린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처음 聯邦制를 제시한 것은 1960년 8월 14일 金日成의 연설에서 비롯

60) 로동신문, 73. 6. 24.

61) 로동신문, 74. 11. 9.

된다. 그는 통일방안으로서 남북총선거를 주장하면서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완전한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자고 하였다. 4·19직후 정치적 혼란기를 이용한 대남위장평화공세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은 이 聯邦制를 간헐적으로 선전하다가 1971년 4월 12일, 당시 외 교부장이었던 許談의 이른바 「8個項 제의」속에 이 연방제를 포함시키고, 1972년 11월 3일 南北調節委員會 會議에서도 이를 제기하였다.

그 뒤 1973년 6월 23일, 마침 평양을 방문한 체코슬로바키아의 후사크 書記長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金日成이 연설을 통해 「고려연방제」로 바꾸어 내놓았다. 이 「고려연방제」는 그들의 이른바 「조국통일 5대강령(또는 5대방침)」속의 한 항목으로서 ① 軍事問題의 先決 ② 多方面的 合作과 交流 ③ 大民族會議의 소집 ④ 고려연방제 실시 ⑤ 單一國號에 의한 U.N.加入 중의 제4항에 속한다.

이 「고려연방제」가 1980년대에는 「民主」라는 수식을 첨가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탈바꿈하였다. 金日成은 노동당 제6차대회의 연설을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때까지의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제"가 아니라 "통일의 완결형태"로서의 연방제라고 선전되기도 한다.

#### (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내용분석<sup>63)</sup>

고려연방제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논리의 허구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고려연방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

63) 민주통일론(서울 : 통일연수원, 1989), pp.78~90

(선결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실현불가능하다. 그 전제조건이란

① 대한민국이 反共政策과 國家保安法 등을 폐지하고 이른바 「社會의 民主化」가 실현되어야 한다.

② 북한이 造作한 실체가 없는 단체인 소위 「통일혁명당」(1985년 7월 27일 이래 韓國民族民主戰線으로 개칭)을 비롯한 대한민국내의 모든 개인과 단체의 共產主義 活動을 合法化해야 한다.

③ 현 대한민국 정부는 反共政權이므로 퇴진해야 하고 공산주의와 손을 잡을 수 있는 聯共政權이 들어서야 한다. 그들은 이를 「民主政權」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쓴다.

④ 대한민국이 배제된 가운데 미국과 북한간에 휴전협정에 대체할 平和協定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하여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

⑤ 미국의 "분열주의적 두 개 조선 造作策動"을 저지시키며 내정간섭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先決條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이념과 체제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체제의 自進解體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를 대화의 相對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측이 고려연방제를 발표한 다음 달인 1980년 11월, 국내외 인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들의 당면 목표는 우선 연방제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 당국을 배제한 가운데 "북과 남, 해외의 各黨 各派·각계각층을 망라한 적당한 수의 대표"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른바 「선결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선전한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 「선결조건」과 양립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모순된 내용으로 연방제 실시원칙과 구조를 선전하고 있다. 즉 고려연방제는 "북과 남이 서

로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연방국가의 국호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자고 하였다.

또한 연방국가의 기구로서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기구들이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 「선결조건」과 「연방제실시원칙」과의 모순은 차치하고라도, 연방국가에 필수적인 「연방헌법」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내외의 비판과, 연방정부기구의 애매모호한 구성에 대한 비난을 의식했음인지, 金日成은 1983년 9월 9일 이른바 「政權創建 35주년 경축연회」의 연설을 통해 "연방국가의 통일 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를 북과 남이 「共同議長」과 「共同委員長」을 각각 선출하여 운번제로 운영하자"고 주장하여, 국가대표권의 非恒久性, 軍統帥權의 운영상 혼란, 등 보다 허술하고 비현실적인 또 하나의 모순을 드러내 놓았다.

셋째, 연방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일체의 교류와 협력을 앓겠다는 저의를 은폐하고, 대내외적 선전 또는 대남비방 자료로 삼을 속셈으로, 연방제 실시 뒤의 정책을 장황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聯邦機構를 통해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수립된 뒤 시행할 정책으로서 이른바 「10大施政方針」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국가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自主政策 실시
- ② 전지역·전사회의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대단결 도모.
- ③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여 민족경제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킴
- ④ 과학·문화·교육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실시하여 민족문화의 전통과 민족교육을 발전시킴
- ⑤ 북과 남의 교통·체신을 연결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자유로운 교통·체신시설을 활용함.
- ⑥ 노동자·농민을 비롯하여 전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를 집중적으로 증진시킴
- ⑦ 북과 남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
- ⑧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옹호
- ⑨ 통일이전의 대외관계의 올바른 처리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정
- ⑩ 통일국가로서 우호적 평화에호적 대외정책 실시

(다) 「고려연방제」와 관련한 對南提議

북한은 이상과 같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국통일 방안"이라고 선전하면서 이의 실현을 노린 對南提議를 되풀이하고 있다. 「方案」자체가 허구적인데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提議」에 논리성이나 진실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방적인 정치선전을 담아 「提議」라는 이름으로 국내외에 내보내고 있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거니와 결과적으로 민족적 자존마저 해치고 있

는 것이다.

「고려연방제」와 관련한 대남제의 및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 등에 관해서는 그 설명을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북한의 對南提議를 일람표 형식으로 소개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對南 提議 一覽表

提議名(일자)	提議機構・形式	背景 및 骨子
「고려연방국」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80. 11. 11)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국의 배제한 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각계인사로 구성</li> <li>• 국내외 각계인사에 편지</li> </ul>
민족통일촉진 대회 소집 (81. 8. 6)	「정당・사회단체연합」성명 (祖戰 中央委 決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결조건」실현위한 대회</li> <li>• 우리의 「6・5제의」 「올림픽 단일팀 구성제의」에 대한 반응</li> </ul>
남북 정치인 100人 연합회의 (82. 2. 10)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 대표50人 명단 일방적 지명 공포</li> <li>•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및 「20개 시범사업 제의」에 대한 반응</li> </ul>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 회의 (83. 1. 18)	「당 사회단체 연합」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미군 철수의 단일 의제</li> <li>• 「남북의 각3개 정당대표」로 예비회담.</li> </ul>
연방기구 운영 방안 방안 (83. 9. 9)	金日成 연설 (9.9절 경축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의장·공동위원장제로 운번제 운영</li> <li>• 국제적비판에 대한 대응</li> </ul>
3자회담 (84. 1. 11)	중앙인민위 및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先 미국과 평화협정 後 우리와 불가침선언</li> <li>* 군사문제 선결</li> <li>• 아웅산 사건과 관련한 위장 평화전술</li> </ul>
수재물자 제공 제의 (84. 9. 8)	북한 적십자회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남 수재물자 제공</li> </ul>
북남국회 회담 (85. 4. 9)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성명 및 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석회의 또는 대표회의</li> <li>• 불가침 공동선언문제 협의</li> </ul>
남북대화 중단 성명 (86. 1. 20)	남북회담 북한측대표단의 공 동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스피리트훈련 구실</li> </ul>
군사3당국자회담 (86. 6. 17)	「인민무력부장」(오진우)의 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훈련중지 및 군비축소</li> <li>• 모든 회담재개의 전제조건화</li> </ul>

<p>「고위급정치군사 회담」</p> <p>86. 12. 30</p> <p>87. 1. 11</p> <p>87. 1. 30</p> <p>87. 3.</p>	<p>「최고인민회의」제8기 1차회의에서의 김일성의 「시정연설」(86. 12. 30)정무원 총리 및 인민무력부장의 대남편지</p> <p>※ 방송을 통한 공개제의 (87. 1. 11)및 서한(87. 1. 30, 3.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단 - 부총리급(단장), 군총참모장급(부단장)포함 7-9인</li> <li>• 議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 (비방중상 중지 및 다방면적 합작교류)</li> <li>2)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무력축소, 군비경쟁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연습중지, 중립국 감시군 조직)</li> </ol> </li> <li>• 기존대화재개의 전제조건화</li> </ul>
<p>「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예비 회담</p> <p>(87. 3. 30)</p>	<p>「정무원총리」의 대남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리회담(3. 14제의)수락 및 장관급 예비회담제의 (87. 4. 23·판문점)</li> <li>• 선 총리회담, 후 기존대화 재개 주장</li> <li>• 의제를 군사문제에 국한</li> </ul>
<p>남북대화 전면 거부 성명</p> <p>(87. 4. 24)</p>	<p>정무원 대변인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7. 4. 10자, 우리측의 기존대화 재개 제의에 대한 거부 반응</li> <li>• 대화 중단 책임의 전가</li> </ul>

<p>「다국적 군축 협상」 (87. 7. 23)</p>	<p>정부성명 ※ 「정부성명」 형식은 이색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담형식 : 남북한 및 미국의 회담에 중립감독위 성원국(4국)대표가 방청참가(1988년 3월, 제네바)</li> <li>• 의제 : 1) 88 - 91년 까지 단계적 무력축소 (1992년부터 각각 10만이하 병력유지)</li> <li>2) 단계적 미군철수(1992 - 완전철수)</li> <li>3)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li> <li>4) 중립국 감시군 주둔</li> <li>• 87년말까지 인민군 10만 일방적 축소</li> <li>• 「정치군사회담」의 직접대화 논리에서 다시 「3자 회담」으로 후퇴</li> </ul>
<p>「3자의무장관 회담」 (87. 8. 6)</p>	<p>외교부 대변인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외무장관 회담」제의 (87. 8. 3)에 대한 「3자 회담」(미국무장관 포함)의 선전 논리</li> <li>• 차관급 예비회담(87. 8월 말)제의</li> <li>• 쌍무적 예비접촉 주장</li> <li>※ 미·북한의 공식접촉 시도</li> </ul>

<p>「남북연석회의」 (88. 1. 1)</p>	<p>김일성의 「신년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범위 : 당국·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재야의 개별인사</li> <li>• 협의사항 :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문제, 군축문제, 올림픽 공동주최문제, 비방증상 중지문제</li> </ul>
<p>「남북연석회의」를 위한 예비회담 (88. 1. 14)</p>	<p>중앙인민위·정무원·제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허담 명의의 편지)</p>	<p>일시 : 88. 2. 19 장소 : 판문점 대표 :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5-7인</p>
<p>남북학생회담 (88. 4. 2)</p>	<p>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및 조선학생위원장 공동명의 편지)</p>	<p>일시 : 88. 6. 10 장소 : 판문점 ※ 88. 3. 29,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의 "국토중단순례" 실현공약에 대한 반응</p>

<p>「남북국회연석회의」 (88. 7. 21)</p>	<p>「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의 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 :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li> <li>• 회담형식 : 예비회담없이 연석회의</li> <li>• 일시 및 장소 : 8월 중 평양</li> <li>※ 88. 7. 9, 우리 국회의 "88서울올림픽 참가촉구 결의" 통보에 대한 반응</li> <li>• 북한은 동일자로 미국 상하 양원에 미·북한 국회회담을 제의</li> </ul>
<p>「고려연방제」실무협의를 위한 평화통일위원회 구성(88. 9. 8)</p>	<p>「정권창건 40주년기념연회」에서의 김일성의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결조건으로 미군철수 및 남북한간 불가침선언을 제시</li> </ul>
<p>「평화보장4원칙 및 포괄적 평화보장안」발표 (88. 11. 7)</p>	<p>「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및 정무원 연합회의」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원칙 : ① 통일지향 ②외군철수 ③ 감군 ④ 당사자 협의(3자)</li> <li>• 방안 : ① 단계적군축 ② 정치군사적 대결완화</li> </ul>

<p>「남북고위정치군사회담」 (88. 11. 16)</p>	<p>「정무원 총리」의 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 :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완화 (비방중상 중지·체제반대법제 폐지·합작교류·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군사연습 중지·군사책임자간 직통전화)</li> <li>대표 : 부총리급을 대표로 7-9인</li> <li>일시 : 88. 12월 중순</li> <li>※ 전항의 평화공세의 일환</li> </ul>
<p>「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위한 예비접촉 (88. 12. 9)</p>	<p>「조국평화통일위원장」(허담)의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재야단체의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제창을 수락하면서 남북 및 해외동포 대표의 예비접촉 제의</li> </ul>
<p>「3자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88. 12. 20)</p>	<p>「정무원 총리」(연형묵)의 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및 미국의 차관급 실무대표</li> <li>• 12월중 제네바 등 제3국</li> </ul>



북한의 모든 제의에서는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主權을 무시하는 전략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른바 「선결조건」의 실현, 즉 赤化여건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연방제도 통일하기 전에는 일체의 교류·협력을 거부한 「고려연방제」의 구조(10대 시정방침)도 「경제회담」에 호응해 오고 「체육회담」을 운위하는 데서 이미 그 실효성이 무너져 버렸다.



# 北韓의 統一政策과 統一論議 開放의 得과 失

1989

研究責任者  
李華洙  
(亞洲大)

國土統一院



## 要 約 文

北韓은 진심으로 統一을 원하는가? 그들이 말하는대로 平和的 統一을 원하며 또 진심으로 可能하다고 생각하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方式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와같은 質問에 대하여 여러 學者와 專門家들이 그 답을 찾으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北韓이 主張하는대로의 誠實성과 實現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研究家들의 일반적인 分析인 듯 하다. 그러면 과연 北韓의 統一理念은 무엇이며, 北韓의 統一政策의 段階的文化는 어떻게 進行되어 왔는가?

먼저 北韓은 南韓政府를 認定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立場에서 出發하고 있다. 즉, 北韓만이 韓半島에서 유일한 正統성을 갖기 때문에 南韓은 어떤 方法으로라도 붉은 旗아래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고집해 왔다.

여러 문헌에서는 1945년 이후 6·25사변이 끝나던 1953년까지를 이런 理念의 지배하에 武力赤化統一을 시도한 時期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平和統一攻勢를 취하고 聯邦制案을 내세우고 있는 시기에도 이러한 이념을 포기했다는 예증이 분명치 않으므로 표면상에 내세운 主張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問題로 남아 있는 것이다.

休戰협정이 있는 후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主張의 영향에 힘입어 北韓은 平和攻勢를 취했으나, 다시 武力行使를 중시하는 시기로 돌아갔다. 韓國의 4月革命이후 혼란기 부터 시작하여 南韓에서의 미제추방, 혁명봉기를 부추기는 路線으로 바뀌었다. 1962년 3월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3차 全員會議에서 당시 소련이 추구하던 平和共存論을 비판하고서 革命(武力行使)의 결의를 표명했다. 또 1966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의

政綱發表에서도 革命路線을 선포하였다.

70년대에 들어서 北韓은 外樣상 對話를 표방한 統一論議를 전개하는 듯 했다. 그 결실로서 「7·4남북공동성명」을 合意하기에 이르렀다. 北韓은 초기에는 3大原則으로 自主, 平和, 民主를 내세우더니, 7·4공동성명 이후에는 平和, 自主, 民族大團結을 사용했다. 그러나,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의 「祖國統一 5大綱領」에서는 ①軍事的 대치상태 및 긴장완화, ②다방면의 合作과 交流의 實踐, ③南北各계各층의 이민들과 政黨, 社會團體 代表들로 구성되는 大民族會議의 召集 ④「고려연방공화국」이란 단일 국호아래 南北 聯邦制의 실시 ⑤고려연방공화국의 이름으로 UN에 가입할 것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 속에 暗示的으로 깔려 있는 北韓의 의도는 韓國政府를 약화시키고 革命力量을 강화하며, 국제적 지원을 감소시키고, 北韓의 地位를 향상시킨다는 것등으로 해석된다. 1980년 南韓의 政情이 불안할 때에 北韓은 南北總理會談을 제의하였고, 그 가을 勞動黨大會에서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의 提議와 함께 몇가지 前提條件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별로 의도나 목적의 變化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1983년 버마사건과 같은 폭발압살을 하는 등 80년대 초기를 爆力 革命戰略期로 삼고, 南韓의 左派勢力을 부추기는 攻勢를 취했다. 그러다가 1985년 赤十字會談, 經濟會談에 이어 國會實務會談까지 하면서 부분적으로 合意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1985년부터 한쪽으로는 다양한 對話를 추진하면서 南韓人들로 하여금 對北警覺心을 누그러 뜨리고 北韓同調勢力이 활동하도록 격려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경제적, 기술적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南韓을 어떤 方法으로라도 吸收하여 北韓式의 統一을 한다는 근본적 의도는 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

에도 如實히 드러나고 있다. 이 案은 60년대의 南北聯邦制, 70년대의 高麗聯邦制를 계승한 것인데, 北韓의 聯邦制는 國家聯合인지 聯合國家인지 그 개념이 애매하여 理論上, 內容상의 모순이 많고 實現可能性이 거의 없다. 80년대 중후반기에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연방제 제의로 공세를 취하면서 南韓內의 左派勢力을 자극시키고 있다.

한편, 제6공화국 출범이후 7·7선언과 北方政策이라는 정부자세의 변동과 함께 연속적인 밀입북사건이 일어나고, 무분별한 統一論議가 일어나는등 많은 혼선과 不協和音이 발생했다.

정부나 기성 정당 그리고 우익인사들이 共有하는 前提는 自由民主主義(또는 議會民主主義)體制는 양보할 수 없으며 고수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반하여, 급진적 입장을 취하는 재야인사들이나 학생운동권의 주장은 民族이라는 神話를 내 세워 북한식이건 남한식이건 그 결과는 어떻든지 통일만 되면 되지않느냐는 論理를 前提로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여 革命을 통한 民衆 主體의 통일을 해야한다는 극좌의 論理를 근거로 한 主張도 있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우리의 통일정책은 무엇으로 統一되어야 하는가 하는것이 분명해져야 함이 우선 當面課題이며, 난맥상의 계속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략을 돕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내 統一意見의 對立을 고착화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政府는 合意된 統一方案의 作成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主導權을 행사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된다. 먼저 四黨의 統一方案을 綜合, 合意하여 하나로 만들고, 在野의 意見들을 모아 研究作業을 하는 동시에 政黨, 社會團體, 在野團體, 學生, 學界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統一方案 協議機構를 형성하여 하나의 統一方案으로 종합, 합의하는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目 次

1. 序 言 .....	99
2. 北韓의 統一政策 .....	101
(1) 統一理念 .....	101
(2) 統一政策의 段階的 變化 .....	103
1) 武力統一試圖期 (6. 25사변까지) .....	104
2) 平和統一標榜時期 (휴전이후 60년대 초까지).....	105
3) 軍事路線과 革命力量 強化時期 .....	107
4) 對話時期와 民族統一 5大綱領 .....	108
5) 北韓의 高麗聯邦制 統一方案 .....	110
3. 在野·學生들의 統一論議 .....	115
(1) 문익환 (민통련 의장)의 견해 .....	115
(2) 韓國基督教 協議會 (KNCC)의 主張 .....	116
4. 統一論議開放의 得과 失 .....	119
5. 結 語 .....	120



## 1. 서 언

北韓은 진심으로 統一을 원하는가?

그들이 말하는대로 평화적 통일을 원하며 또 진심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方式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북한의 통일정책이 그 내용면에서 一貫性이 있는 신뢰할만한 근거를 지니고 있는가? 또 그들이 표방하는 대로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戰略的인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인가?

이와 같은 많은 질문에 대하여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답을 찾아 모색하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이 주장하는대로의 성실성과 實現性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연구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인듯 하다. 그런가 하면 일부 在野의 주장이나 학생들의 주장은 북한의 정책이나 전략에 동조하면서 도리어 남한의 주장을 남·북분단 固着化, 永久化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 및 기성 우익집단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反統一 勢力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民衆主體 統一論”과 같은 투쟁이나 혁명적 방법으로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까지 노출시키게 되었다.

한편 統一論議의 開放으로 통일에 대한 열기가 고조된 가운데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노출되었고, 또 많은 토의를 통한 진전이 있어 왔다. 그러나 7.7선언과 北方政策이라는 정부자세의 변동과 함께 연속적인 밀입북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많은 혼선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유사한 주장들 가운데는 그럴듯한 생각들이 있지만 實現可能性이 없는 지나친 當爲論으로 일관한 듯한 주장들이 있는가 하면 그 準據의 틀이 달라 상당한 불일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정부나 기성 정당 그리고 우익인사들이 공유하는 전제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의회민주주의)체제는 양보할 수 없으며 고수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반하여 급진적 입장을 취하는 재야인사들이나 학생운동권의 주장은 民族이라는 神話를 내세워 북한식이건 남한식이건 그 결과는 어떻든지 통일만 되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주장에 그래도 동조하여 革命을 통한 民衆 主體의 통일을 해야한다는 극좌의 논리를 근거로 한 주장도 있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우리의 통일정책은 무엇으로 통일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 우선 當面課題이며 난맥상의 계속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략을 돕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내의 통일의견의 대립을 고착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 2. 北韓의 統一政策

北韓의 統一政策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그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어 왔으나 그 저변을 흐르고 있는 思想的 理念的 논리의 변화는 그리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지 않는다. 소위 革命一世의 지도자 金日成의 神格化된 체제이기 때문에 지난 40여년간 통일 이념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없었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그가 살아 있는 한 金日成 唯一思想體制하의 통일이념은 별로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통일정책의 변화가 있어왔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들어오면서 그 표방하는 내용과 외양의 변화가 조금씩 있어 왔지만 그것은 南韓의 國內的 狀況과 국제적 환경요인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었지 기본노선의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못된다. 다시 말하면 정책내용의 변화는 전략적 변화로만 보아야 하며 목표나 이념이 전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말이다.

### (1) 統一理念

북한의 입장에서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目標내지 當爲論的인 必要性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은 남한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 왔으며 부당한 그들의 주장을 合理化하기 위하여 몇가지의 이유를 제시해 왔다.<sup>1)</sup> 1) 남한정부는 美國의 지원으로 수립되었으며, 2) 美軍에 의해서 강점된 美帝의 植民地 상태에 있으며, 3) 남한은 친일파와 봉건 지주계급이 집권했으나 북한은 항일투쟁의 혁명투사들로 정권을 이루

1) 閔丙天, 「民族統一論」, 고려원 1985, 178-9면에서 1)과 2)가 제시되어 있다.

어 북한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正統性을 갖는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붉은旗 아래 흡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해 왔다. 여러 문헌에서는 1945년 이후 6. 25사변이 끝나던 1953년까지를 이런 이념이 지배하던 시기로 구분하고 武力赤化統一을 시도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그후 平和統一攻勢를 취하고 聯邦制案을 내세우고 있는 시기에도 이러한 이념을 포기했다는 예증이 분명치 않으므로 표면상에 내세운 주장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休戰協定이 있는 후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주장의 영향에 힘입어 북한은 평화공세를 취했으나 다시 무력행사를 증시하는 시기로 돌아갔다. 한국의 4월혁명 이후 혼란기부터 시작하여 남한에서의 미계추방, 혁명봉기를 부추기는 노선으로 바뀌었다. 1962년 3월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3차 全員會議에서 당시 소련이 추구하던 平和共存論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임무는 북반부에서 쟁취한 혁명의 쟁취물을 지키는데 그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조선 동포들을 지원하여 남조선 혁명을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전조선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임무가 있습니다.”<sup>3)</sup>

라고 혁명(무력행사)의 결의를 표명했다. 또 1966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의 政綱發表에서도 革命路線을 선포하였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민족적 임무이

2) 閔丙天, 앞의 책. 鄭用吉, 「分斷國統一論」, 고려원, 1989, 제6장. 金明基, 「南北韓聯邦制 統一論」, 探究苑, 1989.

3) 金正煥, “北韓의 對南戰略”, 民族統一中央協議會, 「統一」, 1981년 8월호(창간호), 182면

며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남조선에서 인민의 투쟁이 고조되고 혁명정세가 성숙되고 우리의 지원을 요구할때는 언제나 남조선 인민들과 힘을 합하여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할 결정적 투쟁에 동원될 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다.”<sup>4)</sup>

위의 인용문에서 분명한 것은 평화공세로 추세에 따른 전략이며 남조선 혁명과 무력의 가능성을 다시 시사한 것도 전략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80년대들어서 「高麗民主聯邦制」案을 주장하면서도 재야의 지도자들이나 運動圈을 부추기면서 남한내의 소란스런 시기를 이용하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작금의 북한의 행위와 계속적 준비의 증강과 反美鬭爭등의 북한 대남방송이나 비난들은 아직도 무력통일의 의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예증하는 것이다. 또 무력사용을 시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남한내의 세력들을 부추겨 혁명적 상황을 조장하고 赤化統一을 해야한다는 당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명약관화하다고 하겠다.

## (2) 統一政策의 段階的 變化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時期的 狀況과 추세에 맞추어 통일정책을 변화시켜 왔으나 사실상 그 理念과 目標의 變化가 없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북한식의 통일이야 한다는 전제가 잠복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깊은 의구심을 불러 이끈다. 共產主義者들은 원래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거짓과 사기를 조금도, 잘못된 非倫理的인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내놓은 언어적 표현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나이브한 것임은 말 할 필요

---

4) 金南植, “南北韓의 統一論 및 統一政策”, 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 調查研究所, 「東西獨과 南北韓」, (서울 ; 1973), 411-412면.

도 없다. 아무튼 북한이 내놓은 政策內容의 변화과정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 1) 武力統一試圖期(6. 25사변까지)

이 시기는 북한에서는 政治的 基地를 공고히 하고 공산세력의 정권을 다지면서 한 편으로는 對南韓 政治工作을 수행하면서 武力戰爭을 이르켜 통일한다는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48년 9월 9일 북한 共產政權이 수립된 직후 북한 정권은 즉시 통일문제를 제기했다. 첫째는 最高人民會議가 全民族을 代表하는 유일한 기구이며, 둘째 통일의 조건으로 外國軍의 한반도로 부터의 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sup>5)</sup> 그때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주장하는 절대주의적 유일이론과 외국군 철수 전제라고 볼 수 있다.

UN이 남한정부를 合法政府로 인정하면서 국제적으로 불리해 진 북한은 1949년 1월 좌익연합체인 「祖國統一 民主主義 前線」을 결성하고 6. 25 일주일전 1950년 6월 19일에는 「南北韓 國會」統속에 의한 단일입법기관의 결성등의 통일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것은 물론 偽裝術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북한은 당시 北韓을 民主基地로 구축하고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실제적 정책하에서 남침을 감행한 것이었다. “조국 통일을 위하여……우리는 두가지 방면에서 일을 잘 해야겠다. 한 방면으로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꾸준히 우리 당의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미제와 역도를 반대하여 쫓기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방면으로는 북반부 민주기지를 철옹

---

5) 閔丙天, 위의 책, 183면.



성같이 강화해야 한다.”<sup>6)</sup>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의 부수상겸 외무상이었던 박헌영 역시 北韓의 民主基地의 鞏固化와 남한에서의 蜂起助長과 武裝戰爭이 통일의 수단이라고 천명하였던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기습적 南侵을 감행한 북한은 6월 26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남반부에 수립된 반인민적인 파쇼적 이승만 괴뢰정권을 소탕하고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해방하며, 남반부에 참다운 인민정권인 인민위원회를 부활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의 깃발아래 조국통일을 달성하고 강력한 민주독립 국가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전쟁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의 전쟁이다.”<sup>7)</sup>

휴전이 이루어지던 시기인 1953년까지는 무력을 사용하여 남한을 解放내지 吸收시킨다는 정책을 일관하여 수행한 것이다.

## 2) 平和統一標榜時期 (휴전이후 60년대초까지)

1953년 7월 3일 休戰協定이 이루어 진후 북한은 전후의 復舊事業과 金日成의 리더쉽의 구축을 위하여 平和統一을 표방하면서 잠정적인 정책적 변화를 僞裝하는 攻勢를 폈다. 1954년 제네바 政治會談에서 북한 대표 南日에 의하여 제시된 통일방안은 아래와 같다. 1)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의 수립, 2) 남북한 대표로 「전조선위」의 구성, 3) 6개월이내의 외군철수, 4) 남·북한 군의 각10만이하로의 감군, 5) UN의 한반도에 대한 결의사항 불인정, 6) 각국의 평화통일조건 조성등이었다.<sup>8)</sup>

6) 李禎秀, “北韓統一方案의 性格變化에 關한 體系的 研究(1953-1973),” 平和統一研究所, 「統一政策」 제5권, 제2호 (서울 : 1979), 178면.

7) 金正煥, 위의 책, 182면.

8) 閔丙天, 위의 책, 184면과, 鄭用吉, 위의 책, 328면.

이러한 統一方案은 어디까지나 종래의 立場을 고수하면서 궁극적인 革命 赤化路線을 버리지 않은 채 평화통일을 표방한 것으로 60년대 초까지 지속된 주장들이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實現可能性이 없으며 宣傳攻勢를 펴기 위한 방패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파탄된 경제를 복구하는 시기에 한반도의 평화가 필요했고, 또 전쟁도발의 당사자로서의 국제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평화공세를 펴야만 했을 것이다.

1956년 제3차 勞動黨大會를 계기로 평화통일선전 공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平和統一宣言文」에서 표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sup>9)</sup> 1) 총선에 의한 통일정부수립, 2) 정전의 평화로의 전환, 3) 남북접촉과 협상, 4) 반미투쟁, 5) 평화유지 및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정체결 등이었다. 종래의 주장에 첨가된 것은 남북접촉과 협상이라는 柔和의 부분과 國際協定締結이라는 부분으로 이는 미국에 대한 제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1958년 中共軍이 북한에서 鴨綠江 북쪽으로 철수한 후에는 미군이 먼저 철수한 후 총선을 통해 통일해야 된다는 주장을 거세게 하면서 평화통일공세를 폈다. UN의 平和維持軍의 형식으로 오게된 미군이 남한에 있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명분으로나 실제면으로 불리한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미군철수란 통일주장의 先行條件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四月革命으로 自由黨政權이 무너지고 民主黨政權이 들어서던 혼란의 시기였던 1960년 金日成은 8.15경축사에서 「聯邦制」를 제의하였다. 당시 국제적으로 북한의 승인이나 지지면에서 위상이 나쁜 탓으로 남한과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고, 또 聯邦體制속에서 統一前線을 형성하며 자유롭게 赤化統一을 진행시킬 수 있으리라는 계산하에서 연방제안이 제기된 것으로서 그 후에도 여러번 제기되다가 1973년 「5大綱領」의 하나가 되어 오늘날까지

---

9) 앞의 책, 185면.

북한의 통일방안의 기본이 되어 오고 있다.

### 3) 軍事路線과 革命力蠶強化 時期

4월혁명의 어수선한 시기에 남한을 뜻대로 하지 못한 북한은 1961년 中共 및 蘇聯과 軍事安保體制를 맺은 후 그 이듬해 四大軍事路線을 채택한 후 폭력통일노선을 적극화하였다.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라는 4대군사노선과 남한을 革命化하고 필요한 경우에 武力行事로 한다는 방침으로 旋回한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광범한 反美民主解放前線을 결성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제1단계로서는 통일전선의 투쟁을 통하여 미군을 철수시키고, 제2단계에는, 남한의 민주(용공, 내지 친공을 의미함)세력으로 정권을 장악케 하며, 제3단계로는 「북한의 애국적 사회주의 세력」과 「남한의 애국적 민주세력」간의 협상을 통하여 한국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것이었다.<sup>10)</sup>

그러나 평화적 통일이라는 표현은 暴力的 統一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풀이되어야 한다. 북한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여 「민주역량」을 확보하고, 남한의 人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南朝鮮革命力量을 強化시키고, 남한의 혁명적 상황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武力支援(侵攻)으로 통일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sup>11)</sup>

1970년 11월 勞動黨 第5次大會에서 무력적 통일론을 더욱 명확해 졌다. 전쟁준비완료를 확인하고 남한혁명을 성취시킬 것을 뚜렷이 하고 있다. 김일성은 보고에서 “남조선에 참다운 인민정권이 서면 공화국 북반구의 사회

10) Kim Il Sung, Selected Works, Vol. II (Pyongyang :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65), p. 212.

11) 閔丙天, 위의 책, 188면.

주의 역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이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은 순조롭게 실현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sup>12)</sup> 그 이듬해 외교부장 허담이 最高人民會議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남한에 있어서의 폭력혁명에 의한 통일을 강조했다.

#### 4) 對話時期와 民族統一 5大綱領

對話를 標榜한 統一論議는 1971년 여름 大韓赤十字의 이산가족찾기 운동의 제의 이후에 1970년대에 거쳐 전개되었다. 1971년 4월 12일 북한 의상 허담은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남북한 다방면적 교류와 협조의 실현 편지와 인사왕래, 그리고 「南北政治協商會議」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였다.<sup>13)</sup> 남북한의 비밀협상을 통해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7. 4 남북공동성명」은 세가지 점의 合意事項에 기초하고 있다.

①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③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적십자회담이 진행되고 調節委員會의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북한이 노리는 의도가 다시 분명해 졌다. 1972년 12월 27일에 改定된 북한의 새헌법 제5조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

12) 앞의 책, 188면.

13) 李洪九外 共著, 「分斷과 統一 그리고 民族主義」(서울 : 博英社, 1984), 216면.

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sup>14)</sup>고 통일의지를 밝히고 있다.

북한은 초기에는 3大原則으로 自主, 平和, 民主를 내세우더니, 7.4공동성명이후에는 평화, 자주, 민족대단결을 사용했으나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의 「祖國統一 5大綱領」에서는 ① 군사적 대치상태 및 긴장 완화, ② 다방면의 합작과 교류의 실천, ③ 남북각계 각층의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④ 「고려연방공화국」이란 단일국호아래 남북연방제의 실시 ⑤ 고려연방공화국의 이름으로 UN에 가입할 것들을 주장하였다.<sup>15)</sup>

이러한 일면의 주장들 속에 暗示的으로 깔려 있는 북한의 의도는 韓國政府를 약화시키고 革命力量을 강화하며, 국제적 지원을 감소시키고 북한의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것등으로 해석된다. 1980년 南韓의 政情이 불안할 때에 북한은 南北總理會談을 제의하였고, 그 가을 勞動黨大會에서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의 提議와 함께 몇가지 前提條件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별로 의도나 목적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1983년 버마사건과 같은 爆發暗殺을 하는 등 80년대 초기를 暴力革命戰略기로 삼고 남한의 左派勢力을 부추기는 攻勢를 취했다. 그러다가 1985년 赤十字會談, 經濟會談에 이어 國會實務會談까지 하면서 부분적으로 합의하는데까지 이르렀다. 1985년부터 한쪽으로는 다양한 대화를 추진하면서 남한인들로 對北警覺心을 누기고 北韓同調勢力이 활동하도록 격려하면서 국제적으로는 경제적 기술적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1989년 오늘에 이르기 까지도 남한을 어떤 方法으로라도 吸收하

14) 國土統一院, 「南北資料集」(서울 : 1978), 1353면.

15)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 「民族統一論」(서울 : 1984), 141면.

여 북한식의 통일을 한다는 근본적 의도는 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北韓 密入國 事件들은 남한을 分裂시키고 자기들의 革命戰略路線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국에는 赤化統一하여야 한다는 숨은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 5) 北韓의 高麗聯邦制 統一方案

### ① 60년대 南北聯邦制

북한은 1960년 민주당정권이 수립된 당시 無分別한 통일안이 혼란하게 일어나던 시기에 8. 15경축사에서 金日成이 南北聯邦制案을 제의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연방제안이며 “과도적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는대로 國家聯合 (Confederation)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당분간 남북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 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한다면 조국의 완전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남조선의 경제적인 파국을 수습할 수 있게 할 것이다.”<sup>17)</sup>

이 안은 상세한 내용이 없이 하나의 아이디어로만 제기 되었다. 그 후에도 1962년 10월에, 1965년 1월에 계속해서 그 아이디어가 제창되었으며, “연방제의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남북조선 대표들로 구성되는 어떤 다른 형태의 통일적 기관을 창설”할 것을 주장하고 예컨대 “경제위원회”를 둔바 있다.<sup>18)</sup>

16) 國土統一院, 「南北對話白書」(서울 : 南北調節委員會, 1985), 159면.

17) 國土統一院, 「北傀의 聯邦制 關聯資料集」, 國統정 78-6-1415(서울 : 國土統一院, 1978), 19면.

18) 國土統一院, 北韓, “南北聯邦制”批判 : 심포지엄 결과보고서(서울 : 國土統一院, 1980), 24-25면.

## ② 70년대 高麗聯邦制 提議

1971년 4월 허담의 “평화통일방안” 8개항목의 보고에서 제기되었다. 여기에서도 “과도적인 조치로서 연방제를 두었다가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 민주주의 정부를 세울것”을 주장하였다. 1972년 5월과 9월에 김일성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반복하였고, 1972년 11월 16일 평양방송은 제의하는 남북연합제가 “국가연합”도 아니고 미국, 캐나다등 서방의 연방과도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72년 6월 13일 金日成은 체코의 연설에서 “祖國統一 5大方案”을 제시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처음으로 내 세웠으며 “大民族會談”의 소집을 주장한것이 종래의 주장과 다른 특색이었다. 같은 해 9월 8일 김일성의 연설에서 고려연방국의 창설은 다시 제창되었다.<sup>19)</sup> 1975년 김일성은 외신기자와의 회견에서 연방제는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호로 통일국가로 출현하며 국내적으로는 남북쌍방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이 “合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연방제를 “합작”의 개념으로 연결시켰다.<sup>20)</sup> 1975년 10월 기자회견에서 김일성은 UN군의 해체, 미군의 철수등을 전제하면서 남북한의 완전한 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동년 12월 6일 평양방송은 “最高民族會議”는 주권기구가 아니며 남북의 “合作과 交流”를 협조하고 보장하는 기능만 수행한다고 해설하기도 하였다.<sup>21)</sup>

이와같이 70년대에 계속하여 비슷한 내용의 연방제를 계속 제의하였다.

## ③ 80년대 高麗民主聯邦共和國 提議

1980년 10월 15일 勞動黨 第6次大會에서 金日成은 그의 보고를 통하여

19) 金明基, 위의 책, 96면.

20) 앞의 책, 97면.

21) 같은곳.

“高麗民主聯邦共和國” 統一方案을 提示하였다. 종래의 명칭에다 “民主”라는 단어를 추가하였고 60년대, 70년대 주장해 온 연방안은 과도기적인 것이었으나 이 안은 “통일된 연방국가”라고 변경하였고 10大施政方針을 밝힌 것이 그 특징이었다.

10大施政方針에는 먼저 3대 전제조건이 제시되었다.

첫째조건 : 헌정권의 타도와 사회민주화의 실현 - 반공법, 국가보안법 철폐, 폭압통치구조의 철폐, 민주인사와 애국인민의 석방 및 형벌의 무효화, 민주주의 정권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조건 : 긴장상태의 완화와 전쟁위험의 제거 -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주한미군의 철수

셋째조건 : 미국의 한반도 간섭의 종지 - 미국의 두개의 조선 책동의 저지, 조선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종식되어야 한다.

10大施政 方針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sup>22)</sup>

- ① 자주성 견지 및 자주적 정책실시
- ② 민주주의의 실시
- ③ 경제적 합작과 교류
- ④ 과학·문화·교육의 교류·협조
- ⑤ 교통통신의 연결과 자유로운 이용
- ⑥ 근로대중의 생활안정의 도모
- ⑦ 군사적 대기상태의 해소, 민족연합군 조직, 쌍방군대 10만내지 15만으로 감축, 군사분계선 제거, 민간군사조직의 해산
- ⑧ 해외동포의 권리와 이익옹호
- ⑨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정
- ⑩ 평화애호적 대외정책의 수행

---

22) 앞의 책, 98-100면.



金日成은 1983년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35주년 기념 연설에서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안에 참가하여 “최고민족연방회의”의 공동의장과 “연방상설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각각 남북에서 선출하고 운변제로 운영의 책임을 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의 연방제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걸쳐 그 내용의 일관성이 없고 國家聯合인지, 聯合國家인지 그 개념이 애매하고 “10大施政方針”에도 聯合國家에 적합한 요소와 國家聯合에 맞는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어 그 성격이 분명치 않다. 單一民族 聯合軍 組織이나, 대외적으로 唯一代表權을 行使하자는 등의 조건은 연합국가적 요소이며, 남북의 각각의 自主權의 행사, 남북이 각기 독자적 대외관계를 유지한다는 요소들은 국가연합적 성격으로 내포되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이 연방제를 제의해 오는 것은 남한의 국내사정이 혼란할 때에 그 빈도 수가 잦으며, 또 南北對話 이전에는 無條件的 聯邦制實現을 제의했으나, 남북대화 이후에는 수락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연방제를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런 북한의 행동은 진정으로 평화적 통일을 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國際的 宣傳策으로 그렇게 한다는 질은 인상만을 남긴다.

또 연방제 자체의 개념도 불명확하며, 이론상, 내용상의 矛盾이 많고 實現可能性이 거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하여 제의하곤 하였다. 이러한 모순과 비현실성을 여기에서 일일이 지적할 필요도 없다. 이와같은 것을 그들의 사고가 非論理的이어서 인지, 의도가 그래서인지 명확히 답하기는 어려우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들의 無誠意한 태도 내지는 虛構性을 들어 내 보이는 것이며, 기회만 주어지면 赤化統一을 한다는 의미를 짚게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을 보더라도 헌법적 장치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으며 북한이 의도하면 쉽게 탈퇴할 수도 있으며, 남북이 상호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면 혼란된 공산주의자들을 많이 남파하여 남한을 적화할 수도 있으리라는 계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중후반기에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연방제 제의로 공세를 취하면서 南韓内の 左派勢力을 자극시키고 있다. 1984년부터는 “朝·美平和協定締結”과 “南北不可侵宣言”을 위한 3자회담을, 87년에는 多國籍 軍縮會談을 제의하면서 남북한과 미국의 회담에 4개국 中立國 監督委員을 두어, 1988년에서 91년까지 武力縮小, 92년부터 각각 10만이하로 兵力을 減縮하고, 92년까지 미군철수 완료, 다음으로 非武裝地帶의 平和地帶化 등 軍事的 緊張緩和등을 주장하고 있다.<sup>23)</sup>

金日成의 1988년 신년사에서 諸政黨社會團體 대표와 각계인사가 참가하는 南北連席會議의 소집을 주장하였고 동년 11월 16일에는 남북고위급 政治軍事會談을 주장하면서 「平和保障 四原則」을 내세웠다. 즉 2개노선에 반대하는 통일추구,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 군축, 그리고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의 개최등이다.<sup>24)</sup>

최근 문익환, 서경원, 임수경의 밀입국과 같은 사태 역시 북한의 革命統一戰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북한이 진실로 對話를 통한 통일을 모색한다면 정부대 정부의 대화를 통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남한의 혁명적 상황을 일으켜 親共政府를 수립하여야 赤化統一이 가능하다는 기본노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 해석된다.

23) 「自由公論」, 1988. 5, 69면.

24) 金宅煥, “北韓共產主義體制的 變化와 이데올로기”, 「北韓體制的 變化와 우리의 對應」, 韓國國民倫理學會, 1989년 학술대회, 152면.

### 3. 在野·學生들의 統一論議

第6共和國 수립이후 분위기가 자유로워지게 되어 각계각층의 통일논의가 일어나게 되었고 국내·외에서 연구와 주장이 많이 진행되게 되었다. 제한된 지면에 이런 논의를 모두 개관하기란 어렵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國內의 在野, 學生, 宗教集團들이 주장하는 통일논의를 소개하고 開放化의 문제를 논해 보고자 한다.

第5共和國時期까지는 통일논의가 개방화되지 않았고 정부만이 독점해 왔기 때문에 그리 활발하지 못했던 만큼, 오늘처럼 많은 주장이 난립하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 및 기성 野黨들의 統一政策 및 方案과는 달리 재야와 학생운동권의 통일주장은 分斷構造에 대한 認識, 外勢에 대한 문제, 主導勢力의 문제 등등에 있어서 기성 정당이나 정부의 주장과 다르며, 재야의 단체들이나 개인의 주장과 시각의 차이로 여러가지로 다른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문익환의 견해

문익환목사의 “聯邦制統一方案”은 ① 통일환경조성 4개항, ② 연방제 이전에 해결해야 할 3개항, ③ 연방제 3단계 4개항 등 모두 11개항으로 되어 있다.<sup>25)</sup>

統一環境造成的 4개항은 남북한이 分斷論理를 함께 극복하고, 敵對不信關係에서 자라는 黑白論理를 타파하고, 北은 自由를 향하여 南은 平和을 향

25) 문익환, (민족통일에 대한 구체적 제안) KNCC주최 지도자회의 발표문 (1988. 4. 14).

하여 과감히 궤도를 수정하고, 인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과감히 추진한다는 것이다. 연방제에 선행해야 할 3항은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 남북한 UN동시가입이다.

연방제통일의 3단계 4개항은 아래와 같다.

제1단계 : 軍事와 外交까지도 남과 북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영제국의 연방제를 실시하면서 永世中立化宣言을 하는 단계

제2단계 : 남북한이 현 사회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軍事와 外交까지 統合하는 단계

제3단계 : 남과 북이 두 단위로 실시하던 地方自治制를 도단위로 細分化하는 단계이다.

평화와 자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협정체결과 미군철수를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점에서 급진성을 띠고도 있다. 제1단계는 金大中씨의 共和國聯邦制案과 유사하며 제2단계는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와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목사는 또 韓半島를 中立化하고 四強의 緩衝地帶로 삼자고 주장하며 노동자 농민의 운동도 민주화와 통일을 향한 운동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기록권에 연연치 않고 主體性을 가지고 통일은 의에 입할 것을 주장한다.<sup>26)</sup>

## (2) 韓國基督教協議會 (KNCC)의 主張

KNCC는 1985년 총회에서 “韓國教會 平和統一 宣言”을 공식 채택한 이래, 여러차례 공식적으로 재천명하여 왔다. KNCC는 7.4공동선언의 自由,

26) 金浩鎭, “在野·學生들의 統一論議와 統一政策定向”, 東亞日報社,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南北韓統一方案심포지엄(서울 : 1989), 154면.

平和, 民族大團結이라는 3大原則에 입각하여 “인도주의 원칙”과 “民衆의 참여 우선원칙”을 강조한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인도주의 및 통일논의의 민주화란 5개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내외를 향한 告白的 宣言 形式으로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북한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건의사항으로서<sup>27)</sup>

①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만남과 왕래 및 이주를 보장하고, 친척·친지들의 일사적 과오로 인한 후손들의 정치적 법적 부당한 대우의 철폐가 선행되어야 하며,

② 정부의 통일논의 독점을 철폐하고 民間次元의 統一論議 自由化 保障과 언론의 활성화 및 양심에 따른 비판의 자유 허용이 선행될 것,

③ 남북한 상호간 敵對感과 공격적 비방과 욕설을 중단하고 상호간의 자유로운 교류 즉 통신과 방문, 학술, 문화, 체육, 경제의 자유로운 교류를 실시할 것

④ 평화협정체결과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확인하고, 한반도 전역에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때 미군이 철수하고, 유엔사령부 철폐, 핵무기를 철수하고

⑤ 民族自主性を 위하여 외세의 간섭없는 남북한 상호간의 통일노력과 동시에 民族共同體의 이익에 배치되고 分斷固着化에 기여하는 일체의 對外條約과 協約을 수정내지 폐기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은 KNCC의 입장, 특히 미군철수, 유엔군사령부 철폐,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안전보장장치의 제거들의 주장에 대하여 韓國의 保守教團에서는 대단히 批判的인가 하면 北韓側의 朝鮮基督教聯盟은 이를 지지하는 反應(노동신문 1988년 3월 9일)<sup>28)</sup>을 보인것이 흥미로운 일이라 하겠다.

27) 앞의 책, 161-162면.

28) 「통일논의 : 허와 실」: 조선일보, 1988년 6월 7일 제3면. 앞의 책 161면에서 재인용

이외에도 여러가지의 在野의 團體나 기독교단 및 학생들의 주장이 있고, 또 학자들의 방안이 제시되었고, 海外에서 논의된 統一立場, 方案이 무수히 많다. 여기에서는 재야나 학생과 같이 急進的인 立場을 취하는 統一方案의 特性이 무엇인지 간략히 분석하려고 한다.

分斷構造가 冷戰을 深化시키고 反共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外勢의 支配를 강화시켜 왔다. 한국은 美國의 新植民地化 되었고, 從屬되어 分斷을 永久化시키려 하고 있다. 現政權은 反民族, 反統一의 勢力이므로 統一의 主體勢力이 될 수 없으며 民衆이 統一의 主體勢力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自由民主主義下의 統一國家 建設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와 기존세력의 온존을 지속시키자는 의도에 불과하며 民衆의 統一欲求에 外面한 것이라는 것이다. 재야인사들과 학생들은 平民黨의 共和國聯邦制案과 民主黨의 韓民族共同體 統一論도 반외세, 자주의 원칙이 없는 사대적이고 외세의존적인 통일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며 民衆의 利害를 외면하고 지배체제의 논리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통일은 外勢依存的인 執權勢力이나 制度圈의 주도가 아닌 남북한 民衆의 主體的 力量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역설하면서 미군철수, 남북학생회담, 정당사회단체의 집총과 교류들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 4. 統一論議 開放의 得과 失

통일논의는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이미 開放이 되었고 상당히 많은 주장이 여러 다른 시각과 입장에서 이루어 졌다. 정부나 기존 정당의 안들은 大同小異하므로 意見의 調定이 과히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며, 재야나 학생같이 제도권 밖에서 제기 되는 통일논의는 시각의 차이가 커서 亂脈像을 이루고 있으며, 기성정당들의 입장과 매우 다르다고 생각된다.

急進勢力의 주장은 현실정치를 무시한 統一至上的, 理想的, 感想的 경향까지 포함하고 있어 북한의 宣傳攻勢에 쉽게 말려들어 갈 소지가 있는 듯 우려되기도 한다. 그래서 재야나 학생들은 정치인이거나 사회과학자들이 아니고, 宗教界의 人士들이나 社會運動家들이기 때문에 準據의 틀이 다르고 經驗的이기 보다는 規範的인 立場을 취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差異點을 어떻게 수용하고 소화하여 하나의 통일방안으로 綜合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時急하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社會團體가 없으며 金日成의 唯一思想(主體思想)에 입각하여 하나의 목소리밖에 내지 않는데 반하여 우리의 상황은 너무도 다양하여 혼돈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북한에서는 南北의 政黨社會團體代表들의 연석회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統一論議의 開放化의 문제가 질문이 아니라 논의되고 주장된 의견들을 어떻게 綜合하여 “우리의 統一案”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統一方案의 統一”, “統一政策에의 合意”가 문제가 되는 단계에 이르른 것이다. 어느정도 合意된 方案이 없이 계속 진전된다면 상당한 혼돈상태가 심화되고 북한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5. 結 語

위와같이 統一論議의 現象을 分析한 結果 政府는 合意된 統一方案의 作成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主導權을 행사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먼저 四黨의 統一方案을 綜合, 合意하여 하나로 만들고, 在野의 의견들을 보아 研究作業을 하는 동시에 政黨, 社會團體, 在野團體, 學生, 學界등 各계各층을 대표하는 統一方案 協議機構를 형성하여 하나의 통일방안으로 종합, 합의하는 진통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혹자는 주장하기를 北韓의 絶對화된 唯一思想體系를 부수기 위하여는 우리의 多樣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도 하지만 통일문제에 관한 한 對北韓 協商을 위해서는 하나의 方案이 제시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을 보다 강화시키리라고 생각한다. 政府의 案이 제시되더라도 다양한 세력의 다양한 주장과 안이 난립하고 있음을 아는 北韓으로서 남한내의 親北勢力을 충동하고, 우리의 상황을 分裂시키고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赤化統一의 幻想을 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나, 國內의 國民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입장에서나, 또 實際的인 統一可能性을 높인다는 의미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의 合意된 統一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民主化의 과정에 맞추어 저절로 개방이 된 통일논의의 수확을 견우는 것은 政府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에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우리사회의 진면목을 들어내게한 百花齊放의 현상으로서의 통일논의 난맥상은 이제 정리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 韓國의 北方政策과 北韓의 反應

— 「7·7特別宣言」을 중심으로 —

1989

研究責任者  
鄭千九  
(仁川大)

國土統一院



## 要 約 文

北方政策의 개념은 우리의 北方 國家인 中蘇에 대한 外交政策을 의미하는 地理的개념으로 이해되기도하고 거기에 東歐諸國까지 포함하는 對共產圈 外交를 지칭하기도 하며 또는 對中蘇外交의 측면에 북한까지를 포함하는 北方三角관계로 파악되기도 한다. 최근에 이르러 北方外交와 南北韓關係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그러한 구분은 활발히 진전되고 있는 對共產圈外交가 그보다 매우 不振한 상태에 있는 남북한관계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원래의 北方政策은 그 重要한 目的이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統一與件 造成에 있다고 볼때 北方外交政策은 “韓國이 理念과 體制가 相異하면서도 한반도의 安保환경에 直. 間接의 영향을 줄 수있는 소년 중국 기타 東歐圈등 主要 共產諸國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아울러 北韓과도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모색코져하는 外交的 努力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北方政策에 관한 구도가 우리 外交政策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美.中 國간에 데탕트가 시작되었던 1970年代 초반부터였으며 1973년 6·23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에서 하나의 政策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루어졌던 北方外交는 매우 制限的이며 間接적이고 非公式的이었다.

北方外交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이후의 극히 최근의 일로써 1983년 5월 中國 民航機 납치사건을 계기로 中國 政府의 航空總局長 沈圖가 서울을 방문한 사건 이후 韓·中國관계의 진전과, 그후 서울 올림픽에 中·蘇를 비롯한 공산권의 대규모 참가결정 및 이를 전후한 이들 국가와의 관계 진전을 계기로 해서였다. 그리고 그러한 北方政策의

본격적인 展開를 뒷받침하는 정책선언이 1988년 7월의 「民族의 自尊과 統一政策을 위한 大統領 特別宣言」 즉 「7·7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방정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를 “한반도의 平和定着과 統一與件造成”에 있다고 광의로 定義할때 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은 北韓側의 好意的 反感과 相應한 조치에 많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反應은 아직까지 否定的 태도로 일관되어 왔으며 더 나아가서 북방정책을 그들의 對南革命路線추구 目的에 惡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 하겠다.

어떤 정책목표의 건전성은 그것이 바람직한가, 실현가능한가, 그리고 비용과 성과간의 비율은 감내할만한가 하는 세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고 볼때 한국의 「7·7선언」 및 북방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補完 방향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7·7선언」에서 표명된 남북한 관계와 남북한의 국제관계의 방향제시는 우리 민족이 분단의 벽을 헐고 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내용이다. 대결·적대관계에서 화해·협조관계로 개선하고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를 화해로 이끌지 않고는 평화적인 統一의 길은 찾을 수 없다. 다행히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미·소간의 新테랑뜨 氣流와 공산권의 개혁 개방추세로 그러한 정책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국제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7·7선언」의 기본방향은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고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혔다는 점에서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실현가능성의 평가에 있어서 長期的으로는 낙관이 가능하지만 短期的으로는 처음부터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7·7선언」이 남북한관계의 극적인 전환보다는 한국의 국내외적 이미지 提高와 北方外交의 活路개척을

목표로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실현성이 있으며 또한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비용과 成果간의 비율에 있어서 현재 북방외교에 결과와 北韓의 逆攻에 의한 費用중 어느 것이 더 큰 것인지는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국제적인 大勢는 한국의 政策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역공에 의해 남북한관계의 경색 密入北事件으로 인한 혼선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북한의 「7·7선언」에 대한 戰略的 거부와 전술적 利用이라는 反應에 대응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첫째 「7·7선언」의 기본정신을 어떤 비판과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의 長期的 目標로서 꾸준히 이를 견지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민족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화해·협조관계의 추구, 주변국가들과의 교차접촉 교차승인은 국제정세의 대세가 그러하고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지향해야 할 方向이 그러하기 때문에 북한의 拒否와 비난에 의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둘째 「7·7선언」의 理想主義的 성격은 현실주의적인 政策에 의해 補完되어야만 한다.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군사적 대치상태, 상호불신, 북한체제의 異質性과 對南戰略등에 대해 완벽한 대비책을 세우고 남북한관계의 현실과 「7·7선언」의 이상적 방향이 혼동되지 않도록 국민홍보와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끝으로 「7·7선언」과 북방정책의 成敗는 「7·7선언」과 북방정책의 成果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그 費用을 최소화하는 일에 달려있다. 「7·7선언」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북방정책을 꾸준히 계속하고 이러한 政策을 中心으로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國民的 合意를 재창출해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해 美日등 기존 우방국들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하고 대북

방외교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들과의 협조를 기반으로 삼으며 특히 北韓의 對南戰略에 기회를 제공하지 않도록 統一問題와 남북한관계의 기본방향에 관한 國民的 合意기반을 다지는 일이 艱요하다.

# 目 次

1. 序論 .....	129
2. 北方政策의 背景과 推進內容 .....	132
가. 새로운 北方政策의 背景 .....	132
나. 새 政策의 主要內容의 意味 .....	135
다. 諸조치와 成果 .....	138
3. 「7·7 선언」과 北方政策에 대한 北韓의 反應 .....	142
가. 全般的 反應 .....	142
나. 具體的 對應 樣態 .....	146
4. 北韓의 戰略 分析 .....	155
5. 結論 .....	159





## 1. 序 論

北方政策의 개념은 우리의 北方 국가인 中·蘇에 대한 外交政策을 의미하는 地理的 개념으로 理解되기도 하고, 거기에 東歐諸國까지 포함하는 對 共產圈外交를 지칭하기도 하며, 또는 對中·蘇外交의 측면에 북한까지를 포함하는 北方三角관계로 파악되기도 한다. 최근에 이르러 北方外交와 南北韓關係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그러한 구분은 활발히 진전되고 있는 對 共產圈外交가 그보다 매우 不振한 상태에 있는 남북한관계로 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원래의 北方政策은 그 重要的 目的이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統一與件造成에 있다고 볼 때 北方政策은 “韓國이 이념과 체제가 相異하면 서로 한반도의 安保安境에 直·間接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련, 중국, 기타 東歐圈 등 主要 共產諸國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아울러 北韓과도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모색코져 하는 외교적 노력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sup>1)</sup>고 볼 수 있다.

北方政策에 관한 構圖가 우리 外交政策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美·中國간에 데탕트가 시작되었던 1970年代 초반부터였으며 1973년 6·23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구체화되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同선언은, 남북한간의 군사적 對決구조를 청산하고 南北韓의 현실을 인정한 기초위에서 남북한간의 “善意의 경쟁”을 제외한 1970년 8월 15일의 「平和統一宣言構想」을 국제관계로 연장시켜 남북한 유엔同時加入 不反對 의사와 함께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의 互惠平等의 원칙에 입각한

---

1) 유석열, “北方政策과 共產圈의 對韓 인식”, 평화통일(신문), 제 94 호, 1988. 10·31, p. 4.

相互門戶開放을 제의했다. 그러나 '70年代에 이루어졌던 北方外交는 매우 制限的이며 間接적이며 非公式的이었던 것이 事實이다.<sup>2)</sup>

北方外交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이후의 극히 최근의 일로서 1983년 5월 中國 民航機 납치사건을 계기로 中國政府의 航空總局長 沈圖가 서울을 방문한 사건 이후 韓·中國 관계의 진전과, 그후 서울올림픽에 中·蘇를 비롯한 共產圈의 대규모 참가 결정 및 이를 진후한 이들 국가와의 관계진전을 계기로 해서였다.<sup>3)</sup> 그리고 그러한 北方政策의 본격적인 展開를 뒷받침하는 정책 선언이 1988년 7월의 「民族의 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大統領 特別宣言」 즉 「7·7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北方外交의 發展과는 별개로 北方政策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統一與件 造成”에 있다고 廣義로 定義할 때 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은 北韓側의 好意的 反應과 相應한 조치에 많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反應은 아직까지 否定的 태도로 일관되어 왔으며, 더 나아가서 북방정책을 그들의 對南革命路線 추구 목적에 惡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實情이라 하겠다.

本論은 남북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北方政策이 가지는 의미와 內容을 「7·7 宣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북한측의 反應을 분석함으로써 북방정책의 補完·추진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北方정책의 분석은 특히 남북한의 통일정책과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하려 하며 북한측의 反應은 7·7선언 전반에 대한 反應과 주요 쟁점에 대한 반

2) 許 曼, “韓國의 北方外交政策의 再照明과 展望”, 轉換期の 韓國政治(韓國政治會, 1987), pp.320~321 참조.

3) 鄭鍾旭, “韓國外交政策의 變遷과 共產圈外交의 등장”, 美蘇研究, 第2輯(1988), pp. 159~161 참조.

응, 그리고 戰術的 利用을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은 이러한 反應을 통해 분석 도출될 수 있는 북한의 戰略을 검토하고 결론으로 우리의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北方政策의 背景과 推進內容

### 가. 새로운 北方정책의 背景

한국의 북방정책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한 관계와 밀접한 연계를 지니고 시작된 것이다. '70년 8·15 「평화통일정책구상」이 남북한 관계를 군사적 對決에서 남북한간의 “누가 더 국민을 잘 살게 하느냐”의 善意의 경쟁구조로 전환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善意의 경쟁구조를 국제사회에 확대 적용한 것이 6·23宣言이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6·23 선언 이전에도 한국은 남북한 對話와 병행하여 共產國家들과의 接近을 모색하여, 이미 '71년 8월 당시 金溶植 외무장관이 국회에서 한국이 中國 및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고 '72년 12월에는 공산권과의 무역거래가 가능하도록 貿易去來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6·23선언은 남북한관계와 그들의 국제관계를 전쟁과 相互부정이 아닌 평화속의 상호인정과 경쟁관계로 함께 전환시키려는 정책원칙의 공식적 표명이라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公式 拒否입장과는 관계없이 6·23선언 이후 남북한 관계는 平和的이며 경제적인 對決 구조로 전환되어 왔다. '72년 7·4공동 성명 이후 南北對話가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여러 경로로 진행되어 왔고, 국제사회에서는 남북한 同時修交國이 증가하고 UN가입을 제외하고는 UN전문기구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였다. 북한은 한국의 6·23선언을 “두 개의 朝鮮 路線”이라고 혹독하게 비난하면서도 실제로는 국제사회에서의 共存을 추구하여 '62년 12월말까지만 해도 南北韓同時修交國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1976년에는 총 49개국이 남북한과 同時에 의

교관계를 맞게 되었다.<sup>4)</sup> 1986年末 현재 남북한 동시 수교국은 68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국제기구에도 2個의 유엔直屬기구(UNDP, UNCTAD), 7個의 UN專門機構(UNESCO, FAO, WHO, WMO, WIPO, ITU, ICAO, IMO 등), 5개의 政府間국제기구, 그리고 민간국제 기구인 國際赤十字社 등에 남북한이 同時에 가입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80年代 중반까지의 남북한관계는 이러한 현실적 共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對南赤化路線의 不變과 이에 따른 “共存의 公式的 承認” 拒否로 인하여 戰略的인 共存의 관계로 전환되지 못하였다. 한국의 정책은 이에 따라 共存을 公式的으로 추구하면서도 北韓에 대한 壓力의 수단으로서 북한에 대한 壓倒的 國力の 增大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開放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추구해 왔다. 남북한의 國力差가 크게 벌어지고 韓國과 公産권과의 關係증진으로 北韓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을 개방하게 되면 북한도 分斷의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共存을 수락하여 진지하게 남북대화에 임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對話와 妥協에 의한 평화적 통일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한국측의 논리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이러한 정책은 '70년도초에는 어느 정도 낙관적 기대를 가지게 하였으나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북한의 政府뿐만 아니라 美·蘇간의 新冷戰, 中·蘇관계의 적대관계지속, 한국내 政府不安 등으로 인하여 不振한 상태를 면치 못하였으며 '84년에 再開된 남북대화도 1년만에 다시 중단되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7·7선언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와 연계된 북방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선언이라 할 수 있다. 4共和國에서 '70년

---

4)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 10.

5) '87南北南 比較分析 (서울:社團法人 自由評論社, 1987), pp. 117~118.

의 8·15선언과 '73년의 6·23선언을 합친 선언과 비슷한 성격의 선언이 6 共和國의 7·7선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8·15선언과 6·23선언이 한반도의 군사적 對決구조를 경제적 경쟁구조로 전환시키려한 것인데 비해 7·7선언은 “모든 분야의 對決路線을 종결짓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 남북의 민족구성원 전체가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祖國 통일을 실현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근대적 민족국가로 등장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6)</sup>

이러한 정책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던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국제적, 국내적 여건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는 中國과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의 참가가 필수적이었는 바, 88년 9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개최되는 서울올림픽에 이들의 참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북한의 反對를 완화시키고 그 참가의 명분을 주기 위하여, 획기적인 정책의지 표명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7·7선언은 공산국가들의 올림픽참가를 크게 鼓舞하였고 헝거리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데 큰 밑받침이 되었다.

둘째, 6共和國 出帆과 함께 民主化가 진전되면서 국민의 統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증대되어 남북한관계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국제정세의 긴장완화추세이다. 미·소간의 中·短距離 미사일 폐기 협정으로 超강대국관계가 긴장완화의 추세로 접어들었고, 中·美간의 우호 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中·蘇 兩國이 각각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하여 전

6) 金達述, “7·7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어떻게 달라졌나”, 월간 통일(1989년 7월 호), p. 36.

반적으로 국제관계가 긴장 완화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즉 “이미 10여년  
 께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中國의 4個 近代化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實  
 用主義路線과 1985년 3월에 고르바초프書記長이 등장한 이후 강력히 추진  
 되고 있는 소련의 改革·開放정책과 東歐國家 등 世界공산국가들의 적극적  
 인 경제성장정책”<sup>7)</sup>으로 아프가니스탄 문제, 캄보디아문제, 중·소 국경 긴장,  
 東·西歐간의 관계 등 공산국가들과 관련된 국제문제가 군사적 대결에서 평  
 화적 해결로 전환되어 온 것이다.

끝으로, 韓國의 國力伸張과 국제지위향상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이제  
 GNP수준에서 세계 18位, 貿易量에 있어서 세계 10位の 中位 국가로 발돋  
 음했으며, 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非西歐國 중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  
 로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그 국제적 地位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與件들은 한국정부가 남북한 관계를 敵對에서 신뢰로,  
 對決에서 協力으로, 경쟁에서 同伴관계로 이끌어갈 意志를 公式적으로 표명  
 하게 되는 動機를 부여하고, 가능할 수 있는 배경을 이루었으며, 또한 그  
 령게 할 수 있는 機會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 나. 새 政策의 主要內容과 意味

「7·7선언」은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한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통한 통일추구를 제창하면서 ①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 적극 추진·및 해외  
 동포의 자유로운 남북왕래 개방 ②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적극 주선·지원 ③남북한 교역 문호개방과 이의 민족내부교역 간

7) 全正煥, “韓國의 對共產圈外交에 對한 北韓의 對應 態度 및 戰略”, 美蘇研  
 究, 第2輯(1988년), p. 172.

주 ④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 추구 희망 및 우방국들의 북한과의 非군사물자 교역 不反對 ⑤남북한간 경쟁·대결외교 종결 및 북한의 국제사회 기여 위한 협력과 공동이익 위한 협력 희망 ⑥한반도 평화정착 여건 조성 위해 북한의 미·일 등과의 관계개선 협조 용의 및 우리의 중국·소련과의 관계개선 추구의사 등 6개항을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이 이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보다 전진적 조치를 취할 용의를 밝혔다.

여기서 앞의 3개항은 남북한관계의 개선의사를 밝힌 것이며 뒤의 3개항은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의 협력과 상대방 우방국가들과의 상호관계개선을 추구한 것이다. 그후 '88년 10월 18일에 있었던 盧泰愚대통령의 UN총회연설 ——「한반도의 和解와 統一을 여는 길」——은 7·7선언에서 제시한 民族和解와 남북간의 交流·協力 및 통일의 의지를 세계에 천명하면서,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한반도 평화정착 여건 조성을 위한 美·蘇·中國·日本과 南北韓간의 東北亞平和協議會談, 南北和解의 상징으로서의 非武裝地帶內 平和市건설, 그리고 南北和解의 打開策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의 적극 추진 등을 제의하였다.<sup>8)</sup>

통일 및 북방정책에 있어서 6共和國이 내 놓은 이와 같은 새로운 제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政策基調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지난 40년 동안 對決과 敵對관계를 기본으로 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경쟁·대결·적대하는 對象으로부터 민족의 일부로 포용하여 상호 신뢰·화해·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할 民族共同體”<sup>9)</sup>로 인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기조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70년 8·15 선

8) 남북대화, 제46호(1988. 12.15), pp. 45~70 참조.

9) 民族統一論(서울:국토통일원 연수원, 1989), p. 63.



언에서도 경쟁상태는 인정했으며 오히려 善意의 경쟁을 제의했는데 「7·7선언」을 계기로 그러한 경쟁도 止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화해·협력의 對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기조는 앞으로 남북한 관계가 나아가야 할 理想的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현실정책을 당장 그렇게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理解된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으며 서로 相衡되고 경쟁적이며, 對決的인 요소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제까지는 북한에 대한 우리 國力の 優位를 추구해 왔고 그러한 國力優位가 확보 되면 될 수록 북한의 강경 對南자세를 약화시켜 통일추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前提했었다는데, 7·7선언에서는 “南北間의 지나친 경제적 격차나 勢力不均衡은 오히려 統一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북한동포의 삶의 質을 향상시키고 民族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발전과 개방을 촉진하는 입장으로서의 정책기조 전환에 따라, 이제까지 북한의 국제사회진출을 억제하는데서 부터 이를 도와주고 특히 북한의 美國·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하며 우방국이 북한과 非軍事的 물자에 대한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것을 희망하면서 한국의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제까지 추구해온 남북한과 주변 4強과의 交叉 접촉, 교차 승인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넷째, 남북한간의 상호 교류·접촉·협력의 과감한 개방이다. 남북한 동포간

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해외 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 왕래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며,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그러한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 다. 새 政策의 具現을 위한 諸조치와 성과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가지 제안과 구체적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먼저 북한과의 對決 구조 청산을 위한 접근의 일환으로서 1988년 7월 19일 0시를 기해 휴전선에서의 對北韓 비난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또한 KBS사회교육방송 등 對北방송에서도 김일성 - 김정일父子 등 북한의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어 9월 3일에는 북한과 대공산권자료를 대폭 공개하기로 하였다.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표현을 지양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북한이 강력히 그 폐지를 요구해 오던 國家保安法에 대해서도 盧泰愚대통령은 '88년 10월 20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기자회견에서 그것이 남북대화에 장애요인이 된다면 남북회담에 진척이 있는 후 이 법을 부분적으로 폐지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기도 하였다.<sup>10)</sup>

둘째, 남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협력을 위한 조치로서 1988년 10월 7일 7·7선언 제3항의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는 항목의 후속조치로서 경제기획원은 “정부는 남북경제 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이라도 향후 남북간 경제교류는 민족진체 이익을 최대한 실현해야 한다는

10) 정용석, “6공화국과 북방정책”, 民族知性, 1989년 8월호, p. 26.

측면에서 남북간에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간 교역절차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7個項으로 된 이 조치는 ① 民間商社의 北韓物質 交易 許容 ② 民間商社의 北韓物資中繼許容 ③ 北韓 原產地 表示·상표 부착 허용 ④ 直·間接 交易物資 關稅 非賦課 ⑤ 남북 경제인 상호접촉·방문 허용 ⑥ 北韓船籍중 商用선박의 入港허용 ⑦ 향후 남북 경제교류 관련 법규 보완 예정 등이다.<sup>11)</sup> 이 조치에 따라 북한산 명태, 인삼주, 뱀술, 그림 등이 반입되어 백화점 등에서 팔리기도 하였으며, '88년 11월 19일에는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부착된 모시 조개 40kg이 현대종합상사에 의해 국내에 반입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종합상사들이 북한산 무연탄의 직접수입을 신청했고 우리는 북한에 고추 수출을 검토하였다. 89년초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금강산공동개발, 元山조선소 확장공사와 元山철도차량공장합작 등에 북한당국자들과 합의한 것도 이러한 조치를 배경으로 해서였다.

셋째, 남북한관계와 국제관계에 있어서 남북한이 민족공동체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로서 1988년 7월 16일 외무장관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우방국들이 自國의 법령과 정책에 따라 북한과 非軍事的 物資를 교역하는데 반대하지 않으며", "북한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 개최되는 모든 문화, 예술, 학술, 스포츠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하는 등 13개항의 對外活動지침을 발표하였으며, 7월 19일에는 450여만명의 해외거주 동포들이 공관에 사전, 사후 신고절차만 거쳐 남북한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미국 등 서방국가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의 북한방문과 중·소 등 공산국가에 거주

11) 남북대화, 제46호(서울 :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88), pp. 99~108 참조.

하는 교포들의 한국방문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의 북방정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었던 바, 1989년 2월 1일 헝가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韓蘇관계와 韓中國관계의 괄목할 만한 진전을 가져왔으며, 東歐圈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무역사무소 설치에 있어서 소련과는 1989년 4월 서울과 모스크바에 상호 무역사무소를 개설했으며, 폴란드와는 4월 및 5월에 바르샤바와 서울에 상호 무역사무소를, 그리고 불가리아와는 4월 소피아에 우리측 무역사무소를 개설한 바 있다.<sup>12)</sup> 이와함께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져, 1988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은 前年 對比 80%가 증가한 총 3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경제인 교류에 있어서도 同年에 前年 對比 11배가 증가한 6,360명이 왕래하였다.<sup>13)</sup>

끝으로, 민족공동체의 형성·발전을 위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7·7선언과 그 후속조치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무총리직속으로 「北方 및 南北交流協力審議委員會」를 두고 外務部에는 「北方交流協力審議委員會」를, 統一院에는 「남북교류협력심의회」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現行法體系안에서 南北交流·協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상 「7·7선언」의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들은 북한의 反應과는 관계없이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취한 것이며, 또한 그 성과는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룩한 것으로서 「7·7선언」의 긍정적 기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2) 임양택, "북방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民族知性(1989년 8월호), p.44.

13) 같은 책, pp.44~45참조.

「7·7선언」 이후에 나타난 문익환, 서경원, 임수경 등의 密入北 사태와, 통일정책의 混線, 「發想과 認識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새로운 統一·北方정책과 국민의식 및 法질서·사회구조와의 모순·마찰, 그리고 북한측의 이에 대한 惡用으로 인한 남북한관계의 경색등은 그러한 성공을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치루어 온 불가피한 代價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부작용은 「7·7선언」이나 북방정책에 의해서만 초래되었다기 보다 개방화와 민주화의 사회적 배경에 연유한 바가 있지만<sup>14)</sup>, 북한을 화해와 협조의 對象으로 규정된 새로운 정책기조와 無關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책의 새로운 전환에는 그 성공에 못지 않게 일정한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다.

---

14) 정용석교수는 그러한 부작용이 "북방정책이나 「7·7선언」이 빚어낸 것이 아니라 개방화와 민주화의 사회적 배경에 연유한 것으로 보아야 옳다"고 보고 있다. 정용석, 앞의 글, p.30.

### 3. 「7·7선언」과 북방정책에 대한 北韓의 反應

#### 가 全般的 反應

「7·7선언」으로 표명된 한국의 새로운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전반적 반응은 1973년 6·23선언에 대한 당시 북한의 반응과 類似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한국이 中·蘇등 공산국가들과의 접근을 추진하면서 6·23선언을 통해 남북한의 UN同時가입과 공산국가들과의 접근을 公式 천명하자, 북한은 이를 "두 個의 조선 路線"이라고 매도하면서 진행중이던 남북대화를 중단했으며 對話再開의 前提조건의 하나로 한국이 6·23선언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실제로는 修交國확대에 노력하여 한국과의 同時수교국을 증가시켰으며, 유엔 전문기구 등에 한국과 함께 동시 가입하였다. 북한은 또한 한국측이 북한에 대한 全面否定에서 현실인정으로 방향 전환한 추세를 심분 이용, 한국의 反共法, 保安法 철폐, 容共活動보장, 주한미군 철수 등을 집요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統革黨사건과 이후 統革黨목소리 방송(1985年 「한국민족민주전선」과 「救國의 소리 방송」으로 각각 개칭)을 통해 한국내 反體制운동을 鼓舞시켜왔던 것이다.

「7·7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측은 처음부터 거부의를 명백히 하였다. 선언직후인 1988년 7월 11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許談 명의의 성명에서 「7·7선언」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교차 접촉안을 문구와 표현을 바꾸어 각색한 것에 불과하며, 검토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하등 새로운 것도 없다"고 格下 비난하면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면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가시게 하는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여 종래의 「軍事問題 優先解

決」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또한 북한은 남한측이 대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南北連席會議」에 호응하고 「8·15학생회담」의 실현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은 그후에도 「로동신문」논평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국전선」등의 성명을 기획있을 때마다 번갈아 내면서 「7·7선언」과 북방정책 등을 비난하였다.

예로써 노태우 대통령의 UN총회연설이 있는 다음날인 1988년 10월 20일 북한은 「조국전선」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연합회의를 열어 한국의 對北제의들과 북방정책들을 "두 개 조선 조작 책동"이라고 격렬히 비난하고 "이를 끝내 저지 파탄시키자"고 선동하면서 연합회의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同호소문에서 그들은 남한 당국이 "UN가입과 교차승인, 북방정책과 같은 분열방안을 여기저기 내돌리면서 선행한 어느 집권자보다도 두 개 조선 조작 책동을 노골적으로 추구해 나르고 있다"고 비방하고 그러한 교차승인과 북방정책은 "외세의 힘을 빌어 두 개 조선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고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고착화"하려는 것으로 매도하였다.<sup>15)</sup>

7·7선언과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거부반응에서 북한의 태도를 분석해 보면 ① 「7·7선언」을 한국측의 새로운 자세변화로 인식하기 보다는 과거 정책의 연장이라 보고 있고, ② 政治·군사부분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③ 「7·7선언」과, 특히 UN가입·교차승인·북방외교를 과거의 6·23선언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조선 조작 책동」과 분단고착화 정책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한국의 새로운 북방정책에 대해 이러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게 된 이유는 북한의 남북한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 전략과 대내외 사정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

15) 内外通信(資料版), 第612號(1988. 10. 28), p.연7R.

첫째, 「7·7선언」은 북한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통일전략에 배치되기 때문에 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통일문제를 남북한 兩 당사자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해결될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사회주의를 강화하고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북한에 흡수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sup>16)</sup> 그렇다면 한국측에서 6·23선언과 같이 군사적 대결 상태를 지양하기로 선언하든지, 7·7선언에서와 같이 경제적 대결구조까지 청산한다고 하든지, 어떠한 일방적 선언도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통일전략 속에서는 분열상태의 지속이요 분단의 고착화로 밖에는 인식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전략을 한국에 대한 制壓이 아닌 聯邦형식의 현상유지적 성격으로 보는 경우<sup>17)</sup> 북한은 남북한 兩體制의 융합을 指向하는 한국의 「민족공동체」형성정책에 의해 自己體制존립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同意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의 전략목표는 최대 목표가 남한 혁명에 의한 흡수 통일이고 次善의 목표가 북한 체제의 유지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이 내세우는 「고려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그 外面的 연방형식으로 볼 때는 남북한의 現제도를 인정·존속시키는 現狀유지적 방안인 반면, 연방성립을 위한 前提조건들

16)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것이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明示하고 있는 점이다.

北韓總覽(서울: 社團法人 北韓研究所, 1983), p. 1742 참조.

17) 고병철교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전쟁을 통한 적화통일의 목표는 거의 포기되었고 혁명에 의한 적화통일의 목표조차 후퇴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압이 아닌 연방형식의 통일이 1980년부터 북한의 새로운 전략목표로 부각했는지 모른다"고 보고 있다. 고병철, "북한이 보는 남북한 관계의 현황", 민병천 편, 오늘의 남북한(서울: 고려원, 1987), p.33.



(미군 철수, 보안법 등 철폐, 한국정부의 교체 등)과 「연방국가」의 내용(민족연합군 조직, 공동된 대외정책 추구 등)으로 보면 흡수 통일방안이라는 二重性을 지니고 있다. 진정한 평화적통일의 길은 그 중간형태인 남북한간의 對話와 교류·협력에 의해 兩體制를 접근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것인데, 한국이 「7·7선언」을 통하여 보다 확실하고 과감하게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은 북한의 최대·次善의 전략목표에 모두 反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북한의 그러한 입장은 한국의 새 통일방안에 대한 북한의 拒否논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금년 9월 11일 한국정부가 盧泰愚대통령의 國政연설에서 밝힌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에 대해서 궁극적 목표로 통일헌법 제정과 이에 의한 총선거로 단일국가를 수립하자는 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자의 空論"으로, 통일까지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을 제의한데 대해서는 "두 국가의 존재를 합법화하고 南北관계를 공식적인 국가간의 관계로 전환시켜 서로 남남처럼 살려는 것"이라고 비난한 것이다.<sup>18)</sup>

둘째, 한국이 「7·7선언」에서 추구하고 있는 交叉접촉, 交叉승인의 논리를 북한이 공식적으로 승인할 경우, 북한의 한국정부 否認논리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對中·蘇를 포함한 공산국가들과의 접근을 가속화시켜 북한에게 불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북한은 판단했을 것이다. 특히 「7·7선언」은 서울올림픽개최를 앞두고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해 반대집행인을 집요하게 벌여온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교차접촉·교차승인의 논리를 反對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그들의 赤化통일노선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지원을 3大혁명역량의 하나인 "국제혁명역량과의 유대강화"로 부르고 있는데, 한국과 중·소 등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가 발전되어 그들이 한국을

18) 동아일보, 1989. 9. 15.

독립주권국가로 간주하게 되면 北韓의 赤化統一路線을 民族해방전쟁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를 支持・支援하지 못하고 오히려 견제・反對하는 경우 北韓의 적화통일추구는 거의 불가능 할 수 있다.<sup>19)</sup>

셋째, 北韓體制의 性格으로 인해 북한은 남북한 상호간 그리고 남북한과 국제사회간의 과감한 개방과 교류를 추구하는 「7・7선언」과 북방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전체주의적 주민 통제체제와 金日成父子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對外開放이나 南北韓간의 交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對外개방이 진전되면 北韓住民들이 外部세계에 노출되어 북한의 處地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길러 줄 것이다. 또한 정상적 남북교류와 교차접촉 교차승인은 한국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데,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 해방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논리의 기초위에 김일성 유일사상체제를 구축해온 북한으로서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체제의 기반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없다고 할 수 있다.

## 나. 具體的 對應 樣態

북한은 위에서도 같이 한국의 「7・7선언」과 북방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拒否태도를 분명히 하는 한편, 이에 대한 對應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북한의 具體的 對應 樣態는 한국의 북방외교 전개에 대한 沮止활동, 統一方案 및 남북대화 對應攻勢, 그리고 「7・7선언」의 對南戰略에의 利用 등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

19) 金正煥, "韓國의 對共產圈外交에 對한 北韓의 對應態度 및 戰略, 美蘇研究, 第2輯(1988), p.186.

### (1) 북방정책에 대한 對應.

北韓은 한국의 활발한 북방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산국가들 특히 中·蘇의 對韓關係 조정 움직임을 견제하고 그들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다짐하는데 外交的노력을 집중하였다. 「7·7선언」이후 소련이 대규모 선수단을 서울 올림픽에 참가시키고 韓·蘇관계가 진전되자 북한은 그러한 韓·蘇관계가 급속한 진전 또는 중대한 質的인 變化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은 이미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1988년 4월 28일-5월5일 金永南의 교부장의 소련 공식 방문을 통해 소련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소련의 원칙적 입장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것과 교차승인에 의한 "2개 조선"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 등 기존의 對韓半島정책을 재다짐받았다. 북한은 소련과의 외교부 실무각료회담을 통해 쌍방간 우호 협력 관계의 강화에 노력했고 군사부분에서도 고위급 대표단의 교환과 MIG-29기 12대의 도입 등 군사관계를 강화했고 경제·문화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추진되었다.

특히 '88년 12월 22~24일간 평양을 방문한 세바르드나제 蘇聯 外相이, 고르바초프의 크로스노 야르스크 연설에서의 한국에 대한 개별지칭(美國의 식민지라는 호칭이 아닌 남한으로) 및 韓·蘇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종래의 북한지지 입장을 확인해 준 것은 북한으로서 큰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세바르드나제-金永南 회담결과 발표된 「공동보도」에서 쌍방은 고려연방제안을 비롯해 3者회담·남북고위급·정치군사 회담·한반도의 非核평화지대 등 종래의 북한측 통일방안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했으며 교차승인과 유엔同時加入문제에 대해서도 "두 개의 조선을 조작하여 조선의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한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의 책동"

이라고 비난하였다.<sup>20)</sup>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은 그 어느때 보다도 雙方관계의 不變 입장을 강조·확인하는데 주력함으로써 韓·中間에 경제교류·스포츠교류 확대 등 관계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정치적 전략적 對北지지 입장을 묶어두려고 노력해 왔다. '88년 4월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현준국과 吳振干 인민무력부장의 訪中에서 中國의 吳學謙·錢其琛 등 外交 책임자들로부터 "중국은 남조선과의 雙務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등 對北지지 입장을 확인받았다. 중국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던 서울 올림픽이 끝난 후인 '88년 11월 金永南외교부장이 중국을 방문, 李鵬총리·趙紫陽 당시 黨총서기등과의 회담을 통하여 중국이 한국과의 "그 어떤 정치적 관계나 색채를 띠는 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교차승인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받았다.<sup>21)</sup> 또한 '88년 「9·9절」행사를 기념하는 楊尙昆 중국 국가주석의 訪北과 실각이전인 '89년 4월 하순 中國 趙紫陽 총서기의 訪北을 통해서 중국은 중국과 북한관계의 不變과 한반도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었다.<sup>22)</sup>

한편 東歐諸國의 개혁·개방추세와 한국의 북방정책의 합치점에 의해 東歐국가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나가고 있는 경향에 대해 북한은 이에 제동을 걸만한 유효한 지렛대를 갖지 못한 현실에서도 북한과 東歐국가들간의 가능한 한 기존 쌍무관계를 보존하면서 그 여파를 극소화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북한은 헝거리의 對韓 외교관계 수립, 유고·폴란드

20) 內外通信, 綜合版(38) (1988. 7. 1~12. 31), pp.221~222.

21) 같은 자료, pp.192-195 참조.

22) 특히 4월 24-29일간 조자양의 북한방문중 趙는 美·北韓간의 대화의 급을 높일것과 함께 文의환목사 석방 등을 촉구함으로써 대북한지 지 입장은 물론 한반도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內外通信, 資料版 제638호(89. 5. 5), pp. 外1C~外4C 참조.

• 불가리아의 한국과의 무역사무소 설치 등을 억제하지 못했으며 다만 헝가리에 대한 외교적 항의로 이에 맞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7·7선언이후 과감한 對공산권문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헝가리와 통상대표부 개설이 합의(88. 9. 13)되자 이를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로 격렬히 비난했고 이례적으로 평양주재 공산권 7개국 대사를 초치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단결"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부다페스트에 한국 상주대표부가 정식 개설되자(88. 10. 25) 북한은 즉시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헝가리를 "反사회주의국가 및 2개 조선을 인정한 첫 사회주의국가"로 규정하면서 "사회주의대열의 분파행동"으로 매도하였으며 '88년 11월 8일에는 헝가리 주재 북한대사(金平一)를 소환하는 등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었다.<sup>23)</sup>

한·헝가리 外交관계수립이 발표된 직후인 '89년 2월 2일 북한은 이에 항의하여 헝가리와의 외교관계를 代理大使급으로 격하시키는 한편 이를 헝가리가 "분열주의자들의 2개 조선 조작음모에 가담한 결과"(외교부 각서)이며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배신행위"(대변인 회견)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외교적 대응과 강경태도를 보이면서도 쌍방간의 "친선관계 노력은 계속할 것"임을 다짐하는 것을 잊지 않음으로서 東歐圈국가들의 對韓관계발전에 북한이 제동을 거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 (2) 統一方案 및 南北對話 逆攻勢

북한은 한국의 「7·7선언」과 북방정책이 지니고 있는 對內外的 호소력과 파급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외교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여러가지 對南제의를 내놓아 남북한관계에서 한국에 대한 逆攻勢를 벌여왔다.

먼저 북한은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3者회담」, 주한미군 철수, 정치·

23) 內外通信, 資料版(1989. 2. 10), p.外2Z.

군사문제 우선, 한국 국내문제에 대한 관심·간섭 등 북한이 견지해 온 한반도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固守하면서 새로운 명칭의 제의들을 내놓든가 한국의 제의에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한국의 전진적 자세에 對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평화보장 4원칙에 기초한 한반도 긴장완화방안」, 「정치군사회담」, 「汎 민족대회소집을 위한 실무 대표회담」, 「남북국회연석회의」, 「체육회담」, '89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제의, 그리고 盧泰愚대통령이 제의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유연한 듯한 반응이 그것이다.

「평화보장 4원칙」은 ① 통일지향 ② 주한미군의 철수 ③ 남북 軍縮 ④ 당사자 협상이라는 것인데 북한은 88년 11월 7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등 연합회의를 열어 이 4원칙과 이에 기초했다는 한반도 긴장완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①항이 교차승인·교차접촉반대와 한국의 反共대세 완화 ②항은 구체적인 미군철수 방안 ③항은 1992년까지 남북병력의 10萬이하 수준으로의 단계적 감군, 그리고 ④항은 3者회담을 의미하는데 불과함을 들어내었다.<sup>24)</sup> 또한 노태우 대통령이 '88년 8·15경축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데 대해 김일성은 9월 8일 「9·9절 경축보고」에서 그러한 고위회담은 북한이 발의한 문제이며 "조국통일을 하려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평양을 찾아오는데 대해서 환영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긍정적 반응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고려연방제」를 單一議題로 하고 미군철수와 미·북한 평화협정, 남북한간 불가침 선언 등을 주장하고 있는것 이었으며<sup>25)</sup> 그후에도 선전적 차원이외에는 종래의 주장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제의한 「남북정치협상회의」는 우리측의 4당총재 및 김수환,

24) 内外通信, 資料版, 제614호(1988. 11. 11), pp.연1R~연 6R 참조.

25) 남북대화, 제45호(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88), pp.108-109.

문익환, 백기완 등 개별인사 3명을 초청, 연방제 토의를 하자는 것으로 그동안 북한이 여러 형태로 제의했던 「남북연석회의」의 變型이다. 한편 북한은 한국측에서 '88년 8~10월 「民統聯」등 재야단체들이 추진했던 汎民族大會에 대한 반응으로서 한국의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에서 同大會소집준비를 위해 南과 北, 해외교포 실무대표들의 예비접촉을 제의한 바 있다.

「7·7선언」이후 한국의 대화제의와 관련하여 북한이 명칭을 바꾸어 호응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은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접촉」, 「국회회담 예비접촉」, 그리고 체육회담이었다. 고위당국자회담은 '88년 12월 한국의 강영훈 국무총리가 북한 연행목 정무원총리에게 제안한 것을 북한측이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으로 명칭을 바꾸어 융합으로써 2차의 예비접촉이 이루어진 바 있다. 회담은 본 회담의 명칭과 대표단구성, 회담일시, 의제 등에서도 異見을 보였으나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를 집중거론 함으로써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89년 4월 12일로 예정되었던 3차예비회담도 북한측이 문익환 입북 사건을 구실로 계속 연기해 왔다.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은 우리 국회의 金在淳 국회의장이 제20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을 렴픽 대회에의 북한참가 촉구 결의문」을 담은 서한을 88년 7월 9일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양형섭 의장에게 전달한데 대하여 그해 7월 21일 양형섭이 「남북국회연석회의」와 「미·북한 국회회담」을 동시에 제의한데서 비롯되었다. 88년 8월 19일부터 同年 12월 29일까지 7차에 걸친 준비접촉과정을 통해 남북양측은 회담형태, 회담장소및 시기, 회담운영방식, 대표수 등에 합의하고 회담형식, 의결방식, 의제 등 남은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타결이 가능했었으나 7차준비회담에서 팀스피리트훈련문제를 제1의제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여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더니 89년 2월 8일로 예정되

었던 8차 준비접촉은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삼아 일방적으로 연기를 선언하였다.

북한측은 「7·7선언」이후 또한 한국측의 민간단체들에 대한 對話공세를 벌여왔는데 이는 對話차원이라기 보다 對南공작적 차원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 (3) 對南工作 차원의 利用

북한은 「남북정치협상회의」, 「범민족대회를 위한 실무접촉」등을 주장하는 등 당국자 회담보다는 집단이나 개인간의 연대에 의한 일종의 多面的 통일전선전술방식의 회담에 점차 중요성을 부여해 오더니 한국내 인사들을 개별 접촉을 통해 密入國시키는 등 工作的 차원으로 확대해 왔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선회는 6공화국의 출범과 與小野大 政局구조의 형성, 특히 「7·7선언」후 한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反獨裁·反美·反外勢民主化·통일운동의 확산에 고무되어 이러한 세력과의 연계투쟁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이는 김일성이 89년 신년사에서 "오늘날 남조선 통일운동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계층에 국한된 운동이 아닌 대중운동으로 확대하여 통일3대원칙과 연방제 통일투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한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남한측에 제의하면서 許談위원장명의로 남한의 영향력있는 개별인사들에게 同회의를 위한 평양行을 초청하여 남북대화를 빙자한 對南工作을 기도하였다. 또한 '89년 3월 27일에는 조선로동당을 위시한 25개 정당·사회단체들의 연합성명을 통해 남북한의 「민간급 대화」를 다방면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시켜 "조선

26) 内外通信, 資料版, 제636호(1989. 4. 21), p北4A.



인민은 통일의 주체로서 누구나 통일문제를 놓고 서로 접촉하고 대화할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하에 민간레벨의 자율적인 대화와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민족공동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협력방안등을 수용하며 개별인사의 북한 방문도 허용·환영한다고 밝혔다.<sup>27)</sup> 결국 북한은 한국의 「7·7선언」후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나 당국간 합의의 성격을 띤 기존 대화통로보다는 한국의 남북대화창구일원화 정책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민간급대화에 관심을 두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9년 김일성 신년사 이후 북한이 내놓은 「민간급 대화」제의로는 「범민족 대회 소집을 위한 예비회담」(2. 26), 남북작가회담(2. 17), 「5·1절 공동기념행사 제의」(3. 31), 「남북천도교인 회담」(4. 5), 「평양축전 참가문제를 위한 6개 단체 대표회담」(5. 4), 「남북 역사학자 회담」(5. 24), 「남북종교인 회담」(6. 2) 등을 들 수 있다. 88년 12월 26일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명의로 한국의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全大協)에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참가 초청장이 보내져 그후 全大協의 파견에 의한 임수경의 밀입북사건이 발생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민간급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의 「7·7선언」과 창구일원화정책간에 혼선을 조장하고 "對南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혼란조선과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同調세력 규합에 주력하는 동시에 이들 민간급 대화를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애호적 이미지 제고의 한 수단으로 활용"<sup>28)</sup>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민간급 대화 제의와 함께 이러한 「통일대화」를 문익환목사, 서경원의원, 문규현신부, 임수경양의 밀입북사건으로 연계시키는 정치공작을 전개시켜 남북한관계를 경색시켰다. 북한측은 이러한 밀입북사건을 통

27) 같은자료, pp.北5A~北6A.

28) 内外通信, 資料版, 64號(89. 6. 9), p.對4K.

해 한국내 통일논의에 편승하여 좌경세력의 통일주장을 표면화시키고, 한국 측의 밀입북에 대한 단속을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왜곡시키며, 당국간 대화와 한국정부의 통일노력에 부정적 시각을 조성하려 노력해 온 것이다. 예로서 문익환 사건에 대해 북한은 연이은 군중집회, 성명, 농성들을 통한 비난 선동과 함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의 공동 성명을 통해 "문목사의 평양방문을 ... 간첩단사건으로 꾸며 ... 이것은 오늘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과 남의 단합과 대화도 바라지 않고 통일도 원하지 않으며 그들 자신이 내놓은 7·7선언까지도 스스로 부정하면서 북과 남의 문을 완전히 닫아맨채 5공독재 부활<sup>29)</sup> 운운으로 왜곡 비난하였다.

---

29) 內外通信, 資料版 640號(1989. 5. 19), p.南3A.

## 4. 北韓의 戰略 分析

이상 한국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7·7선언」후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적극적인 남북한관계 개선 노력과 북방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構圖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이 남북대결의 종결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간의 화해·협조를 「7·7선언」을 통해 제의한데 대해 이를 전략적으로 거부하고 이제까지 북한이 지켜온 「하나의 조선 정책」, 「교차승인 반대」, 「남조선 혁명노선」을 계속 固守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한국의 새 정책이 북한의 기본노선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認知하고 있으나 북한체제의 유지와 남북한 경쟁에서의 북한의 立地 유지를 위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推論할 수 있다.

북한은 더 나아가서 「7·7선언」등 한국의 새로운 對北자세를 북한에 대한 새로운 공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89년 5월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병수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7선언과 盧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등을 논평하면서 "최근 남조선 당국은 경제력을 배경삼고 서울올림픽의 여세를 몰아 우리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쳐보려는 기도에서 對北方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남조선인들의 강렬한 통일염원을 타산하지 못하고 통일문제에서 정치의 의의와 역할을 무시하고 있는대로 부터나와 어차피 실패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한데서<sup>30)</sup>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7·7선언」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북한체제 자체의

30) 김달술, 앞의 글, pp.38-39.

존속에 위협이 된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따라서 북한은 「7·7선언」에 대해 전략적노선변화로 응하는 대신 전술적 대응을 해온 바, 그것은 먼저 한국이 새로운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利點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의 북방정책을 「두 개의 조선」조작 책동이라 비난하고 중국과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강화하는데 注力하는 한편 이들의 한국접근에 대해 강력한 반대와 불만표시를 통하여 이를 저지·방해하는 것이다.중국과 소련 등 공산국가들이 북한의 이러한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對韓관계를 발전시켜왔으나 북한을 의식하여 한국과의 접근, 특히 정치적문제에 극히 신중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7·7선언」이 남북한관계에서 한국측에게 가져다 줄 心理戰上의 이득을 상쇄시킬 필요성과, 한국이 추구하는 당국자중심의 남북대화가 정착되는 경우 그것이 곧 「2개 조선 조작책동 반대」라는 그들의 입장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여, 한국의 대화제의를 견제할 수 있는 逆제의를 多發적으로 내놓는 것이다. 「7·7선언」후 북한이 내놓은 여러가지 방안과 제의들이 그것이다. 그들의 제안들은 그 실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한국측의 대화제의를 상쇄시키려는 전술적의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진행중이라도 필요하면 구실을 불허 중단할 수 있다. 북한측이 남북한고위당국자회담 예비접촉을 3차에 이르러 문익환사건을 구실로, 국회회담 예비접촉을 8차에 이르러 텃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각각 일방적으로 연기했던 것은 북한이 대화를 그 자체보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북한은 「7·7선언」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사회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의 對南전략의 차원에서 7·7

선언이 지니고 있는 약점을 찾아 한국에 대한 逆攻勢를 전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원래 「7·7선언」의 내용속에는 상대방인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해 오지 않는 경우, 남북관계에서 한국측의 어느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세계사적 대세에 민족의 진운을 발맞추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또한 북방정책 등에서 기대되는 이득이 그러한 손실을 초과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측이 惡用할 수 있는 부분은 대외적으로는 교차접촉의 확대이고, 대내적으로는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상호교류·해외교포들의 북한방문 자유화·민족공동체의 개념에 의한 對北敵對의식의 완화 등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은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해서는 온갖 수단을 다하여 이를 沮止·억제하려고 노력하면서 한국이 그 友邦國들과 북한과의 접근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88년 9월 16일 日本의 對北제제조치 해제, 同年 10월 31일 미국의 4개항 對北韓관계 완화조치(북한인의 자유로운 민간차원의 訪美허용, 미국인들의 북한방문 制限완화, 인도적 차원에서의 미국의 對北韓交易 허용 및 미국의교관의 북한외교관과의 접촉 완화)를 북한은 이들과의 접촉확대에 활용하여 그들이 주장해온 3者 회담·對美평화협정의 논리를 전파시키고 자신의 對外的입지를 강화시키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7·7선언」에서 밝힌 남북한간의 상호교류·해외교포의 북한방문자유화에 대해서는 한국의 창구 일원화 논리를 「반통일」적인 것이라 매도하면서 한국 정부당국을 배제한 한국내 단체, 개별인사들의 入北工作을 전개하고 합리화하는 구실로서 이용해 왔다. 이와 함께 민족공동체 개념에 의한 통일논의의 자유화, 對北적대의식의 완화추세 등에 편승하여 북한은 한국내 在野단체들을 부추겨 혁명적 분위기 조성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한국의 「7·7선언」과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對應전략은 「전략적 방어와 전술적 공세」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즉 한국이 취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개념에 입각한 남북한 화해·협조, 교차접촉·교차승인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북한의 통일논리와 체제에 대한 위협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 전략적 방어자세를 분명히 하는 한편, 「7·7선언」과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취약점은 이에 편승, 전술적 이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 5. 結 論

이상 한국의 「7·7선언」 및 북방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補完·방향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어떤 정책목표의 진전성은 그것이 바람직한가, 실현가능한가, 그리고 비용과 成果간의 비율은 감내할 만한가 하는 세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7·7선언」에서 표명된 남북한관계와 남북한의 국제관계의 방향제시는 우리 민족이 분단의 벽을 헐고 통일로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남북한 대결·적대보다 화해·협조하고 서로 적대적이었던 상대방 동맹국들에 대해 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를 화해로 이끌지 않고는 평화적인 통일의 길은 찾을 수 없다. 다행히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미·소간의 新대당뜨 氣流와 공산권의 개혁·개방추세로 그러한 정책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국제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7·7선언」의 기본방향은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고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혔다는 점에서 올바른 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현가능성의 평가에 있어서 長期的으로는 낙관이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처음부터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다. 이제까지 경쟁과 적대관계로 집착되어 온 남북한 관계가 「선언」 하나로 화해·협조관계로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북한의 긍정적 반응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7·7선언」이 남북한관계의 극적인 전환보다도 한국의 국내외적 이미지提高와 北方外交의 活路개척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실현성이 있으며 또한 그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셋째, 비용과 成果간의 비율에 있어서 현재 북방외교의 결과와 북한의 逆政에 의한 費用 중 어느 것이 더 큰 것인지는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국제적인 大勢는 한국의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逆政에 의해 남북한관계의 경색, 密入北사건으로 인한 혼선등의 費用을 지불하고 있다.

북한의 「7·7선언」에 대한 전략적 거부와 전술적 利用이라는 反應에 대응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위의 정책평가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7·7선언」의 기본정신은 어떤 비판과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의 장기적 목표로서 꾸준히 이를 견지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민족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화해·협조관계의 추구, 주변 국가들과의 교차집축·교차 승인은 국제정세의 大勢가 그러하고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이 그러하기 때문에 북한의 拒否와 비난에 의해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둘째, 「7·7선언」의 理想主義的 성격은 현실주의적인 정책에 의해 補完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한관계에 엄연히 존재하는 군사적 대치상태, 相互不信, 북한체제의 異質性가 對南전략 등에 대해 완벽한 대비책을 세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7·7선언」의 정신은 실현된 바탕을 잃게 될 것이다. 「7·7선언」에서 제시한 理想的 방향을 남북한관계의 현실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국민홍보와 정책적배려가 요구된다.

끝으로 「7·7선언」과 북방정책의 成果는 「7·7선언」과 북방정책의 成果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그 費用을 최소화하는 일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북한의 對應전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7·7선언」의 효과를 최소화하고 한국으로 하여금 그 費用을 최대한으로 지불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7선언」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북방정책을 꾸준히 계속하고 이러한 정책을 중심으로 남북한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재창출해야 한다. 또한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美·日 등 기존 우방국들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하고, 대북방정책추진에 있어서 이들과의 협조를 기반으로 삼으며, 특히 북한의 對南전략에 기회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일문제와 남북한관계의 기본방향에 관한 國民的합의기반을 다지는 일이 긴요하다 하겠다.

한국이 6공화국에 이르러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협력·화해의 時代 개막과 북방정책은 그 기본방향을 堅持하면서 북한의 反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이에 기초한 補完작업을 착실히 추진할 때, 그 성공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며, 마침내 목표로하는 북한측의 통일문제에 관한 전략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統一安保 論理의 混亂克服을 위한 理念教育

1989

研究責任者  
鄭世九  
(서울大)

國土統一院



## 要 約 文

우리가 최근 겪고 있는 理念的 混亂은 새로운 民主化의 定形과 그에 따른 指導理念의 定立에 대한 國民的合意와 共感帶가 형성되지 못한데다 기존의 指導理念이 移行過程도 없이 한꺼번에 붕괴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敵國과 友邦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있다.”는 表現에서 또는 ‘自主民主主義’와 ‘民衆民主主義’의 개념상의 混沌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혼란의 양상은 소위 ‘右傾分子’와 ‘民主鬪士’의 正體를 구분코자 하는 데서 발견되기도 하며 한 북한 방문목사에 대한 규탄과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서, 또 때로는 어떤 理念集團에 대한 뜨거운 환호와 증오심의 교차속에서 또는 中高等學校 現場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理念的 混亂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志向하는 이데올로기가 國民 대다수에게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信念體系나 行爲判斷의 지침을 주지 못함으로써 國民들의 理念的 혼돈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국민 개개인의 正體性을 확립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外的環境要因으로는 우리의 급격한 北方政策의 推進 및 共產圈의 脫理念的 性格으로의 政策轉換을 들 수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우리가 敵으로만 여겨왔던 共產主義者들과의 접촉시도는 기존의식과 새로운 의식적 요구 사이에 理念的 葛藤을 과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둘째 內部的環境要因으로는 自由民主主義體制의 未定着과 左傾勢力의 跋扈를 들 수 있다.

이념적 혼란기에 나타나는 理念教育的問題들은 최근에 나타나는 이념적 혼란양상이 그대로 學校現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과 우리나라 종래의 學校風土속에서 조성되어 온 것이 개선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기존의 問題點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代表的인 것은 中·高等學校 現場에서 이

념교육의 目標 및 內容에 관련되는 理念教育方向 設定의 混亂과 일부 의  
 식화된 教師들이 주로 中·高等學生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意識化 教育이  
 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理念教育을 담당하는 有關敎科들  
 의 教師들과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行政職 專門職 종사자들이 우리의 理  
 念에 대한 滿意된 認識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내세우고 지지하  
 는 意志와 때로는 勇氣가 부족하다고 본다. 특히 理念教育擔當敎師들의 대  
 다수가 우리의 理念을 내세우고 그것을 청소년 學生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矜持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이념교육을 담당하는 敎科의 敎師를  
 中心으로 하는 이념교육 담당자들이 우리의 敵對이데올로기나 체제에 대한  
 비판교육에 대한 學校 内外로부터의 규탄에 대하여 무기력한 反應을 보이  
 고 있고 특히 최근 맹렬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좌경세력과 그들이 내세  
 우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비판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세째로  
 일부 의식화된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좌경의식화 교육은  
 反社會的이고 反教育的 行爲로 매우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  
 다고 본다.

理念教育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對應方案은 여러각도에서 탐색될 수 있겠  
 으나 學校內 教育활동 全般을 통하여 모든 관리직 및 교과담당교사들이  
 추진해야할 대응방안, 이념관련 교과 즉 道德科 國民倫理科등의 敎科活動을  
 통하여 교과담당교사들이 추진해야할 대응방안, 그리고 교과외활동을 통하여  
 교사들이 실행하여야할 대응방안을 3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學校內 教育活動을 통하여 추진해야 할 方案으로는 첫째 이념문제  
 에 대한 巨視的 眼目を 지니기 위하여 교육자 자신들도 노력하고 또 학  
 생들에게 그것을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즉 左右理念對決을 전제  
 로하는 이념교육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이념을 분명히 設定

하고 또 學生들에게도 분명히 파악케 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自由民主主義 民族主義 平和統一의 이념을 中心으로 民主的 生活樣式을 生活化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共產主義理論, 그들의 혁명책략, 체제 그리고 급진좌경사상을 비판할 수 관점을 지녀야하고 學生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 지도해야 한다. 네째 학교에서 다룬 우리의 이념과 적대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주지시키고 특히 좌경세력의 활동양상을 상세히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가정 지도를 비롯한 제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다음으로 道德科・國民倫理科등의 이념관련 教科運動과 관련지어 추진해야 할 方案으로는 첫째 모든 教育活動에서 다루는 우리 理念과 적대이데올로기에 대한 體系的인 知的 틀을 확립시켜주고 특히 수업지도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이념교육에서 추구하는 價値觀을 내면화 생활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知的機能 특히 政策的 思考機能(Policy thinking skills)이나 批判的 思考機能등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도덕과・국민윤리과등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學生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표방하는 理念과 體制를 수호하기 위한 활발한 理念運動을 일으켜야 한다.

끝으로 教科外活動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할 理念教育 方案으로는 첫째 特別活動指導난 生活指導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理念的 意識化教育을 시켜야 한다. 둘째 學校 內外에서의 규칙적인 運動이나 가능하다면 武道(주로 태권도나 유도) 修鍊을 통하여 강인한 體力과 精神力을 갖게 하여야 한다.





## 目 次

1. 序 .....	171
2. 최근 展開되는 理念的 混亂의 樣相 .....	173
3. 理念的 混亂期에 대두되는 理念教育의 문제 .....	179
4. 理念教育 문제에 對한 理念教育 對應方案 .....	188



## 1. 序

오늘날 우리 韓國人들은 理想的 混亂期를 살아가고 습읍니다. 그것은 최근 전개되는 국내외의 理念 關聯 事態가 너무나 급변하고 충격적인 경우가 많아, 종래에 우리가 지녀 온 意識構造나 知的 能力 그리고 價値判斷 基準을 가지고는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은 물론 예측이나 대응 행동 등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所謂 ‘思惟의 有効性의 限界’에 부딪칠 때 우리들의 대다수가 당황하고 불안을 느끼며 혼란에 빠지게 되는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들이 빠져있는 이념적 혼란의 양상은 매우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습읍니다. 이는 “敵國과 友邦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있다”는 표현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自由民主主義’와 ‘民衆民主主義’의 개념상의 混沌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혼란의 양상은 소위 ‘左傾分子’와 ‘民主鬪士’의 正體를 구분코자 하는데서도 발견되기도 하며, 한 北韓 訪問 牧師에 대한 규탄과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볼 수 습읍니다. 또 때로는 어떤 理念集團에 대한 뜨거운 환호와 증오심의 교차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최근에 전개되는 이러한 이념적 혼란상은 初·中·高 學校教育의 현장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추진해 온 反共教育을 知共教育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고, 종전과는 다르게 인식되는 共產圈이나 北韓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도 수업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방문인사에 대한 질문과 같은 교과서에 없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教師들 자신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反理念教育이라고 할수있는 左傾意識化活動을 벌리는 경우에는 그 혼란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전개되고 있는 이념적 혹은 이념교육적 문제 사태는 우리나라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그 克服을 위한 대응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고 이에 따라 政府 次元에서도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발표된 바 습읍니다. 或者는 그러한 문제중의 어떤 點은 이미 이념교육적 접근법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여 司法的 대응 등의 教育外的 처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주장에 一理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선책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理念問題는 그것 자체가 어디까지나 의식상의 문제이므로 가능하다면 교육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기한바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수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하여, ①최근 전개되는 이념적 혼란의 樣相을 밝히고, ②이념적 혼란기에 대두되는 이념교육의 問題를 지적하며, 끝으로, ③동 문제들의 해결 및 극복을 위한 이념교육의 對應方案을 中·高校 教育現場을 중심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 2. 最近 展開되는 理念的 混亂의 樣相

최근에 나타나는 이념적 혼란의 모습은 앞에서 단편적이거나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상을 좀더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理念 혹은 여기에서 이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이데올로기(ideology)가 무엇이며 그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간략하게나마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의미는 흔히 부정적이며 경멸적인 시각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支配段階의 虛偽意識”으로 혹은 “經驗적으로 虛偽的이고 道德的으로 邪惡한 信念體制”로 혹은 “支配段階의 사회적 경험에 의하여 생산된 일련의 政治的 幻想이며 지배계급을 合理化시켜 주는 觀念體系”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관점을 탈피하여 “한 年齡層이나 집단의 心的 總構造의 특성과 性向”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집단에 의하여 사실 혹은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價値觀 혹은 信念體系로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現在의 그리고 當爲的인 世界觀을 갖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現 世界를 매우 단순하게 이해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주는것”이라고 정의 되기도 합니다.<sup>1)</sup>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機能에 대해서는 利害理論(Interest Theory)과 緊張理論(Strain Theory)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社會 結束(Social Solidarity)과 個人的 正體性 確立(individual identity)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풀이하면, 이데올로기는 ①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세계를 지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定型化된 觀念들, 즉 하나의 정치적 信念體系로서의 認知構造를 제시해주고, ②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행위판단의 指針을 제시해 준다

---

1) 이데올로기의 의미, 종류, 기능에 대한 종합적 토론을 위해서는 필자의 번역서, 現代政治이데올로기, 서울: 教育科學社, 198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 합니다. 또, ③사람들의 갈등을 해소시켜 統合으로 이끌어 주고, ④自己正體性을 확립시켜주고, ⑤사람들에게 목적의식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개인이나 집단 생활에 活力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겪고 있는 이념적 혼란은 새로운 民主化의 定型과 그에 따른 指導理念의 定立에 대한 國民的合意와 共感帶가 형성되지 못한데다 기존의 지도이념이 移行과정도 없이 한꺼번에 붕괴되므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데올로기의 機能論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지향하고 표방하는 이데올로기가 국민 대다수에게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信念體系나 行爲 判斷의 지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념적 혼돈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따라서 國民統合의 여건을 조성치 못함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正體性을 확립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이데올로기의 혼란기에 처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게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 생활에 活力이 없어지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념적 혼란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여러 방향에서 탐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역시 우리의 對外體系 및 外國의 상황 변화와 관련되는 外的 環境要因과 國內에서 벌어지고 있는 事態와 관련되는 內的 環境 要因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 환경요인으로 가장 대표되는 것은 우리의 급격한 北方政策의 推進 및 共產圈의 脫理念的 性格으로의 政策 轉換을 들 수 있습니다.

북방정책은 우리나라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도 韓半島의 安保環境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련, 중국, 동구권 등 주요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동시에 북한과도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모색코저하는 外交的 努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방정책의

구상은 197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80年代에 들어와서 부터이고, 특히 1988年 第6共和國의 출범 이후 부터 입니다.

소련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정식수교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디다만 貿易事務所의 상호개설을 통하여 對蘇經濟交流가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고,(1989年 4月) 東歐圈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도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적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직접 항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그들의 짐중하는 對南工作등으로 일시적으로 냉각기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7·7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추진될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공산권의 脫理念的 性格을 띤 대외정책의 등장은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1985年 집권하면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련경제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해 '改革' '開放' '新思考'의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그는 "전인류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계급 투쟁'의 개념은 인류보편이익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1987년말 미국과 역사적인 INF(중거리핵전력) 폐기협정을 체결하였고, 제3세계의 공산화정책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소련의 개혁 정책에 힘입어, 東歐 공산권 국가들의 탈이념적 정책추진도 급속도 진전되어 이제는 공산주의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 1당지배의 포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도입 등의 조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多黨制의 실시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고 개인기업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1979年 이래 鄧小平이 자본주의식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하

여 지방 정부 및 각 기업에 독자적인 경제시책을 단계적으로 위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外的 環境의 변화는 우리가 8·15해방이후 최근까지 지나간 40여년간 추구해 온 反共論理 및 反共霧圍氣와 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50代 이상은 6.25동란으로 생활 경험에 따른 反共意識이 내면화되어 있고 청소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을 통해 反共 의식을 형성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북방정책의 급속한 추진을 통해 이제까지 敵으로만 여겨왔던 공산주의자들과 접촉을 시도하는것은 기존 의식과 새로운 의식적 요구사이에 理念的 葛藤을 파생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권의 중주국인 소련의 경우 계급투쟁이나 세계공산화정책등과 같은 기본 노선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이념상의 변화인지 아니면 戰略·戰術上의 변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대결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민족공동체의 일부로 포용하여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협상과 평화를 외칠때마다 다른 음모를 꾸며 우리에게 큰 타격과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며 또 현재도 그렇게 하기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념적 혼란을 일으키는 외적 요인과 함께 또 하나의 심각한 요인은 내적 환경요인 입니다. 그것은 自由民主主義體制의 未定着과 左傾勢力의 跋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착을 위한 하나의 전환점은 1987년6월에 있었던 '6.29선언'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동 선언에서는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하는 등 민주화를 통하여 당시



의 난국 타개를 시도했던 것 입니다.

그후 2년여가 흘러간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직접 선출과 第6共和國의 출범, 與小野大의 국회구성, 언론 자유의 신장 등 어느정도의 민주적 정치 발전을 위한 요건이 마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대하던 民主主義體制의 정착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民主化에 대해 政府나 與黨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野圈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특히 在野團體와 大學生運動圈에서는 反體制的이고 革命的인 민주화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의 當面課題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制度圈 政治의 對應力 및 統合力 不在에다 사회각계각층의 무분별한 요구의 분출 및 그에 따른 투쟁위주의 無秩序, 그위에 경제 또한 냉각국면으로 접어들어 나라자체가 위기의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左傾勢力의 등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6.25동란 이전에도 좌경세력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의 시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현재의 좌경세력은 70년대를 거쳐 급진좌경사상 즉 신마르크스주의, 신좌파운동, 종속이론등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80년대를 거치면서 權威主義 政權에 대한 저항과 民主化運動 속에서 또 産業化과정에서 파생된 부작용과 모순을 好기로 잡아 그 사회적 지지기반과 세력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좌경급진세력은 그후 제6공화국의 출범과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발호하기 시작하여, 1989년 부터 본격적인 현체제의 붕괴작전에 들어간 듯 보입니다. 全民聯을 중심으로 하는 재야정치단체는 팀스포리트훈련반대, 주한미군철수 등을 통하여 조직적 대중투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운동권 대학생들은 전략상 學內문제로 대학사회의 분규를 일으키면서 이데올로기적 폭력투쟁에

들입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 단체들이 외형적으로는 독자적투쟁 목표와 양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民衆民主主義의 가치 아래 그들의 ‘反帝·反과쇼·反買辦’의 민중혁명 성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內的 環境의 변화는 얼마 전까지 權威主義體制 아래서의 臣民的 政治文化에 익숙해 온 많은 사람들에게는 급작스런 他律的 秩序로부터의 解放으로 혼란감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책과 말로만 民主主義를 배웠지 실제로 민주적 생활경험이 결여되었고 民主市民으로서의 계반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市民文化의 형성이 되어 있지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自律的規範을 마련치 못해 자기의 권리는 주장할 줄 알면서도 의무를 수행하는데는 약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는 목청을 돋우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政策的 思考能力(Policy thinking skills)이 부족한 관계로 대화나 타협보다는 항상투쟁과 대결이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라면 권위주의시대가 더 좋았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좌경세력에 대해서도 느끼는 혼란은 마찬가지 입니다. 좌경세력은 분명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고 이땅 위에 그들이 말하는 民衆이 지배하는 사회 즉 프롤레타리아獨裁의 한 형태를 이루려는 폭력 혁명집단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민중민주주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유사하여 분명히 自由民主主義를 부정하고 基層民衆외의 모든 사람을 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쟁목표와 타도대상에 대해서도 일치합니다. 反共法의 폐기와 駐韓美軍의 철수를 통하여 統一戰線을 통하여 폭력혁명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도 같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을 열렬한 民主鬪士 아니면 民族主義者 쪽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정체과약을 기피하거나 外面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3. 理念的 混亂期에 대두되는 理念教育의 問題

이념적 혼란기에 나타나는 이념교육적 문제들은 최근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理念的 混亂 樣相이 그대로 학교 현장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과 우리나라 종래의 學校 風土속에서 조성되어 온 것이 개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기존의 문제점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sup>2)</sup>

최근에 나타나는 이념적 혼란 양상과 함께 대두되는 이념교육의 문제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中·高等學校 現場에서 이념교육의 목표 및 내용에 관련되는 理念教育 方向 設定의 混亂과 일부 의식화된 教師들이 주로 中·高等學生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意識化教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념교육 방향 설정의 혼란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념교육의 性格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념교육은 “한 國家·社會의 집단이 지향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을 근본적으로 떠받들어 주고 그 正當性和 合理性을 의식적으로 깨닫게 해주며,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統合된 價値觀 혹은 信念體系를 갖게하고, 그에 일치되는 행동성향을 신장시키기 위한 教育的 努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부차적으로 “한 集團이 志向하는 이념교육 방향에 적대되는 理念·體制·運動등에 대하여 비판하고 맞설수 있는 意識形成을 위한 教育的 努力”이 내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념 교육에서 강조하여야 할 점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

2) 이념교육적 문제점들은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民倫理教育科에서 실시한 道德科·國民倫理科 一正資格研修에 지난 5년간 참여한 전국의 중·고교 교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낸 결과와 필자의 연구, 初·中·高·大 道德·國民倫理教育의 效果에 관한 諸 關聯要所分析研究 1987, 그리고 1988년과 1989년에 걸쳐 1990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국민윤리’교과서의 개발도중 참여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종합한 것임.

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그 속에서 個人的 행복과 國家·民族의 번영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이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가를 냉철하게 분석해 낼 수 있는 眼目을 갖게 하고 그에 일치되는 意志와 行動 性向을 지니게 하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自由民主主義體制의 理念을 분명하게 定立 및 內面化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對共產圈 특히, 北韓과의 理念對決에서 優位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와 敵對 및 競爭하는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그리고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위협하는 左傾勢力의 이데올로기와 論理를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이념 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sup>3)</sup>

이와 같은 이념교육의 性格 糾明에 비추어 볼때 현행 중·고교이념교육은 다음과 같은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이념교육을 담당하는 有關敎科의 敎師들과 그들을 뒷받침해 주는 行政職·專門職 종사자들이 우리의 이념에 대한 合意된 認識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내세우고 지지하는 意志와 때로는 勇氣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방하고 지향하는 理念的 目標과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는 중학교의 道德科와 고등학교의 國民倫理科를 ‘어용과목’ 혹은 ‘국책과목’으로 규탄하고 매도하는 사태속에서 대다수의 담당교사들은 의기소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몇몇하게 소신을 내세우는 경우도 적었습니다. 그 외 他敎科의 담당교사들은 그에 동조 혹은 방관자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지난날의 民主發展을 위한 屈折된 憲政史를 가지고 있음을

---

3) 이와 같은 이념교육에 대한 정의는 2年前(1987.4.22~24)全北敎員研修院에서 개최된 ‘初·中·高 理念教育 關係官研鑽會에서 필자가 발표한 ‘初·中·高等學校 理念教育의 實態와 效率化 方案’에 포함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경우에도 政府와 輿圀이 제시하는 방향과 野黨이나 在野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신과 체제적 특성은 이미 先進民主主義國家의 모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또 지금은 진통을 겪기는 하지만 민주발전의 단계를 확실히 다져가고 있으므로 이념교육 담당 교사들의 無所信에 대한 구실을 주지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념교육 담당교사들의 대다수가 우리의 이념을 내세우고 그것을 청소년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긍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교육의 遂行은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고 體制存續理論(Systems Persistence Theory)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나라가 표방하는 이데올로기와 신념체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광범한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과제’(1977.9.5)에서 그들의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당성·로동계급성 구현, 주체사상 수립등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 正義, 平等, 責任, 自由, 多元性, 個人的 私的權利 尊重의 민주적 신념을 분명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종래에는 이념교육, 윤리·도덕교육등을 학교나 지방의 자유재량에 맡겨서 운영했습시다라는,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을 정부가 직접 교육과정을 정하여 필수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최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이념교육 동향에 비추어 볼 때 또 우리의 청소년들

에게 우리의 理念 定立이 시급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서 이념교육 담당교사들의 우리의 이념에 대한 知的 틀의 確立과 그 확산을 위한 自信感과 意志의 결여는 하나의 큰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둘째, 이념교육을 담당하는 教科의 教師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교육 담당자들이 우리의 敵對이데올로기나 체제에 대한 비판교육에 대한 學校內・外로 부터의 규탄에 대하여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 맹렬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左傾 協力과 그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비판 의식이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및 공산권의 체제 그리고 북한을 비판해 온 從來의 反共教育을 규탄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추진해 온 모든 이념교육을 무시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념교육 담당자들이 취하는 無氣力한 자세입니다. 종래의 반공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반공의식을 고취하므로써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對共產圈 및 對北韓 交流에 부합되지 않는 의식을 길러냈고, 특히 對北韓 관계에서는 학생들에게 통일은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생각과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말살시켜왔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어느 정도 수긍되는 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反共教育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묵인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학교교육은 時事問題를 빠른 시간내에 보도하는 大衆媒體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이념교육은 앞에서 定義를 내린 바와 같이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未來社會의 主役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신교육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外交政策이 변했다고 해서 이념교육 마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반공교육은 20세기의 후반기를 특징짓는 冷戰體制와 이념적 對決構造 속에서 실시되어 온 것이므로 그나름대로의 適實性을 지

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적인 분위기가 진정한 데탕트時代로 정착된다면, 우리의 이념교육은 서서히 방향전환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시점에서 우리의 對決相對인 북한은 기본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반면 우리만 일방적으로 反共教育철폐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경망스러운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종래의 이념교육 自體가 아니라 이념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理念性向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사들이 이념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심각한 문제이며 그에 따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學習成果上의 문제는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좌경 세력과 그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의식의 결여의 문제는 뒤에서 별도로 다룰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려 합니다.

최근에 대두되는 이념교육 문제로서 지금까지 거론한 바와같이 方向 設定上의 혼란에 연결시켜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일부 의식화된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左傾 意識化 教育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최근 言論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急進左傾의 외골의 신념 체계를 주입·세뇌하려는 것이 얼마나 反社會的이요, 反教育的인 행위인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와 같은 교사들의 행위가 지닌 심각한 문제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교사들의 의식화교육은 그 成果면에서 본다면 모든 다른 이념교육적 努力이나 投入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킬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는 點에서 그 심각성을 지닙니다.

좀더 상세히 지적하면, 현행 교육제도안에서는 교사들 특히 이념관련 敎科 즉 道德科·國民倫理科·社會科 등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념적인 政治社會化(political socialization)에 模倣 및 同一視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 교과시간에 끊임없이 이념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이디어를 知覺, 變形, 再生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이지 않는 精神的 活動(mental activity)까지를 죄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肯定的 強化(positive reinforcement)와 否定的 強化를 실시할 수 있고 條件化(conditioning)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교사들이 교실수업에서 또 그외의 여러 형태의 집회를 통해 현행 학교 교육에 대한 否定的인 批判 意識을 고취하고 民衆 理念과 反美感情을 주입할 경우 모든 다른 학교 및 가정교육은 無力化되고 또 封鎖당하는 것입니다. 의식화 교사들이 1989年初 서울에서 고등학생 및 예비고등학생(중3)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의식화교육의 교재에서 발췌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는 수인 번호를 붙이고, 남은 형기를 마칠 때까지는 조용히 길들여져야 하는 교도소인지 모른다.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은 나 죄수 번호 20504 XXX는 석방후에 더 큰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도 작업시간을 알리는 벨소리를 기다린다.
- 교사는 작업대 위에 선 직공이고, 교장은 이곳의 공장장일 것이다. 나같은 불량선고받은 친구들이 수십명씩 죽어갔다... 자살이라고? 아니다. 그것은 타살이다. 살인교육의 고통보다 죽음이 차라리 더 행복 했기에 선택한 안락사다. 벗이어 일어서자. 무기력하게 죽음으로 끌려가느니 떨쳐 일어서서 대항하자.
- 미 군정은 일제를 계승한 점령군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함에 비하여 소련군은 조선의 독립을 발표하고 건준 및 인공을 인정하고...
- 소련군은 미군과는 달리 직접 통치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한국인의 자치에 맡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 1989년에는 전체 학생들의 전반적인 민주 의지를 다지는 것을 투



쟁 목표로 삼았으면 한다.

둘째, 교사들의 의식화교육은 우리나라 未來社會의 모습을 부정적 색깔로 얼룩지게 할 위험 요소이기에 특히 경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초·중·고 학생들은 분명히 21세기를 이끌어 갈 未來의 주역들입니다. 미래의 모습은 이미 다양하게 未來學者들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플러(Alvin Toffler)는 선진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사회의 특징을 ‘脫大量化’(demassification)의 ‘第3의 물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sup>4)</sup> 그는 현대의 대표적 이데올로기인 資本主義와 마르크스主義가 모두 산업혁명과 더불어 발생한 ‘第2의 물결’의 產物이라고 하였습니다.(第1의 물결은 農業革命) 그리고 공통된 뿌리를 지닌 두 이데올로기의 對立의 시대가 ‘제3의 물결’의 도래와 함께 이미 끝나가고 있고, 이제는 생산된 富를 누가 얼마나 갖느냐와 관련되는 ‘所有의 革命’(evolution of having)이 아니라 삶의 質을 얼마나 높힐 수 있는가와 관련되는 ‘存在의 革命’(revolution of being)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나간 30여년간 급속한 工業化를 겨냥한 國家開發戰略을 수행하며 새로운 산업국가로 도약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2000年代의 미래사회의 특징을 高度産業 및 情報化社會, 平等化와 多樣化가 병행하는 社會, 國際化된 社會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3年間 자유화 이후의 급진좌경세력의 발호와 계속되어 온 勞使紛糾 등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로 말미암아, 도약과 좌절의 岐路 즉 간단하게 日本을 닮아 가느냐, 南美를 닮아가느냐의 분기점에서 이미 南美의 방향을 택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4) A Worldnet Interview with Alvin Toffler by Journalists and Other Members of the Audience in Bonn, Lisbon, Rome, Vienna and Hague, May20, 1986.

西歐의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60년대에 실험을 끝내고 소멸된, 그리고 이제는 共産圈국가에서조차 시대적 퇴물로 외면하는 左傾急進思想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우리사회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미래 사회를 담당할 오늘날의 학생들을 의식화 교사들에게 맡겨서, 국제화된 미래사회에 걸맞는 思想的인 民主市民이 아니라 自由民主主義體制를 적대시하고 金日成체제를 찬양하는 저개발국형 혁명투사로 만들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나타나는 이념적 혼란 양상과 함께 대두되는 대표적인 이념교육의 문제 두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종래의 학교여건속에서 오래전 부터 쌓여 온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본 글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sup>5)</sup>

첫째, 學習者 문제로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념 관련내용에 대하여 교과서 外로부터의 보충적 지식이 결여되었고 그것을 구사하는 능력도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다수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주변사태에 대하여 이념적 기준이나 知的 틀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일부 教科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그에 따른 이념·사상 관련 교과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부족을 뜻합니다.

둘째, 教授者 문제로서 적지 않은 수의 이념교육 담당 교사들은 (道德科·國民倫理科) 이념교육 내용 특히 공산주의와 급진좌경사상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자신이 없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學部 在學時의 專攻내용이

5) 우리나라 初·中·高 理念教育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필자의 靑少年 理念教育 (서울:培英社, 1987)과 앞에서 지적한 1987년의 理念教育關係官 연찬회의 발표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이념 교육과 거리가 있어, 충분한 知的 뒷받침이 없음을 吐露하는 경우입니다.

세째, 教授・學習過程上의 문제로서 이념관련 교과담당 교사들은 실제 수업현장에 시청각자료 등의 최신의 교수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념교육을 다루는 교과 수업은 情意的 領域을 다루는 교과로서의 특수한 지도방법이나 평가 방안이 구사되어야 하는데도 다른 主知教科와 별로 다른 특색없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探究式 指導方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週當1~2時間의 배당시간으로는 도저히 수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교사들의 합의된 의견입니다.

네째, 教育風土의 문제로서 이념교육 담당 교사들에 대한 편견을 지닌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념교육은 분명히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세계 공통의 현상이며, 외국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比重이 높은 이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현행 이념교육을 權威主義 時代의 산물로서 생각하는 오해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學父母의 사회비판적 言行과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오는 이념교육 자체에 대한 輕視가 이념교육적 기능수행에 역효과를 미치고 있는 교육 분위기의 문제입니다.

#### 4. 理念教育 問題에 대한 理念教育 對應方案

이념적 혼란기라고 생각되는 최근에 나타나는 이념교육적 문제들과 종전부터 있어왔던 이념교육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기 위한 對應方案은 여러 각도에서 탐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學校內 教育活動 全般을 통하여 모든 관리직 및 교과담당교사들이 추진하여야 할 대응 방안, 이념 관련 教科 즉 道德科·國民倫理科 등의 教科活動을 통하여 교과담당교사들이 추진하여야 할 대응 방안, 그리고 教科外 活動을 통하여 담당 교사들이 실행하여야 할 대응방안으로 3分하여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學校內 教育活動 全般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할 方案으로는—

첫째, 이념 문제에 대한 巨視的 眼目を 지니기 위하여 교육자 자신들도 노력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그것을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道德的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左右理念對決을 전제로 하는 이념교육으로 부터의 탈피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기나긴 數千年의 思想史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지금 관심 기울이는 左右理念對決문제는 매우 짧은 時間幅에 불과합니다. 이데올로기 時代는 200여년에 불과하고 더구나 左右간의 대결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된 것은 50여년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 동안의 左右間에 表출된 갈등문제는 産業革命 이후의 소위 ‘가지지 못한자’인 프롤레타리아계급과 ‘가진자’인 부르조아계급 간에 생산된 富의 획득과 관련된 ‘所有’(having)를 위한 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存在의 革命’(revolution of being)의 물결과 앞에서 지적한바 共產圈의 탈이념적 정책 전환 그리고 세계적 석학 갤브레이스(K.Galbraith)가 지적한바 東西 兩體制사

이의 이데올로기적 協力體制時代가 到來한다는 분석은<sup>6)</sup> 바로 공산주의(사회주의)와 민주주의(자본주의)간의 대결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세계적으로 소멸에 길로 들어서고 있는 急進左傾思想에서 입버릇처럼 지꺼리는 ‘투쟁’ ‘타도’ ‘분쇄’ ‘격멸’ ‘착취’ ‘반동’ 등의 원색적이며 전투적인 用語는 그 의미를 상실할 날이 머지않아 닥아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의 이념교육에서는 역사의 한 페이지인 20세기를 일시적으로 품미하고 소멸될 좌경이념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수천년의 역사를 장식했던 찬란한 人間의 思想과 知慧를, 또 正義, 自由, 平等등의 불멸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키 위하여 선구자들이 남긴 민주화 투쟁의 기나긴 역사를 광범위하게 학생들에게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理念을 분명히 定立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파악케 하는 것 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념교육이라고하면 敵對이데올로기 비판에만 열중하여 왔고, 그속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의 정립은 오히려 소홀리 다루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이념적 방향에 대하여 어느정도 합의에 도달한 이념교육목표는 前에도 한번 제시한바와 같이 ①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화 및 민주사회적 기능습득(自由民主主義), ②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의 우월성 인식 및 복지사회구현의 신념화(民主資本主義 혹은 民福主義), ③전통사상 및 민족문화와 민족사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영광된 민족의 미래에 대한 확신(民族主義), ④대한민국의 정통성 인식과 민주적 평화통일

---

6)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인 겔브레이스 교수의 1988년 9월8일 초청강연회 발표자료 참조. 제목은 ‘世界紛糾의 未來’ 강연장소는 세종문화회관 이었습니다.

관 확립(平和統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이념은 自由民主主義, 民主資本主義(民福主義), 民族主義, 平和統一 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정치·경제·사회적 危機 狀況 극복을 위하여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구현을 위한 民主的 生活樣式으로서, 그중 타협과 질서등의 가치관을 생활화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또 先進資本主義國家로의 도약을 위하여 필수적인 民主資本主義의 실현을 위해서는, 베버(M.Weber)가 강조했던 創意, 儉素, 勤勉, 正直, 進取性, 天職, 意識 등 자본주의 윤리의식의 신장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더 이상적인 경제윤리를 지향한다면 杜維明(Tu, Wei-ming)이 서양의 청도교 윤리에다 동양의 유교윤리를 결합시킨 新儒教倫理에서 강조하는 집단주의, 구성원 간의 조화, 개개인의 수양과 기강, 조직체의 화합을 또한 이념교육 목표로서 중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제, 우리와 적대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의 이론, 그들의 혁명전략, 체제 그리고 급진좌경사상을 비판할 수 있는 확실한 觀點을 지녀야하고 또 학생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實際는 나쁘지만 理論은 좋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산주의의 이론을 막연하게 생각하여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잘 살자는 것인데 무엇이 나쁘냐고 순진하게 묻는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1848년에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선언’에서 기본 논리와 행동지침을 결정한 이래 暴力革命論, 史的 唯物論, 資本主義崩壞論, 階級鬭爭論, 國家消滅論 등의 이론상의 핵심적 요소를 발전시켜 왔으나 이제는 그것 자체들의 심각한 이론상의 결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공산주

---

7) 우리의 이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필자가 2年前 理念教育關係官 연찬회 (全北教育研修院, 87.4.22)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戰略戰術은 1919년에 레닌이 제3인터내셔널(Comintern)을 창립하면서 러시아 혁명당시 사용하였던 볼셰비키의 전략전술을 공산당의 행동강령으로 체계화 한 것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의 政治장악에 여러 유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위장술, 선전술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론과 전략전술을 동시에 파악시켜 포괄적인 시야를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sup>8)</sup>

공산주의의 體制上的 문제점은 공산주의의 이론상의 문제점보다 더욱 분명하게 부각됩니다. 그 實相은 앞에서 지적한바 소련, 동구권, 중국이 취하는 資本主義로의 回歸현상속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공산권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갖게되는 인상, 즉 피폐한 경제와 구조적인 무기력, 만성적인 부패 및 일상생활에서의 진반적인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제시 할수는 없지만 共產社會의 實相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최근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유행하는 하나의 농담을 들려주면 좋을것입니다. 한 사람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물으면,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가는 가장 길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대답하는 것 입니다.

급진좌경사상에 대해서는 同사상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주로 共產圈 밖에 마르크스주의의 재 해석을 근거로 하여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공산주의의 현대적 양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입니다. 그중 新마르크스主義와 新左運動은 서구사회의 문제점과 소련공산주의체제가 마르크스의 관점과는 달리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비판했고, 解放神學과 從

8)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내용은 현재 서울大學校 '국민윤리'一種圖書開發編纂委員會에서 개발중이고 현재 필자가 그 개발책임을 맡고 있는 새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 (1990년 1학기 부터 사용)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제시됩니다.

屬理論은 中南美의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낙후성을 지적하고 선진강대국들의 억압과 착취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高度産業社會가 안고있는 병폐를 분석하고 비판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녔으나 그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성향 때문에 美國, 西歐, 日本등의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에 다양한 저항운동을 벌리다가 1970년대 부터 거의 소멸단계에 들어갔음을 강조하여야 할 것임이다.

우리나라의 좌경사상인 民衆 이데올로기 혹은 民衆民主主義는 1970년대 후반 부터 외국의 급진좌경사상의 유입과 함께 형성되기 시작하여 反帝·反파쇼·反買辦 주장하고 있고, 좌경세력들은 1980년대 末에 이르러 민주화 운동에 편승하여 그들의 목표를 노골적으로 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본주의체제를 오로지 압박과 피압박,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간의 갈등·대립관계로만 보고 ‘매판독점자본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계급을 반민족적, 반민주적 세력으로 규정한 후 그들을 타도하고 노동자·농민·도시빈민등의 소위 基層民衆만이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노선을 같이하여 ‘남조선을 강점하는 美帝’를 축출하고 ‘미제의 예속정권’인 현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도, 그들은 때로는 열렬한 民主鬪士, 民族主義者, 平和愛好家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겉으로 나타내는 그들의 말보다는 그들의 저의가 무엇이고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해답을 찾을 것을 학생들에게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네째, 이념교육의 경우에는 學校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으므로 學校는 앞에서 상세히 다룬 우리의 理念과 敵對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내용을 學父母들에게도 주지시키고 특히 左傾勢力의 활동 양상을 상세



히 전달하므로써, 학생들에 대한 가정 지도를 비롯한 제반 協助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다음으로, 道德科·國民倫理科 등의 理念 關聯 教科活動과 관련지어 추진 하여야 할 方案으로는－.

첫째, 앞에서 지적한바 모든 教育活動에서 다루는 우리 理念과 적대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더 體系的인 知的 틀을 확립시켜주고, 특히 수업지도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이념교육에서 추구하는 價値觀을 내면화, 생활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혀주고 知的 機能 특히 政策的 思考 機能 (Policy thinking skills)이나 批判的 思考 機能 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 겠습니다.

이념교육에서는 그 기대하는 成果로서 價値觀, 態度 規範 등으로 표시되는 많은 情意的 教育目標를 지니고 있고, 道德科·國民倫理科 等の 교과 수업의 한계성은 그것이 얼마나 그와 같은 정의적 요소를 內面化시키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例를 들어 自由民主主義의 이데올로기에서 강조하는 協同, 妥協, 秩序 등의 가치관을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감정적인 對決과 無秩序가 난무하여 사회를 혼란의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또 같은 논리로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활용하는 순간에 思考하는 能力이 결여되는 경우는 무엇이까요? 自由民主主義 體制 운영에 필수적인 政權機能(regime functioning)과 政治參與의 質에 영향을 미치는 政策的 思考 能力에서 강조는 道德的 思考能力, 因果思考能力, 社會中心主義, 想像的 思考能力은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수업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지식을 듣는것 만으로는 가치관의 내면화도 지적 기능의 신장도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학생들이 토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가치 판단을 내리고 여러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열심히 確言(affirming)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道德科·國民倫理科 등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표방하는 理念과 體制를 수호하기 위한 활발한 理念運動을 이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국어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키자는 것이 아니며 左傾이데올로기 教育 및 意識化教育을 시킬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判明되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類似한 현상은 국어과 外의 거의 모든 다른 教科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教科別 意識化教師집단들의 모임이 결성되고 있으며 도덕과와 국민윤리과도 例外는 아닙니다. 그럴 경우 어떤 교과든 경우나 문제성은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념문제를 주로 다루는 도덕과·국민윤리과 수업에서 그러한 意識化된 교사모임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의식화 활동을 벌이는 교사들은 문책하고 징계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것은 바람직한 解除策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教師와 學生간의 끊임 없는 相互作用을 벌이는 教授·學習과정을 전부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그 보다는 건전하고 조용한 多數의 도덕·국민윤리교사들이 우리의 指導理念과 그것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정신을 충분히 살려나가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 교실 및 학교 전체의 교육 풍토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정착시키는것 입니다.

평교사들을 中心으로 순수한 연구 모임을 조직하여 國家와 民族의 장래

를 걱정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아끼며, 학습 효과를 提高시킬 수 있는 授業 戰略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주 교환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뜻있는 教師들이 의식화교사들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 관점이나 반대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御用的인 體制守護勢力으로 물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식화 교사들의 正體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노선을 가고 있는 左傾暴力勢力으로 점차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 도덕과·국민윤리와 교실을 일부 의식화 교사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反體制的 急進左傾論理의 注入 및 세뇌 장소로 허용해서는 안될 때가 온 것입니다.

끝으로, 教科外活動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할 이념교육 方案으로는—

첫째, 特別活動指導나 生活指導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理念的 意識化教育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우려하듯이 우리나라 中·高校 教育現場에는 全人教育, 人間教育, 市民教育 등을 위한 교육적 분위기는 찾아내기 어렵고, 상급학교 進學을 위한 성적 경쟁의 살벌한 분위기 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별활동지도나 생활지도도 內實있는 교육 활동을 벌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現時點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학교 풍토를 깨고 학교를 그 本來의 목표를 구현하는 장소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理念에서 강조하는 自由民主主義의 제1의 가치인 人權尊重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교과서에서 읽기는 했지만·生活經驗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와 견해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敵이라 생각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民主資本主義의 기본 가치인 儉素, 勤勉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奢侈, 享樂의 풍조는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고, 노사분규로 밤낮을 지새우는 동안 生産現場에서는 근면과

협동의 풍조가 살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누적되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社會的 危機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현장에서 어느정도의 民主的 生活經驗이 教科外 活動에서 가능할지 일률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적 행동이나 경제 윤리의식은 경험과 훈련을 거쳐 習慣化 되지 못할 경우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제한된 시간이더라도 學級會, 學生會, 戰跡地踏查, 野營訓練등을 통하여 우리理念의 의식화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여될 경우 우리나라의 이념교육은 空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둘째, 學校 內外에서의 규칙적인 運動이나, 가능하다면 武道(주로 跆拳道와 誘道)修練을 통하여 강인한 體力과 精神力을 갖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념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굳건한 信念體系와 그에 따른 正體性 確立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집단적으로는 집단의 성원으로 적극 참여하여 소속된 집단의 統合力을 높이고 그에 따른 集團에너지를 증진시키는 것 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이념과 체제를 위협하는 적대 세력에 맞서서 이를 능히 압도할 수 있는 力量強化를 위한 것 입니다. 이럴 경우 이념적 대립은 단순히 知的 能力의 대결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어떤 때는 개인별 體力과 勇氣 그리고 그것이 합쳐진 集團可動力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북한에서 우리의 교육을 항상 '글뉘주' 양성교육이라고 멸시하는 의도를 짐작해 보는것도 의미가 있을 것 입니다. 평소에 상급학교 진학 준비를 위한 주입식 교육에만 매달려 온 학생들에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理念을 일관성 있게 行動化·實踐化할 수 있는 신념과 의지가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학교와 男子 중·고교에 精神教育센터 겸 武道場을 설치하여 한 주일에 3회 정도는 跆拳道나 柔道 중 한 종목을 수련케 하면서 동시에 瞑想의 시간도 갖게 할 것을 제안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의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넓은 의미의 人格 陶冶를 위한 人間 教育과 현행 理念教育의 취약부분인 實踐化의 국면이 많이 補完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

## 北韓의 統一政策과 우리의 對應方向

---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제 1 연구관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종합청사 405호 ☎ 720-2141, 2425

간행책임 : 보좌관 사 순 문

인쇄소 : 문 성 경 인 (주)

---

〈非賣品〉

